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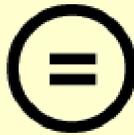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단독정부
수립과정 보도태도 연구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진경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단독정부
수립과정 보도태도 연구

지도교수 강남준

이 논문을 김진경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김진경

김진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_____ 강명구 (인)

부 위 원 장 _____ 김영희 (인)

위 원 _____ 강남준 (인)

국문초록

일제 말 폐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해방 후 각각 두 신문출신들이 주축이 돼 발행됐다. 두 신문 모두 애국적 전통 안에 있었으나 발행주체의 성격은 달랐다. <동아일보>의 발행주체는 우익진영의 구심점이었으나 <조선일보>는 다양한 세력이 모인 형국이어서 특정세력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흔히 발행주체의 성격은 보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정치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발행주체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의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두 신문이 어떻게 다르게 언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했다.

연구 결과, 두 신문은 미소공위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미소공위가 서울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국내 통신을 통해 받아 게재함으로써 취재의 어려움 속에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나타냈다.

두 신문은 미소공위 개최 전후로 미소공위 기사를 적게 게재했으나 미소공위가 순조롭게 진행돼 타결가능성이 높아지자 활발하게 보도했다. 두 신문 모두 독자적인 취재를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미소가 공방을 벌이면서 성명 발표가 많아지자 <동아일보>는 발표기사 비중을 늘렸으나 <조선일보>는 취재기사를 꾸준히 더 많이 실었다. <동아일보>는 우익진영 내 미소공위 반대파 때문에 <조선일보>보다 공위 기사를 적게 보도했으나 우익진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보다 많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우익진영 뿐 아니라 좌익진영이나 중간파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동아일보>는 미소공위 전개과정에서 소련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하기도 했으나 소련이 우익진영을 공격하자 다시 태도를 바꿔 비난하기 시작했다. 좌익진영이나 중간파에 대해서는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미소공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소련이나 좌우익진영, 중간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미소갈등으로 미소공위가 파국의 조짐을 나타내면서 <동아일보>는 미국지지 입장을 노골화했고 <조선일보>는 형식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느라 균형을 잃어버렸다.

<동아일보>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고 <조선일보>는 미국뿐 아니라 소련의 입장도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노력했다. <동아일

보>는 창간사에서 주창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이를 위한 여론형성에 애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불편부당의 사시를 실천하면서 정보제공이라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

<동아일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기사날조를 통한 ‘왜곡’보도를 한 적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우익진영에 경도돼 정파성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다양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어느 정도 정파성에서 벗어났지만 여론을 이끌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주요어: 보도태도, 언론, 민주주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파성, 정부수립, 미소공동위원회

학번 : 2010-20142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문헌연구	5
1. 미군정기 언론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5
2. 미군정기 언론매체 상황	6
3. 언론의 역할과 발행주체의 성격	9
1)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정론지	9
2) 두 신문의 발행주체 성격과 당시 언론에 대한 인식	11
4. 미군정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정부 수립과정	15
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활동	15
2) 국내세력의 움직임	1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8
1. 연구 문제	18
2. 분석대상	19
3. 분석대상 시기 구분	20
4. 분석유목의 정의와 측정	21
5. 분석 절차	22
제4장 양적 분석 결과	23
1) 신문지면 구성상의 기사분석	23
(1) 기사 건수와 크기 분석	23
(2) 기사의 성격, 유형분석	24
(3) 기사 게재의 계기 분석	25
(4) 통신기사 분석	26
(5) 의견 기사 분석	27
2) 취재 및 발표기사 내용분석	28
(1) 취재원 분석	28
(2) 발표주체 분석	32

제5장 질적 분석 결과	36
1. 미소공동위원회 취재	36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36
(1) 공위 재개 전	36
(2) 공위 재개 후	38
2) 중기-협력과 갈등	41
(1) 미소협력 속 소련대표단에 대한 태도	41
(2) 각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	43
(3) 평양회의	44
3) 후기-미소공위 파국	46
(1) 재개된 서울회의	46
(2) 성명전	47
(3) 미소공위 휴회와 철수	55
2. 각 정치세력 보도	57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57
(1) 확고부동한 이승만파, 갈등하는 우익진영	57
(2) 반탁투위 미소공위 불참 결의	60
(3) 한민당의 공위 참가	62
(4) 공위 재개 반기는 좌익 및 중간파	64
2) 중기-협력과 갈등	66
(1) 미소협력 속에서의 우익진영	66
(2) 공위성공 가능성 속에서의 좌익 및 중간파	68
(3) 각 세력의 미소공위 협의신청과 답신안	71
3) 후기-미소공위 파국	73
3. 해외통신과 의견보도	76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76
(1) 공위 재개 전	76
(2) 공위 재개 후	78
2) 중기-협력과 갈등	79
3) 후기-미소공위 파국	80
제6장 결론	83
1. 요약	83

2. 논의 및 결론	88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7

표 목차

<표 1> 설의식이 분류한 신문의 3가지 기능	12
<표 2> 좌우익 및 중간파의 미소공위 참가에 대한 입장	18
<표 3> 신문별 분석대상 기사 건수	19
<표 4> 자체 기사와 통신 기사 건수	20
<표 5> 기사 건수와 크기 비교	24
<표 6> 기사 성격과 유형 비교	25
<표 7> 기사 게재의 계기 분석	26
<표 8> 통신 기사 출처 비교	27
<표 9> 의견기사 유형별 건수 비교	28
<표 10> 취재원 빈도 상위 10위 분석	29
<표 11> 취재원 상위 10위 중요도 분석	31
<표 12> 발표주체 빈도 상위 10위 분석	33
<표 13> 발표주체 상위 10위 중요도 분석	35
<표 14> 좌우익 및 중간파의 미소공위 대책협의체와 답신안 개요.....	72

제1장 서론

해방 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여 시작된 미군정기 언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파성에 매몰돼 민주주의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해방 직후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은 각 정치세력의 선전도구로 기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나중에는 군정 정책에 따라 언론사를 육성하거나 도태시켰지만 초기에는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천명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언론사가 난립했다. 특히 해방 직후 좌익신문은 언론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데올로기 선전과 좌익의 영향력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해방 후 복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정파적 목적을 위해 각 정치세력이 쏟아낸 정당기관지¹⁾와 같은 성격을 가졌을 것이란 의심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 사장 고하 송진우가 한민당 수석총무를 겸하고 있어 <동아일보>는 한민당 기관지로 간주됐고, <조선일보> 사장 계초 방응모는 한독당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김구와 한독당의 기관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두 신문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서 이들 민간신문이 창간이후 제한적이지만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할 수 있는 기관지²⁾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방 후 복간에도 두 신문 출신들이 주축이 됐다.³⁾ 미군정기 출입처에서 발표하는 담화문 한 장에도 좌익신문과 우익신문이 아전인수격으로 상이하게 보도했다는 지적도 있지만(문계준, 1986, 65쪽) 두 신문이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거나 정도(正道)에 크게 벗어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복간 후 <동아일보> 주간이었던 설의식은 한민당이 <동아일보>를 한민당 기관지로 삼으려하자 문제를 제기해 한민당이 따로 당보(黨報)를 만들도록 했다. 신문논조와 관련해 한민당과 <동아일보>가 마찰을 빚자 한민당 수석총무이자 <동아일보> 사장인 송진우는 “정당은 때가 오면 흠어지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지만 신문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고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다(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 469쪽).

- 1) 최준(1966)은 당시 언론계에 투신한 신문경영자들의 유형을 “정당으로부터 직접 재정적인 지원아래 신문의 창간을 서두른 무리, 사재를 투자하였으나 처음부터 어느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후일의 개인적인 영달을 꿈 꾸는 무리, 신문사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알고 투자한 무리”로 나눴다(52쪽).
- 2) 광복군 출신으로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은 해방 후 고려대에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제시대,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를 한국의 정부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권오기, 1985, 374쪽). 고려대와 동아일보의 소유주가 같았다.
- 3) 최준(1966)은 새로 발간된 신문에서 활동하게 된 기자들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정식당원 내지 비밀당원의 무리,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어느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혔거나 아니면 시류에 발맞추는 것으로서 오피니언 리더로 자처한 무리, 정당 측의 매수에 순종한 무리” 등으로 구분했다(52쪽). ; 그러나 송건호(1984)는 정당·사회단체에 매수되어 움직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했다(559쪽).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는 한독당 재정부장 시절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이규홍이 한독당에 불리한 기사의 처리와 관련해 방응모에게 문의하자 “왜 내게 묻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독당은 내 개인입장이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다.”라고 말했다(계초전기간행회, 1980, 193쪽). 이들 신문은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적 야심가들이 해방 후 갑자기 낸 신문과는 다르다(남시욱, 2013, 330쪽)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왜곡’보도를 했다는 대표적인 예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발표 전 외신 보도가 많이 지적된다(정용욱, 2003a, 53-68쪽). 그러나 이 보도는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기 때문에 ‘왜곡’보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4대국이 직접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에 반해 소련은 우선 미국과 소련의 점령사령관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남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 임시정부 참여아래 4대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도록 하자고 제안해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발표에 앞서 국내 신문에 워싱턴 발(發)로 ‘소련은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제의하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가 실렸다.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있는 쪽은 미국인데 정반대의 내용이 게재된 것이다. 이 보도는 소련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켰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제시기부터 외신을 싣고 있었고 추측성 기사인 이 기사도 외신을 번역해 제공하는 합동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1945년 12월 25일 워싱턴발로 제공된 이 기사를 석간인 <동아일보>는 26일 오후 제작 배포한 ‘27일자’에 실었고, 조간인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7일 게재했다. 석간이 신문 날짜를 하루 앞당겨 표기하는 것은 일제시기에 시작된 관행이었다.

이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반공(反共)·반소(反蘇)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왜곡’ 보도를 한 신문으로 지목돼 왔다⁴⁾. 그러나 이 기사가 ‘왜곡’기사라는 주장들은 외신 게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곡’기사의 근거는 보통 외신 기사는 ‘발신지, 보도일자, 발신사, 수신사’란 크레딧⁵⁾을 밝히는 것이 관행인데, 합동통신이 발신사를 명기하지 못한 것은 이 기사를 워싱턴의 통신사로부터 수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용욱, 2003a, 58쪽). 그러나 합동통신의 외신제휴사는 AP통신이었고 조선통신의 제휴사는 UP통신이었기 때문에 합동통신이 UP통신 기사를 게재하려고 했을 경우 발신사를 밝히지 않고 생략했을 것 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어떤 통신사이건 제휴사가 아닌 통신사 기사의 경우 발신사를 명기해 서비스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주장에서는 이 기사의 출처

4) 정용욱(2003b, 155-171쪽)은 동아일보가 왜곡보도로써 반탁운동의 열기를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김기협(2011, 1946-1-20)은 동아일보가 왜곡보도로 반공반소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5) ‘크레딧’은 신문기사에서 첫 행의 괄호 안에 밝혀놓은 그 뉴스의 제공 통신사의 이름 또는 그 기사원고의 송고특파원의 이름을 말한다.

처 중의 하나로 <태평양성조기>를 들고 있고, <태평양성조기>에는 UP통신 기자가 썼다고 나와 있다. <동아일보> 기사 등은 한국어로 번역돼 있을 뿐 <태평양성조기>와 같다. 따라서 <태평양성조기>대로 발신사가 UP통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아일보> 등과 합동통신이 이같이 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들 주장은 또 합동통신이 이 기사를 외신 기사로 위장했으나 같은 날짜 <동아일보>와 <태평양성조기>에 실린 것으로 미루어, 사실은 도쿄의 <태평양성조기> 편집실이나 서울의 합동통신, 또는 <동아일보>가 미리 짜고 같은 날 동시에 보도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사를 내보낼 능력을 갖춘 조직은 도쿄의 미육군 극동군사령부와 서울의 주한 미군사령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적으로 관련됐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발신지를 워싱턴으로 표시했지만 그 취재원은 일본이 거의 틀림없다는 것이다(정용욱, 64-65쪽).

그러나 이들 주장은 미국 내 신문이나 중국 신문에 똑같은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헤럴드> 1945년 12월 26일자 「May Grant Korea Freedom」이나 <로디뉴스-센티넬>의 같은 날짜 「Korea Independence Hinted At Parley」도 기사의 발신사를 UP로 해서 실고 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워싱턴타임스헤럴드>는 발신사만을 밝혔지만 지방에서 발행되는 <로디뉴스-센티넬>은 발신사 뿐 아니라 ‘워싱턴·12월 25일’이라고 명기했다. 뒷부분이 생략된 후자의 UP기사 원문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⁶⁾.

중국신문 <신보(申報)>도 1945년 12월 28일자에 중국어로 관련 내용을 번역해 게재했는데(석원화 등, 2011), 뒷부분은 <동아일보> 등에 실린 내용보다도 상세해 합동통신이 번역하면서 다소 생략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과 소련 한국문제 상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크레디트를 ‘합중사 워싱턴 25일 발 통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신문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신문들이 UP통신 기사를 확인 없이 게재한 것이 오보를 불러온 것이다. 후발통신사인 UP통신은 AP통신을 따라잡기 위해 폭로 기사에 집중했고, 미국 신문의 편집자들 사이에 신용이 낮았다고 한다(이문호, 2012, 312-314쪽).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지들이 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달리 새로 창간된 신문들 중에는 특정 세력의 기관지임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통제하려 시도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보도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사누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발표 하루 전부터 AP와 UP 등 외신들은 관련 뉴스를 쏟아냈다. 합동통신이 관측 기사부터 외신을 번역해 서비스한데 반해 조선통신은 좌익정당들의 압력으로 ‘27일 발’ 신탁통치결정 기사를 국내 신문에 제공하지 않았다. 국내 신문에서 ‘27일

6) <로디뉴스-센티넬>에 게재된 UP기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0일 검색.
<http://news.google.com/newspapers?nid=2245&dat=19451226&id=3MYzAAAAIBAJ&sjid=k-4HAAAAIBAJ&pg=5990,5879803>

AP발 합동통신' 기사는 눈에 띄는데 반해 '27일 UP발 조선통신' 출처의 기사는 발견할 수 없는 이유다. 조선통신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빨리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경으로 낙인찍혔다고 한다(정용욱, 2003a, 56쪽)⁷⁾.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기관지를 자처한 <조선인민보>의 사장 홍증식은 '중대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합동통신에 항의하기도 했다(합동통신사사편집위원회, 1975, 11-12쪽).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판단해 소련에 대한 감정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특정 세력을 대변한다고 내세우지도 않았고, 일제시기부터 언론의 역할과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신문은 각 정치세력의 부침과 정국의 흐름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다. <동아일보>는 좌우합작을 비판했고 남북협상을 반대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좌우합작에 열성을 보였고 남북협상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이들 신문의 보도태도의 변화와 논조의 차이를 특정세력의 대변지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문과 특정 정치세력의 관계가 밀접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론지적 성격만으로 보도태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방이후 복간한 두 신문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이 연구는 두 신문이 정부 수립과정에서 어떤 보도태도를 취했는지 밝혀 보고자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미국이 미소협조에서 미소대결 노선으로 한반도정책을 전환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⁸⁾가 실패하고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을 말한다.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안은 소련 측의 거부로 북한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 연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시작으로 자리매김 된 제2차 미소공위 활동에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각 정치세력이 정권투쟁 차원에서 내세웠던 독립국가 건설노선이 이 기간에 정리되는데 이에 대한 두 신문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두 신문이 일제시기부터 천명해온 사시와 전통이 보도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국가 건설노력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두 신문의 정세판단에 있어서의 통찰력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두 신문이 남북·좌우의 통일이라는 비현실적 이상론 대신, 남한만이라도 즉시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현실

7) 계훈모 편 『한국언론연표:1945~1950』(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44쪽에서 재인용.

8) 이하 미소공동위원회를 '미소공위' 또는 '공위'라고 씀.

론이 힘을 얻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내란의 위기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2차 미소공위 활동, 다시 말하면 미소공위 제2차 회기의 시작부터 결렬까지를 연구 대상기간으로 정했다.

미소공위 2차회기는 1947년 5월 2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1차 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 중 어느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대상문제에 부딪혔다. 모스크바협정에는 미소공위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해 임시정부를 만들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우익 정당·사회단체의 참가를 철저히 막으려고 했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하려고 했다. 2차 회기는 순조로운 진행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평양에서의 회담 후 양측이 성명전을 벌이다 결국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했다. 미소공위가 사실상 결렬된 9월 17일,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가져갔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던 미소공위는 10월말 소련대표단이 평양으로 돌아감으로써 끝이 났다. 유엔총회는 11월 14일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는 두 신문이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했던 언론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의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서 오늘날의 성향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언론사 연구의 빈약함을 보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문헌연구

1. 미군정기 언론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

미군정기 언론⁹⁾에 대한 연구는 미군정의 언론정책이나 신문 방송의 성격변화, 언론매체 이용 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 언론매체, 그 중에서도 신문의 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논조와 보도태도를 밝힌 것으로 나뉜다. 미군정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시기에 한국사회의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인데 언론 역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는 신문만이 살아남게 된다.

1980년대 중후반 정치학 외교학 사회학 역사학계에서 미군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론에 대한 연구도 적잖게 이뤄졌다. 언론학계에서는 미군정의 언론정책

9) 이 논문에서 언론은 신문이란 특정미디어뿐 아니라 미디어가 담아내는 뉴스 및 뉴스활동 전반을 통칭한다. 필요에 따라 신문이나 미디어란 용어도 사용했다.

을 다룬 정대철(1989), 정진석(1990), 김복수(1991)의 연구와 미 점령군의 선전활동에 주목한 차재영(1994)의 연구가 나왔고 각 신문의 사실 내용을 분석해 신문의 논조를 규명하는 일련의 석사논문이 쏟아졌다. 정대철, 정진석, 김복수는 미군정의 정책과 언론의 활동 사이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을 살폈다.

2000년대 들어 김민환(2001)은 사실을 중심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했고, 김영희(2009)는 매체수용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다. 김동선(2013)은 <서울신문>이라는 특정 신문의 '중간파'적 성격을 규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영희(2000)의 연구는 전체 신문지면의 보도태도와 성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체 지면 중 사실만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조사한 박계옥(1974)의 연구가 있지만 사실뿐 아니라 기사 전체의 내용을 계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경우는 김영희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영희의 연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보도에 국한했다. 김영희는 극우 또는 우익의 <동아일보>, 우익 또는 중도우익의 <조선일보>, 진보적 중도의 <자유신문>, 진보적 중도 또는 중도좌익의 <중앙신문> 등 4개 신문을 대상으로 <동아일보>가 복간된 1945년 12월부터 1946년 1월까지 2개월간 보도경향을 살폈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온 보도와 논평의 왜곡, 과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목했다.

미군정기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박계옥의 계량적 연구는 <동아일보>와 <자유신문>의 보도내용 중 사실만을 조사했다. 박계옥은 <동아일보>를 보수신문, <자유신문>을 진보신문이라고 규정하고 <동아일보>가 복간된 1945년 12월부터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두 신문에 실린 사실을 닷새 간격으로 추출해 주제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두 신문의 사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치문제, 특히 독립국가 건설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언론사와 언론인 등이 어떻게 반응하고 활동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 신문 사실 연구는 구체적으로 신문기사의 논조를 밝혔다. 그러나 신문 사실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분석은 미군정이란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각 신문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는데 유용하지만 체계적인 보도경향과 보도태도를 그려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김영희와 박계옥이 양적으로 기사내용을 분석했지만 김영희의 연구는 연구기간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보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박계옥은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간과 소재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군정기 일정기간 정치상황 변화와 신문의 보도태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시 언론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도움이 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미군정기 언론매체 상황

미군정은 점령초기 제한 없는 언론자유를 천명했으나 1945년 말과 1946년 초 모스

크바 삼상회의 결정 과문 이후 정치적 혼란과 좌우익의 대립, 언론에 대한 테러가 극심해지자 이에 대한 방침을 수정하기 시작했다(정진석, 1983, 181-182쪽). 1946년 5월 4일에는 군정법령 72호를 공포해 유언비어의 유포나 포스터·삐라 등의 방법으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특히 정당끼리 자파의 주장을 내세우고 반대파에 대해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벽(壁)신문’을 규제하자는 목적도 있었으나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29일 군정법령 88호를 공포해 언론매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었다. 1945년 10월 30일 법령 19호 공포에 따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지 8개월만이였다. 용지부족을 내세웠으나 출판물 발행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47년에 들어와서도 법적 행정적 통제가 강화돼 3월 26일 공보부령 제1호로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를 당분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정법령 88호의 허가제를 더욱 경직되게 운영했다. 신규허가 정지는 또다시 용지부족이 이유였으나 해방 후 난립한 신문 잡지 등을 일제 정비하는 강경조치가 됐다. 1947년 3월 27일에는 경찰부장 조병옥이 서울시내 신문·통신 사장과 편집책임자를 초청해 ‘기사 검열제도¹⁰⁾는 이미 없어졌으나 군정 방해 법령에 저촉하는 기사가 발견될 때마다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언론자유는 존중하나 비밀사항에 속하거나 형사문제가 수사상 미숙한 사건에 대해서는 게재 보류를 요망한다’는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5월 21일에는 공보부장 이철원이 담화를 발표해 “21일 개최되는 미소공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이며 정당 단체의 담화라 할지라도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소공위가 재개된 직후인 26일에는 수도권구경찰청장 장택상이 기자회견에서 불온출판물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미소공위에 대한 삐라는 취제한다고 언명했다(동아일보 5월 27일자). 이 같은 법령이나 담화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하나 건국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용지부족을 이유로 무책임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신문이나 새로 발행을 원하는 신문의 발행을 불허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김복수, 2006, 37쪽).

1947년 들어서도 신문들은 인쇄시설 미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타블로이드판 2면을 발행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주요 신문들만 1주일에 6번 발행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되지 못했다. 신문지면은 작았지만 누구나 신문 한 장을 사서 들면 앞 뒷면 기사는 물론 광고까지 모조리 읽었다(문계준, 1986, 64쪽).

10) 1947년 5월 현재 신문에 대한 검열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동아일보> 6월 10일자 삭제기사가 눈에 띄나 이는 검열조치로 삭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 기사내용을 확인하거나 추가 취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6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공위 공보 제3호에서 최후적 합의에 도달해 조선민주주의정당 급 사회단체에 배포될 질문서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돼 제 11호 공동 성명과 함께 공표될 것이라며 “이제 신빙할 만한 예의 언명에 의하면 그 질문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10일자 삭제기사에서 이 중 ‘교육문화부분’이 실수로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치상황에 따라 신문발행과 신문성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공산당 정관사 위폐 사건이 적발되면서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가 1946년 5월 18일 폐간된 뒤 남로당이 11월 창당됐으나 기관지를 갖지 못했다. 1947년 들어 정기간행물 신규 허가가 금지된 상태에서 남로당은 창간된 지 오래지 않은 <대중신보>의 영업권을 인수해 제호를 바꾸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로당기관지 <노력인민>은 미소공위가 재개된 지 한 달 뒤인 6월 19일자로 창간됐다. 미소공위가 재개된 뒤에도 정치상황에 따라 <조선일보> <자유신문> <서울신문> <조선중앙일보>가 논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문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¹¹⁾ 미군정은 1947년 7월 31일 현재 <조선일보>를 우익으로 평가했으나 9월 26일에는 중립으로 분류했다. <자유신문>과 <서울신문>은 좌익에서 중립으로 논조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중앙일보>는 중립에서 좌익으로 평가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미군당국의 기준이므로 절대적 평가라고는 할 수는 없다(김영희, 2009, 158-161쪽).

발행부수는 <경향신문>(중립)이 7월 31일 현재 61,500부로 1위였으며, <서울신문>(좌익)이 52,000부로 그 뒤를 이었고, <동아일보>(우익)가 43,000부로 3위였다. <동아일보>는 우익신문 중에서는 부수가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우익)는 2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신문 18개 중 8위였다. 두 달 뒤인 9월 26일 조사에서도 <경향신문>(중립)이 61,300부로 부동의 1위였으며, <서울신문>(중립)이 52,000부로 역시 그 뒤를 이었고, <동아일보>(우익)가 43,000부 3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중립)는 35,000부로 발행부수가 크게 늘었고, 조사대상 신문 18개중 5위로 뛰어오르며 <독립신보>(좌익)와 <한성일보>(우익)를 제쳤다. <조선일보>보다 발행부수가 많았던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은 8월 11일 공산주의 불법화 이후 지하로 잠복했다¹²⁾. 이 기간 중립에서 좌익으로 성향이 바뀐 <조선중앙일보>는 발행부수가 두 번 다 2,000부로 조사됐으나 다음해 1월 16일 조사에서는 15,000부(좌익)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점령초기 언론자유를 중시했던 미군정은 점차 방침을 바꾸어 언론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47년 들어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 해 하반기 까지 중도 내지 좌익신문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미소공위의 결렬이 예상되면서 좌익에 대한 탄압으로 일부 신문은 살아남기 위해 논조를 바꾸었고, <조선일보>는 오히려 우익에서 중립으로 논조를 바꾸면서 발행부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11) 이 결과는 체계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USAFIK)와 군정청(USAMGIK)이 필요에 따라 조사한 1946년 5월 51일부터 1948년 8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김영희 (2009,160쪽)가 정리한 '주요 신문의 발행부수 추이와 정치적 성향'을 참고로 했다. 1947년 7월과 9월, 1948년 1월 조사는 모두 군정청 자료다.

12) <노력인민>은 1947년 8월 17일자 56호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나 57호는 8일후인 8월 25일자로 나왔다. 그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발행됐다. ; 매트레이(Matray,1985,152·349쪽)는 하지가 8월 25일 모든 좌익신문들의 폐간을 허락해 줄 것을 전쟁성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3. 언론의 역할과 발행주체의 성격

1)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정론지

언론은 사회를 반영한다고 인식된다. 언론이 사회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이 속성 때문이며 언론의 사회적 역할도 이 속성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언론이 반영하는 것이 사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이다. 리프먼(Lippmann, 1922)은 미디어¹³⁾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에서 통치하고 있는 힘들이며, 그런 힘들을 자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이론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는 제도들이 미디어를 위해 기록해놓은 것만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에 언론학자들은 언론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그 안에서 언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언론과 사회의 관계를 조명한 이론 중 가장 유명한 책은 미국학자 세 명이 쓴 <언론의 4이론>일 것이다. 이 책은 거시적으로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에서 언론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냉전시기 출간된 이 책의 이론은 미국의 언론자유모델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McQuail, 2005). 이에 반해 공산체제아래 언론의 자유란 그들이 오로지 진리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말할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박용상, 2013, 17-18쪽). 박용상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산체제에서는 사회주의의 적인 자본주의를 위한 언론이나 신문은 용인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는 신문을 국가 및 당의 통일을 위한 도구로서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의 엄격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맥퀘일(2005)의 말을 상기하면 그가 언론의 존재이유가 정보와 다양한 관점의 제공이라고 지적했을 때 이같이 자유주의 언론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언론은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인정할 때 수용자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상적인 사회제도아래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프먼(1922)은 뉴스의 질은 사회조직에 관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제도가 나으면 나올수록 보다 많은 쟁점들이 해결되고 보다 많은 객관적 기준들이 마련되고 한 사건이 보다 완벽하게 뉴스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뉴스를 통해 정보와 관점을 얻는 것은 대중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제도가 어떠한지 뉴스의 속성이나 효과의 측면을 고

13) 리프먼은 미디어가 아니라 신문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려해야하는 것이다.

프레임(frame)이론으로 사회현실의 구성으로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가 툽만(Tuchman, 1978)이다. 그는 뉴스의 제작과정을 분석해 인식론적 관점에서 뉴스를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창’으로 설명했다. 그 창틀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알게 되며, 따라서 완전히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뉴스는 존재할 수 없고 프레임에 따라 뉴스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허만과 촘스키(Herman & Chomsky, 2002)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미디어내용을 분석해 ‘선전모델(Propaganda Model)’이란 개념을 창안했다. 이들은 성격이 비슷한 여러 상황에 대해 미국언론의 보도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뒤 언론이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엔트만(Entman, 2004)은 미언론의 외신보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프레임작용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외신보도는 대부분 지배세력의 이념을 지지하는데 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프레임작용이건 선전활동이건 미디어는 서로 경쟁하는 세력에게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세력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맥케일(2005)은 이 경우 미디어의 주요대상은 대중이 아니라 다른 이해집단, 엘리트, 영향력 있는 소수계층이 된다고 주장했다. 인켈스(Inkeles, 1950) 역시 냉전시기 발간한 저서에서 공산주의 신문과 관련해 “선전기사는 독자 전체에 호소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당원 및 당원 아닌 지식계급의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171).

체제와 상관없이 언론이 힘을 발휘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일 것이다. 미국에서 독립전쟁 중 신문의 선전역할에 주목한 정치인들이 전쟁이 끝나자 직접 신문을 창간한 것은 초기 신문이 각 정당을 대변하는 정당기관지로부터 출발한다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전쟁직후 신문들은 연방파와 공화파로 양분돼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1783년부터 1800년까지 17년간을 제1차 정론기로,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옮기고 공화파인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신문들이 서로 정치적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1801년부터 1832년까지를 제2차 정론기로 부른다(차배근, 2014, 114-263쪽). 정당 및 정치인의 재정 지원을 받았던 미국의 신문들은 19세기 후반에는 신문 경영에서 광고가 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신문이 재정적 호황을 누리면서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천명하기 시작했다(Stephens, 2010, 272-273쪽). 신문이 대중화 상업화하면서 정파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해방 후 언론이 맞닥뜨린 상황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인데다 미국식 민주주의나 소련식 민주주의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다. 미국식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이념으로 삼았다. 김용직(2013)은 미소공위가 소련측의 남측 반탁세력 배제 정책 때문에 갖은 비난과 대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¹⁴⁾ 개별 신문사나 언론인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식과 소련식 민주주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익성향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선전술을 경계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함상훈¹⁵⁾은 공산주의의 강점은 선전과 조직력에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47년 7월 31일자)¹⁶⁾. 이 연구는 이같이 언론이 정론지적 성격을 갖기 쉬운 상황에서 두 신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두 신문의 발행주체 성격과 당시 언론에 대한 인식

역사적으로 한국언론은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형’이라고 할 수 있고,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기에는 합법적 범위에서 조선민중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르쳐 “그의 전도를 인도하는 친구”(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창간사)를 자임했다. 강명구(2013)는 이같은 애국적 성격을 ‘훈민적 계몽주의’라고 개념화하면서, 일제시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민족지를 창간한 자들은 언론인이자 지식인으로서 활약하며 국민의 계몽과 교육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519쪽). 일제시기 언론활동과 정치활동을 했던 인물들은 해방이후 정치계에 진출하거나 언론계에 남거나, 혹은 언론활동과 정치활동을 겸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강명구, 520쪽).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발행주체들은 1945년 11월과 12월 각각 복간하면서 일제시기 주창한 주지(主旨)를 재천명했다. 언론기관의 사명으로는 정보제공과 여론형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여론을 진기(振起)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 길을 밝히고” “우리가 알아야만 할 정보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복간사는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의 사시(社是)를 강조한 뒤 국내외 “주요동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비판”한다고 함으로써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되 여론을 형성해야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보도태도에서는 불편부당을 기치로 내세웠다고 풀이된다.

<동아일보>는 복간사에서 민족의 표현기관,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이라는 3대 주지와 함께 민주주의¹⁷⁾에 의한 여론정치를 부연했다. 여론형성을 통해 민의에 의한, 민의를 위한, 국민의 정체 수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복간사는 “신문도의 고유

14) 그는 “소련식 전체주의 체제와 미국식 자유주의 체제의 실질적인 구분은 ‘독재 대 민주주의’라는 구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39-140쪽).

15) 일제시기 <동아일보> 기자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함상훈은 한민당 선전부장으로서 <동아일보> 1947년 7월 25-31일자에 ‘공산당과의 투쟁에 대하여’란 글을 3차례 기고했다.

16) 정용욱(2001, 157쪽)은 1946년 봄부터 미군정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좌익과 소련의 사주와 선동에 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이 미군정의 인식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7) 미군정기 건국과 관련해 세 갈래 노선으로 공산주의(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있었다. <한성일보>사장 안재홍은 창간사에서 그의 노선을 간결하게 드러냈는데, 그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공산주의와는 체제를 달리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다(권희영, 2013, 113쪽). <동아일보>의 사시가 말하는 민주주의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한 직능과 사명이 사상(事象)의 충실한 보도에 있음”이라며 충실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단순한 전달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태도에서는 주의주장을 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은 일제시기 유력한 정치세력인 동아일보계열¹⁸⁾과 이에 깊게 연결된 호남지역 정치세력의 핵심인물이자 한민당의 중심인물이었다(윤덕영, 2011, 248쪽).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파문의 와중에 암살됐고, 사주 김성수¹⁹⁾가 송진우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나 1947년 2월부터는 최두선이 사장을 맡았다. 주간 겸 부사장으로 복간사를 집필한 설의식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이 신문을 퇴사했다가 해방 후 복간에 참여했다. 설의식은 복간사에서 <동아일보>가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신문을 내지 못했다가 10개월만에 복간해 1937-1940년 발간한 사실을 무시하고 일장기말소사건으로 폐간된 것으로 쓰고 있다. 그가 3년간 <동아일보>가 발간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착각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동아일보> 사사에는 설의식이 동생 설정식 등의 영향을 받아 <동아일보> 논조에 변화를 가져온 등의 이유로 쫓겨난 듯이 기록돼 있으나, 퇴사이후에도 <동아일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마라톤 제패가를 작사하는 등 <동아일보>와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는 1947년 2월 퇴사 후 <새한민보>를 창간했다.

설의식(1947, 25-27쪽)은 퇴사 후 기고한 한 글에서 신문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어떤 체제나 질서의 초창기에는 파당성을 가지고 모든 사상(事象)의 의의를 밝히고 가치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는 비판기능을 발휘하며 안정기에는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수집해 그대로 제공하는 보도기능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했다(<표 1>). 이 설명대로 하면 여론형성(선전)은 신문의 기본기능이면서 <동아일보>는 시비주의를, <조선일보>는 보도주의를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다.

<표 1> 설의식이 분류한 신문의 3가지 기능

직접적 기능 (의식적)	전달	선전	비판
간접적 기능(무의식적)	교화 계몽	여론을 구성 응집	사회변이를 촉진
내재 원리	보도주의	이용주의	시비주의

자료: 설의식의 ‘신문의 파당성’을 정리

18) <동아일보> 주간으로서 창간사를 쓴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 정치부장으로 우익세력의 이론가이자 정치인이었다.

19) 일제시기부터 송진우와 형영상반(形影相伴·형체와 그림자가 같이 다닌다)이었던 인물로, 한국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수용하는 이들의 정치이념은 해방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한 한민당의 정치이념으로 이어졌다(강정인·서희경, 2013쪽).

그는 신문의 정파성과 관련해서 혼란기에 각 신문이 각자의 주의주장과 사시에 따라 비판기능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송진우 사장과 가까웠던 광복산은 <동아일보>복간과 함께 입사했다가 1947년 2월 퇴사했다고 동아일보 사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동아일보>사내 소식지에 일제 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근무한 사실을 반성하면서 퇴사이유로 기자교육을 목적으로 한 조선신문학원 설립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광복산은 독일 신문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 조지대학 신문학과에서 공부했다(정진석, 2001, 479-480쪽). 광복산(1955)은 저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신문도 총선거나 전쟁시기에는 적지 않게 선전기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128-130쪽).

<조선일보> 복간 직후 편집위원장으로 좌우익을 떠나 신문 제작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 성인기는 각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정파에 말려들어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성인기는 또한 기자들이 출입처에 따라 좌익 또는 우익성향의 기사를 써서 골치 덩어리였다고 말했다(최준, 1965, 15쪽).

일제시기 <조선일보> 기자였다 복간에 참여했던 이갑섭은 1946년 8월 30일 주필에 임명됐고 1947년 4월 30일 퇴사했다. 그는 신문의 정파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갑섭은 잡지 <신천지>와의 인터뷰(1946.4)에서 “글이란 게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정파성을 인정하면서 신문의 방향은 사시가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선일보사료연구실, 2004, 46쪽). 그는 민주통일당 선전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1948년 봄부터는 합동통신 편집국장이 됐다. 1948년 11월 좌익에 대한 검거선풍 때 잡혀갔다가 1949년 3월 <조선일보> 주필로 복귀했고 6·25때 월북해 ‘좌익의 수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일보>논설위원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병규²⁰⁾·김병덕²¹⁾ 형제는 사회주의적 논조를 폈다. 김병덕의 사설에 대해 좌익인 문학가동맹에서 김병규에게 상을 주었는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설 게재에 대한 고무·선동이었다고 지적된다(이동욱, 1998, 257쪽 ; 권영기, 1999, 67쪽)²²⁾.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 월북한 문동표는 1947년 제 2차 미소공위 회의가 한창일 때 사설이 없는 파행지면을 제작했다. 잡지 <신천지>의 신문평(1946.4)이 “좌우 어느 편이 아니면 안되는 시대에 ‘엄정 중립이 신문의 사명’이라는 이념을 지

20) 유진오(1977)는 동경제대 불문과를 다녔던 김병규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기자를 역임했다고 말했다. 유진오는 김병규에 대해 좌익성향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해방 후 좌익선전물에 이름이 오르내렸다고만 소개했다. 그는 해방 후 서울대 사범대 강사를 하면서 1948년까지 활발하게 번역과 평론활동을 벌이다 월북했다.

21) 김병덕은 방응모 사장의 손자 방일영의 친구로, 방일영이 그를 입사시켰으며 이미 그의 형 김병규가 근무하고 있었다(이동욱, 1998).

22) 이동욱(1998)은 문학가동맹의 박치옥이 상을 주었다고 했는데 권영기(1999)는 일제시기 <조선일보>학예부장이었던 문학가동맹 사무국장 이원조가 상을 보내왔다고 했다.

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조선일보는 지금 지극히 가느다란 줄을 서툴게 타고 있는데, 줄타기가 좌로 우로 자꾸만 흔들흔들하니 이 편으로 떨어질 듯 저 편으로 떨어질 듯 매우 조마조마하다.”고 지적한 것처럼²³⁾ 파행지면은 엄정 중립의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조선일보사료연구실, 2004, 45쪽). 조선일보 사사는 1947년 5월 20일부터 4개월간 지면에서 사설과 단평이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문동표는 5월 30일자로 편집국장에 임명됐다(조선일보90년사사편찬실, 2010, 525쪽). 그는 일제시기 <조선일보> 편집고문을 지낸 민족사학자 문일평의 아들로 좌익성향의 인물이었다고 이 신문 사사는 소개하고 있다. 이갑섭과 함께 사주 방응모가 일제시기 만년장학회인 서중회 출신이었다(조선일보사료연구실, 46-47쪽).

<뉴욕타임스> 기자 리처드 존스톤²⁴⁾은 1945년 10월 16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정례기자회견에 나와 뉴스 속에 의견이 포함된다면 정직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46년 9월 25일 귀국하면서²⁵⁾ 기자들에게 언론의 책임이 진실을 캐내고 그것을 그대로 알리는데 있는데 필자의 의견을 혼동하는 일을 삼가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박권상, 1987, 67-68쪽). 사실과 의견의 분리라는 객관보도를 강조한 것으로 정파성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1차 정론기에 편집자가 다른 신문의 뉴스를 요약해 보도하면서 논평을 섞는 경향이 논설로 발전했다(차배근, 2014)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정치고문 제이콥스(1947)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 신문은 독립성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중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어서는 안된다.”²⁶⁾는 ‘미국의 신문왕’ 폴리처의 말을 인용해 신문의 존재이유를 설명했다(26쪽). 그러나 합동통신 외신국장 백남진(1947)은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중립적 태도를 취해 흑은 흑대로, 백은 백대로 사실을 보도하되 신문사는 자신의 색깔에 맞는 뉴스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는 취재기자의 역할을, 신문사는 편집국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37쪽). 최준(1947)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들고 불리한 것을 슬그머니 말살해버리고 있다”며 “편파심 없는 공평무사한 신문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63쪽). 정당의 난립과 사회의 혼돈으로 기자들도 신문의 정파성을 받

23) 이 잡지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불편부당성에 대해 “신문 본래의 면목”이라고 평가했다.

24)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리처드 존스톤 기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중군기자로 활동하다 1945년 9월 미군과 함께 서울에 들어와 일하다 귀국했으며 6.25때 다시 남한에서 중군기자로 활약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존스톤 기자에 대해 “한국 실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다”고 말했다(1986년 12월 25일자).

25) <동아일보>(1947년 4월 17일자)는 존스톤 기자가 1947년 4월 다시 서울주재 <뉴욕타임스>특파원으로 부임했다고 보도했다. 존스톤 기자가 서울에서 쓴 기사는 1948년 12월까지 신문에 게재됐다.

26) 이 말은 “신문은 반드시 사회에 참여해야한다. 만약 신문이 형세를 관망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나는 무덤 속에서도 돌아누울 것이다. 신문은 정부를 경영해서도 안되고 관세를 매겨서도 안되지만 반드시 대중여론을 이끌어야한다”고 폴리처가 <뉴욕월드>의 제임스 크릴먼 기자에게 한 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Brian, 2001, 13쪽).

아들였으나 이에 따른 사실왜곡과 주관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동아일보> 발행주체는 해방 후 우익세력중심의 하나였으나 <조선일보> 발행주체는 특정세력의 구심점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의 보도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는 발행주체의 성격과 사회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연구는 우국지사적 전통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발행주체의 성격과 당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두 신문의 보도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4. 미군정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정부 수립과정

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활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2차 미소공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소공위의 결렬에 따라 유엔이 개입해 소련군주둔 지역인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에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수립으로 귀결되기 시작하는 제2차회기에 앞서 제1차 회기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 수립 1년여 전인 1947년 8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이 작성한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보고서’²⁷⁾에 따르면 제1차회기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독립은 1943년 12월 1일 미국, 중국, 영국 3국의 카이로선언을 통해 약속됐고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에 의해 재확인됐으며 소련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를 승인했다.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1945년 12월 27일(현지시간) 카이로와 포츠담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모스크바협정을 맺었고 그 후 중국도 이를 승인했다. 이 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위가 열린 것이다.

제1차 회기는 2개월도 되지 않아 1946년 5월 8일 무기한 연기됐다.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협정에 규정된 협의 참가단체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공위가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모스크바협정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통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였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의사표시의 자유를 들어 반탁단체도 포함해야한다고 맞섰다. 미소대표단은 협의 신청자들이 ‘공동성명 제5호’에 실린 선언에 서명하도록

27) 이 보고서는 1947년 8월 12일자 미국 전쟁성의 명령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이날 열린 공위 제53차 회의까지의 상황을 다뤘다. 워싱턴연방문서보관소(WNRC)의 Record Group 332, Box 66에 소장돼 있으며 ‘Report of US delegation on US-USSR Joint Commission(20 Aug 1947)’라고 쓰여 있다. 미국대표단의 시각을 담고 있으나 미소외무장관 서한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이하 미소공위활동내용은 신복룡이 1992년 편역한 이 보고서의 203-262쪽을 정리한 것이다.

함으로써, 신탁통치문제는 어떻든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대상 명부작성에서 타협에 실패했다.

미소공위 중단 후 현지사령관이 미소공위 재개를 위해 서신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1946년 11월 26일자 소련군사령관 치스치야코프 대장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은 1946년 12월 24일자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반대제안에 의해 수정돼 미소공위 재개의 기초가 됐다. 하지 중장의 미국측 수정안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소공위가 재개됐으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 수정안은 공동성명 제5호에 서명한 후에 공동위원회 활동이나 모스크바결정의 이행에 대한 반대를 선동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단체는 협의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제2차회기는 미소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1947년 4월과 5월 마셜 미국 국무장관과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 사이의 서신 교환 결과였다. 마셜은 4월 8일 몰로토프에게 “민주주의의 권리인 ‘의사표시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기초 위에서” 미소공위를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몰로토프는 4월 19일 답신에서 반탁단체들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몰로토프는 또 “한국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정확히 이행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5월 20일 서울에서 미소공위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마셜은 5월 2일 “모스크바협정의 정확한 집행의 기초”의 의미를 물으면서 민주주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조건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셜은 “한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이 만약 공동위원회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자기 나라 정부에 관해 과거에 어떤 의견을 피력했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공동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썼다. 몰로토프는 5월 7일 “1946년 12월 24일자 하지 중장의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수정안이 안고 있는 ‘민주주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하지는 5월 11일 전쟁성에 보낸 전신에서 “한국인에게 의사표시의 자유를 부여해야한다는 점에서 소련과 분명하고도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를 재개하더라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소련과의 구체적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은 채 마셜은 5월 12일 몰로토프에게 긍정적으로 답신했고, 몰로토프는 5월 16일 기본적으로 마셜에게 동의하는 회신을 보내 제2차 회기가 성사됐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제1차회기 때는 아놀드 소장이었고 1946년 10월 중순 취임한 브라운이 제2차회기를 이끌었다. 소련측 대표는 1, 2차회기 모두 스티코프 대장이었다.

2) 국내세력의 움직임

제2차 회기가 시작될 때 좌익진영과 중간파는 미소공위에 참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우익진영은 참가와 불참으로 양분된 상태였다²⁸⁾. <동아일보> 1947년 6월 13일자 국내정세 기사에 따르면 우익진영 불참파의 중심에는 이승만과 김구의 충칭(重慶)임정계가 있으며 이들은 반탁운동의 입장에서 미소공위에 불참한다는 논리였다. 1945년 말 모스크바협정 발표 직후 반탁운동을 주도한 김구는 1946년 2월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했고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도 합류했다. 비상국민회의는 과도정부를 세우기는 고사하고 군정의 자문기구밖에 되지 못했다. 제1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군정이 비상국민회의를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좌익진영은 민주의원 개원 다음날인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창립했다. 민전은 좌익 정당과 단체들의 구심점이 됐다.

한편 미군정은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 중도우익인 김규식과 중도좌익인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을 추진했다. 좌우합작위원회(합위)는 1946년 7월 22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좌우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미군정은 이와 함께 입법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입법의원)이 1946년 12월 20일 개원했다. 따라서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 우익지도자들 사이의 노선차이는 이승만의 ‘자율정부 즉시 수립운동’, 김구의 ‘반탁통일운동 강화’, 김규식의 미군정 권고에 따른 ‘좌우합작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반탁총동원위)는 독촉중협과 통합돼 독립촉성국민회(독촉)로 발전했다. 제1차 미소공위에서 제5호 성명에 대한 서명만으로 협의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참가하겠다고 하던 반탁단체들은 1947년 초 하지 중장의 서신(미국 측 수정안) 공개로 미국의 입장변화가 알려지자 일제히 서명을 취소했다. 김구의 임정계는 1월 반탁독립투쟁위원회(반탁투위)를 결성했고 2월에는 비상국민회의와 독촉이 이승만의 민족통일총본부(민통)와 통합돼 국민의회가 창립됐다. 김구는 국민의회를 통해 한 번 더 과도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²⁹⁾.

1947년 5월 미소공위 재개 무렵 이승만은 민주의원 의장, 김구는 반탁투위 위원장이었고, 김규식은 합위 주석이자 입법의원 의장이었다. 이승만과 김구는 모스크바협정 때문에 미소공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김규식은 임정수립을 위해 참가

28) 이하 국내세력의 움직임은 김학준(2008), 남시욱(2005), 도진순(1997), 정병준(2001), 정용욱(2003b)을 참고로 정리했다.

29) 군정기에 한반도에 수립될 정부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임시정부, 단독정부, 과도정부가 혼용됐다. <한성일보> 1947년 4월 11일자 ‘시사해설’에서는 미소공위를 통해 수립될 남북통일정부를 임시정부, 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주권을 행사하는 자율자립정부를 단독정부, 북조선 인민위원회같이 행정 입법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행사하는 자치정부를 과도정부라고 설명했다. 김구가 1947년 2월 추진한 ‘과도정부’는 임정을 범통정부로 인정하자는 의도였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부’에 가까운 것이다.

해야한다는 태도였다. <동아일보> 6월 13일자 국내정세 기사를 중심으로 미소공위 참가의사를 밝힌 각 진영의 입장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좌우익 및 중간파의 미소공위 참가에 대한 입장

진영	미소공위 참가이유	정당 및 단체
우익	임정수립회담에 참가하고 신탁문제는 별개로 투쟁하 자	한민당, 한독당 국내파, 조민당, 독촉애국부인회, 대한노총 ³⁰⁾ , 청년조선총동맹, 불교, 천주교 등
좌익	모스크바협상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며 미소공위를 성공 시키자.	민전 ³¹⁾ 산하 남로당, 전평, 전농, 민애청, 기민
중간	미소가 협조해 임정수립을 논의하는 미소공위에 참가 하자.	민독(건민회, 통일건국회, 근로대중당, 사회대중당, 민족해방동맹 등 참여), 사민당, 청우당 (⇒공협)
		합위(근민당, 한독당 참여파, 건민회, 신진당 등) (⇒시협)

미소공위 재개 전후로 각 진영의 참가파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미소공위에 대응했다. 좌익진영은 민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우익진영의 최대정당인 한민당은 임시 정부수립협의회(임협)를 발족시켰다. 미소공위 참가를 신청한 우익 정당사회단체를 통합한 것이다. 6월 19일 총회가 열렸다. 한민당은 임협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간파인 민주주의독립전선(민독)은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공협)를 5월 28일 결성했다. 좌익의 민전과 우익의 민통에 소속되지 않은 67개 단체를 규합했다. 합위는 공협과는 별도로 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해 위원들을 보강했다. 합위는 또 다른 협의체로 시국대책협의회(시협)를 7월 3일 결성했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리했다.

30)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우익의 노동운동단체로 좌익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과 대립했다.

31) 민전은 좌익 정당과 단체들의 구심점으로 노동운동단체인 전평과 농민운동단체인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소속돼 있다.

연구문제 1. 언론의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두 신문은 미소공위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두 신문의 정파적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1. 두 신문이 행위주체³²⁾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2-2. 두 신문이 행위주체에 대해 가진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두 신문의 발행주체 성격은 보도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2.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던 공위 회의 중 제2차 회기를 다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로 했다. 서울과 평양에서 1947년 중반에 열린 이 회의가 결렬됨으로써 남북의 운명이 결정됐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다룬 기간은 제2차 미소공위 개최 사실이 서울에 알려진 1947년 5월초부터 소련대표단이 공위 결렬 후 서울을 떠난 10월말까지 6개월간이다.

연구기간 <동아일보>는 타블로이드 석간 2개 면을 냈고, <조선일보>는 타블로이드 조간 2개 면을 발행했다. 발행부수는 1947년 하반기 현재 <동아일보>가 43,000부, <조선일보>가 25,000-35,000부였다. 둘 다 민간소유의 신문으로 일제시기인 1940년 8월 10일 같은 날 폐간됐다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말 각각 복간됐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기사의 선별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사에서 1981년 발행한 <동아일보> 주제별 색인에서 키워드 ‘미소공동위원회’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냈다. <조선일보>는 분석대상 기간의 <조선일보> pdf판을 전량 인쇄한 뒤 <동아일보>의 기사를 단서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냈다. <동아일보>가 322건, <조선일보>가 347건 등 모두 669건이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보다 25건 많았다(<표 3> 참조).

<표 3> 신문별 분석대상 기사 건수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322 (48%)	347 (52%)	669 (100%)

이렇게 찾아낸 분석대상 기사는 신문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하거나 자체 의견을 개

32) 행위주체란 미소공위와 관련해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미소공위 및 미군정, 각 정치세력이 해당된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기사주체가 된다.

진한 기사 569건과 외신뉴스를 통신으로 입수한 기사 100건이었다(<표 4> 참조).

<표 4> 자체 기사와 통신 기사 건수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자체 기사	266 (47%)	303 (53%)	569 (100%)
통신 기사	56 (56%)	44 (44%)	100 (100%)

3. 분석대상 시기 구분

제2차 미소공위 기간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과 몰로토프 소련 외무장관의 답신으로 서울에서 미소공위가 재개된 1947년 5월부터 시작된다. 전개 과정에 따라 3개 기간으로 세분하였다.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미소공위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1947년 5월초부터 실제로 미소공위가 열려 6월 7일 양측이 ‘남북한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에 합의할 때까지다. 합의내용은 6월 11일 제11호 공동성명으로 발표됐다.

2) 중기-협력과 갈등

공동성명 11호 발표이후 미소공위가 순조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성공가능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작됐다. 미소공위 협의대상 신청접수 마감일인 6월 23일 반탁시위가 일어났으나 시위는 성공하지 못했고 우익진영은 대거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7월초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대상 단체의 자격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한다. 이때까지가 중기다.

3) 후기-미소공위 파국

미소공위가 협의대상 단체의 명부작성을 둘러싸고 드러내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성명전을 계속하면서 공위의 결렬을 향해 치달았다. 공위가 공식적으로 결렬된 때까지를 후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대상도 3기로 나뉘었다.

전기는 제2차 미소공위 재개 소식을 담은 국내외 기사가 게재된 1947년 5월 1일자 신문부터 협의 대상 규정에 관한 제11호 공동성명이 게재된 6월 12일자 신문까지로 정했다.

중기는 협의 대상 규정 발표에 따른 미소공위 분위기와 각 진영의 움직임에 담은 1947년 6월 13일자 신문부터 평양회의를 다룬 7월 8일자 신문까지로 나뉘었다.

후기는 평양회의 이후 서울에서의 미소공위 회의 소식을 담은 1947년 7월 9일자 신문부터 공위가 결렬돼 소련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난 기사가 게재된 10월 24일자 신문까지로 구분했다.

4. 분석유목의 정의와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할 개념들은 ‘기사성격’ ‘기사유형’ ‘기사게재 계기’ ‘취재원’ ‘발표주체’ ‘기사크기’ 등이다.

1) 기사성격과 기사유형=기사성격은 자체기사와 통신으로 구분했다.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기사로 나누기 위해 사용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각종 정보의 전달을 주목적으로 한 기사이고 의견기사는 사실 등 사내 필자의 의견이 담긴 글이나 외부 필자의 기고를 말한다. 기사에 취재원 등 출처가 없고 기자나 편집자 개인의 감상이나 분석이 들어간 것은 의견기사에 포함시켰다.

2) 기사게재 계기=기사가 실리게 된 계기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기사’와 ‘발표기사’, ‘다른 신문 보도’로 분류했다. 기사에 발표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면 취재기사로 분류했다. 또 발표내용을 전하는 기사라도 독자적 노력의 결과라면 역시 취재기사에 포함시켰다. 같은 인터뷰 기사라도 단독회견은 취재기사에 넣었으나 기자회견장에서의 문답내용은 발표기사에 포함시켰다. 다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소개한 것은 따로 다른 신문 보도로 분류했다.

3) 취재원과 발표주체=취재가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취재원 유형을 분류했다. 같은 이유로 발표기사의 발표주체 유형을 분류했다. 취재원이란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취재대상을 포함한 개념이다. 기사주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발표기사를 제외하기 위해 이같이 지칭했다. 취재원이 불분명하더라도 취재목적은 가진 대상이었다면 취재원에 들어간다.

4) 기사크기=기사의 크기는 제목의 단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가로쓰기 제목이 달린 기사의 단수는 제목의 길이를 단수로 환산해 처리했다.

5. 분석 절차

이 연구는 양적 통계 처리를 위한 1차 분석과 질적 연구를 위한 2차 분석으로 나

뒤 실시했다.

1차 분석은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1단계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제2차 미소공위 관련 기사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해당 기사 전체의 양을 분석했다. 해당 기사는 <동아일보>는 주제별 색인 목록에 나와 있는 기사 전부이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해 일일이 가려냈다. <조선일보> 기사의 선별에서 <동아일보> 기사 내용과 건수를 고려했으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기사의 건수는 기사의 단수를 기준으로 톱기사, 중간 톱기사, 3단 이상(톱기사와 중간 톱기사는 제외), 2단 이하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다. 기사를 크기별로 구분한 것은 기사의 크기에 각 신문이 판단한 기사의 가치와 비중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또 3개 기간별로 별도의 분석을 실시했다.

2단계는 제2차 미소공위 관련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사의 성격(자체기사와 통신), 기사의 유형(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기사), 게재된 면을 분석했다. 기사의 성격 분석에서는 통신기사 게재 비중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 앞에 표시된 크레디트에 유념했다. 기사의 유형 분석에서는 의견기사 게재 비중 등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과 리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3단계는 기사가 실리게 된 계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 분석의 목적은 ‘기사가 어떻게 해서 실리게 되었는가’하는 보도의 적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통신 기사와 의견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통신 기사는 통신사와 발신지를 고려해 분석했다. 의견 기사는 신문의 정치적 태도가 직접 드러나는 사설과 사내외 필자의 기고를 대상으로 했다. 필자의 이름이 없이 기자나 편집자의 의견이나 감상이 반영된 해설분석 기사도 포함했다. 국내 통신을 통해 서비스된 해외 뉴스통신사 기자의 분석과 해외 신문의 사설도 대상으로 했다.

1-5단계 분석은 대체로 ‘신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중요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6단계는 기사의 취재원과 발표주체를 대상으로 했다. 취재원과 발표주체 분석의 목적은 ‘신문이 어떤 목소리를 어떤 크기로 담아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주어가 누구인가’, ‘기사의 출처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취재원과 발표주체를 추출한 뒤 게재 빈도와 중요도를 파악했다. 중요도는 기사 크기로 측정했는데 취재원과 발표주체가 실린 기사의 크기가 △톱기사면 4점, △중간 톱기사면 3점, △3단 이상이면 2점, △2단 이하면 1점을 주었다. 게재 빈도와 중요도에 취재원과 발표주체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6단계 분석은 대체로 신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차 분석은 취재원과 발표주체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했다. 기사의 방향이

드러난 기사를 추출해 분석대상으로 했다. 보도태도가 축적돼 신문의 성향을 이룬다고 보고 기사의 방향을 긍정에서부터 부정까지로 판단기준³³⁾을 정해 파악했다. 또 신문의 정치적 태도가 비교적 직접 드러나는 의견 기사와 통신 기사도 분석했다.

제4장 양적 분석 결과

1) 신문지면 구성상의 기사분석

(1) 기사 건수와 크기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조사 대상 기간(1947년 5월 1일자-10월 24일자)에 보도한 제2차 미소공위 관련 기사는 톱기사부터 1-2단 기사까지 모두 669건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신문이 휴간한 월요일자를 제외하고 152일 동안 발행된 것을 감안하면 신문당 하루 평균 2.2건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두 신문을 비교하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25건 더 많이 게재했다.

대부분 1면을 차지했던 톱기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비슷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기사의 20.9%를 차지해 두 신문이 다섯 번에 한번은 미소공위 기사를 톱기사로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기간별로 분류하면 전기(1947년 5월1일자부터 6월12일자까지)에 가장 많은 기사가 게재됐다. 기간으로 보면 전기가 43일이었는데도 108일이었던 후기 보다 기사가 더 많이 실렸다. 전기에 하루 평균 6건의 기사가 게재되는데 비해 후기에는 2건이 게재됐다. 중기는 불과 25일간이었는데 평균 7건의 기사가 실려 가장 빈번하게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톱기사를 보면 <동아일보>가 전 기간에 골고루 미소공위 기사를 톱기사로 올린데 반해 <조선일보>는 후기에 관련 기사를 크게 다뤘다. 중간톱 기사를 구분하면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중간톱 기사를 많이 활용했으며 중후기에 중간톱 기사를 좀 더 게재했다. 3단 이상 기사의 경우 <동아일보>는 중기에, <조선일보>는 후기에 다른 기간보다 좀 더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3) 박계옥(1974)을 비롯해 기사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할 때 판단기준을 긍정(+) 중립(0) 부정(-)으로 나눈다. 신양휴 외(1966,21쪽) 연구에서는 +2(지지, 칭찬, 격려, 주장, 적극적 호응) +1(인정, 동조, 소극적 긍정) 0(해설, 태도불명, 인식, 요망, 기대, 회피, 중립적 태도) -1(야유, 경고, 가벼운 의심, 경계, 비판, 자숙, 실망, 충고, 소극적 비난) -2(비난, 맹성촉구, 부인, 강한 의심, 공격, 반대적 주장, 적극적 비판)로 세분화했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에서 신양휴 외의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

<표 5> 기사 건수와 크기 비교

기간	신문	톱	중간톱	3단 이상	2단 이하	계
전기 (1947.5.1~6.12)	동아	26 (20%)	16 (12%)	4 (3%)	85 (65%)	131 (100%)
	조선	24 (19%)	17 (13%)	3 (2%)	85 (66%)	129 (100%)
	소계	50 (19%)	33 (13%)	7 (3%)	170 (65%)	260 (100%)
중기 (1947.6.13~7.8)	동아	18 (23%)	9 (12%)	6 (8%)	45 (58%)	78 (100%)
	조선	14 (16%)	17 (19%)	2 (2%)	55 (63%)	88 (100%)
	소계	32 (19%)	26 (16%)	8 (5%)	100 (60%)	166 (100%)
후기 (1947.7.9~10.24)	동아	25 (22%)	17 (15%)	7 (6%)	64 (57%)	113 (100%)
	조선	33 (25%)	25 (19%)	9 (7%)	63 (48%)	130 (100%)
	소계	58 (24%)	42 (17%)	16 (7%)	127 (52%)	243 (100%)
계	동아	69 (21%)	42 (13%)	17 (5%)	194 (60%)	322 (100%)
	조선	71 (20%)	59 (17%)	14 (4%)	203 (59%)	347 (100%)
	계	140(21%)	101 (15%)	31 (5%)	397 (59%)	669 (100%)

2단 이하 기사를 보면 두 신문 모두 2단 이하 기사의 비중이 후기로 갈수록 대체로 줄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 후기에 두드러지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사의 성격, 유형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 669건을 기사 성격(자체기사와 통신)에 따라 분류하면(<표 6>참조) 신문이 독자적으로 취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자체 기사는 569건(85.1%)으로 해외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국내 통신을 통해 받아 게재한 기사 100건(14.9%)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위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15%라는 통신기사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미소공위가 취재보도를 통제했으며 그나마 해외 통신사 기자들이 미소공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별로는 <동아일보>가 자체 기사 266건(82.6%), 통신 기사 56건(17.4%)을 실었고, <조선일보>는 자체 기사 303건(87.3%), 통신 기사 44건(12.7%)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기사 게재 건수가 적은데도 통신 기사

는 더 많이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전기에 통신 기사 활용이 많았고 중기에 크게 줄었다가 후기에 다소 늘었다. 신문별로 보면 전기에 <동아일보>의 통신기사 활용이 두드러졌다.

<표 6> 기사 성격과 유형 비교

기간	신문	성격		유형	
		자체	통신	스트레이트	의견
전기	동아	95(48%)	36(58%)	121(51%)	10(43%)
	조선	103(52%)	26(42%)	116(49%)	13(57%)
	소계	198(100%)	62(100%)	237(100%)	23(100%)
중기	동아	72(47%)	6(50%)	75(47%)	3(50%)
	조선	82(53%)	6(50%)	85(53%)	3(50%)
	소계	154(100%)	12(100%)	160(100%)	6(100%)
후기	동아	99(46%)	14(54%)	108(46%)	5(63%)
	조선	118(54%)	12(46%)	127(54%)	3(38%)
	소계	217(100%)	26(100%)	235(100%)	8(100%)
계	동아	266(47%)	56(56%)	304(48%)	18(49%)
	조선	303(53%)	44(44%)	328(52%)	19(51%)
	계	569(100%)	100(100%)	632(100%)	37(100%)

한편 기사 유형(스트레이트 기사와 의견기사)에 따라 669건을 분류하면(<표 6> 참조) 스트레이트 기사는 632건(94.5%)으로, 의견기사 37건(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문별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비슷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기간별로 구분하면 전기에 비해 중기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다소 늘었다가 후기에 중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의견 기사를 전기에 <동아일보>보다도 많이 게재했으나 중기와 후기에는 <동아일보>보다 적게 실었다.

이밖에 게재 면을 보면 1면 기사는 612건(91.5%)이었다. 1면이 아닌, 주로 2면에 실린 기사는 57건(8.5%)으로 1면 기사가 훨씬 많았다. 두 신문을 비교하면 <동아일보>가 1면에 304건, <조선일보>가 308건의 기사를 게재해 차이가 없었으나 1면이 아닌 지면에 실린 기사의 수와 비율은 <동아일보> 18건(5.6%), <조선일보> 39건(11.2%)이었다. 1면이 아닌 다른 지면에는 뉴스의 뒷얘기나 사회부성 기사가 실렸다는 점에서 <조선일보>가 이들 지면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사 게재의 계기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리게 된 계기를 특정할 수 있는 기사 645건 중 독자적인 취재를 중심으로 작성된 기사가 381건(59.1%)으로 가장 많았다(<표 7>참조). 발표를 계기로 작성된 기사는 247건(38.3%)이었고, 해외신문의 취재나 의견을 인용한 기사는 17건(2.6%)이었다.

신문별로는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활발하게 취재해 기사를 게재했고, 기간별로 구분하면 두 신문의 취재 기사 비중이 중기에 커졌다가 후기에 많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에 미소공위의 발표가 많지 않아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 두 신문이 발표 기사 비중을 중기에 다소 줄였다가 후기에 크게 늘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기에는 취재 기사를 많이 싣다가 후기에 미소공위의 발표가 늘어나 이를 보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소공위 양측은 후기에 경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성명전(聲明戰)을 벌였다.

<표 7> 기사 게재의 계기 분석

기간	신문	취재	발표	해외신문 인용	계
전기	동아	72(57%)	46(36%)	9(7%)	127(100%)
	조선	72(59%)	43(35%)	7(6%)	122(100%)
	소계	144(58%)	89(36%)	16(6%)	249(100%)
중기	동아	51(68%)	24(32%)	0	75(100%)
	조선	61(71%)	24(28%)	1(1%)	86(100%)
	소계	112(70%)	48(30%)	1(1%)	161(100%)
후기	동아	53(49%)	55(51%)	0	108(100%)
	조선	72(57%)	55(43%)	0	127(100%)
	소계	125(53%)	110(47%)	0	235(100%)
계	동아	176(57%)	125(40%)	9(3%)	310(100%)
	조선	205(61%)	122(36%)	8(2%)	335(100%)
	계	381(59%)	247(38%)	17(3%)	645(100%)

신문별로 기간을 나눠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중기에 취재 기사를 크게 늘렸다가 후기에 다시 크게 줄이면서 이 기간에 취재 기사보다도 발표 기사를 더 많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도 중기에 취재 기사를 크게 늘렸다가 후기에 다시 줄였으나 이 기간에도 발표 기사보다는 취재 기사를 훨씬 많이 게재했음을 보여 준다. 성명전속에서도 <조선일보>는 활발하게 취재했다고 해석된다.

(4) 통신기사 분석

해외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국내 통신을 통해 받아 게재한 통신기사 100건을 분류하면 서울주재 특파원 의존율이 높았다(<표 8>참조). 서울주재 AP특파원³⁴⁾과 서울주재 UP특파원³⁵⁾ 기사가 전체 통신 기사의 절반(53%)을 넘었다. 이는 해외에서 들

34) 국내 신문에는 서울주재 AP특파원 로버츠의 기사가 1946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나온다.

어오는 각각의 통신사 기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통신사 기사는 UP통신 기사가 AP통신 기사보다 많이 활용됐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소공위 관련 기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보니 후발통신사로서 기사를 많이 공급한 UP통신 기사를 두 신문이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FP 로이터 INS 중앙사(중국) 같은 다른 해외뉴스 통신사의 기사는 7건이었고 조선 공립 등 국내 통신 기사는 3건 게재됐다.

<표 8> 통신 기사 출처 비교

신문 기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전기	중기	후기	소계	전기	중기	후기	소계	
①AP	5	1	1	7	5	1	1	7	14
②서울주재 AP특 파원	9	2	6	17	6	2	3	11	28
③UP	10	1	3	14	6	2	1	9	23
④서울주재 UP특 파원	10	1	3*	14	6	0	5*	11	25
⑤AFP 로이터 INS 등	2	0	1	3	2	1	1	4	7
⑥조선 공립	0	1	0	1	1	0	1	2	3
소계	36	6	14	56	26	6	12	44	100

* 출처가 서울주재 AP특파원뿐 아니라 서울주재 UP특파원이 병기돼 실제로는 한 건 늘어나야함.

<동아일보>는 서울주재 AP특파원 기사 활용이 두드러졌고,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를 제외하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에 비해 UP통신 기사를 더 많이 활용했으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에 비해 AP통신 기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전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 활용이 많았다.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를 제외한 이들 통신사의 기사도 전기에 많이 실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통신기사 활용은 중기에 모두 줄었으나 후기에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의 활용이 다소 늘었다. 후기에 미소 양측이 성명전을 펼치면서 취재가 어려울 때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의견 기사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전체 의견 기사 38건의 비중은 해외통신사를 통해 들어온 해외신문의 분석 요약(35.1%), 사내 필진의 해설 분석(21.6%), 해외통신사 필진의 분석(21.6%), 사설(16.2%), 기명 기고(5.4%) 순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35) 동아일보(1948.3.25)에 따르면 서울주재 UP특파원 스탠리 릿치는 1946년 7월부터 1948년 3월까지 근무하다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대신 유엔주재 특파원으로 있던 제임스 로우퍼가 서울에 왔다.

<표 9> 의견기사 유형별 건수 비교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전기	중기	후기	소계	전기	중기	후기	소계	
사설	2	0	3	5	1	0	0	1	6
해설 분석	1	0	0	1	5	1	1	7	8
기명 기고	0	2	0	2	0	0	0	0	2
해외 통신 분석	1	1	2	4	1	1	2	4	8
해외 신문 분석	7	0	0	7	6	1	0	7	14
계	11	3	5	19	13	3	3	19	38

두 신문 모두 내부 의견기사보다 외부 의견 기사를 많이 실었다. 내부 의견 기사 중 <동아일보>가 사설의 비중이 높았고, <조선일보>는 사내 필진의 해설 분석이 높았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전기에 <동아일보>는 7건, <조선일보>는 6건의 해외신문 분석 요약 실었다. 통신을 통해 들어온 해외신문의 사설 등 의견 기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5건의 기사가 두 신문이 같은 통신을 통해 받은 같은 기사였다. 해외의 여론 파악에 있어 통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전기에 사설을 1건³⁶⁾, 사내 필진의 해설 분석을 5건 게재한데 반해 <동아일보>는 전기에 사설을 2건, 중기에 3건 실었다. 기명 외부기고는 <동아일보>에서 중기에 2건³⁷⁾ 실었고 <조선일보>는 아예 게재하지 않았다.

2) 취재 및 발표기사 내용분석³⁸⁾

(1) 취재원 분석

① 취재원 빈도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취재기사 381건을 보면 취재원으로는 미소공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동아일보>의 경우 취재원으로 미소공위와 함께 미국측 대표단을 많이 등장시켰으나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비교해 미소공위를 월등히 많이 취재했다. <조선일보>가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가 <동아일보>보다 68% 많았고, <동아일보>는

36) 조선일보 사사(조선일보90년사사편찬실, 2010, 525-526쪽)는 미소공위가 완전히 결렬상태에 들어간 9월 초순까지 단 한건의 사실도 게재하지 않았으나 미소공위관련 사실 보도는 충실하게 했다고 밝혀 사실 게재 중단이 미소공위를 둘러싼 사내 갈등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5월 18일자 사실을 게재한 뒤 아예 사실 게재를 중단했다가 9월 12일자부터 다시 사실을 싣고 있다.

37) 동아일보의 외부 기명 기고는 장덕수 한민당 정치부장이 두 번에 걸쳐 쓴 것이다.

38) 취재원 및 발표주체를 추출할 때 취재원 등이 여럿 등장하면 가장 두드러진 취재원 등을 하나씩만 골랐다. 따라서 실제 등장한 것보다 적게 계산됐다고 봐야한다.

미국대표단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가 <조선일보>보다 63% 많았다.

<표 10> 취재원 빈도 상위 10위 분석

※ 단위는 건, 순위는 전체빈도에 따름

순위	동아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조선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1	공위	15 (25%)	16 (27%)	28 (47%)	59	공위	24 (24%)	30 (30%)	45 (46%)	99
2	브라운	11 (65%)	3 (18%)	3 (18%)	17	브라운	11 (65%)	2 (12%)	4 (24%)	17
3	미측	4 (31%)	3 (23%)	6 (46%)	13	민전	3 (23%)	3 (23%)	7 (54%)	13
4	우익	6 (86%)	1 (14%)	0	7	미측	2 (25%)	2 (25%)	4 (50%)	8
5	민전	3 (43%)	2 (29%)	2 (29%)	7	김규식	3 (60%)	1 (20%)	1 (20%)	5
6	한독당	4 (80%)	1 (20%)	0	5	남로당	1 (25%)	1 (25%)	2 (50%)	4
7	한민당	3 (60%)	2 (40%)	0	5	소측	1 (25%)	1 (25%)	2 (50%)	4
8	이승만	2 (50%)	2 (50%)	0	4	전평	1 (33%)	2 (67%)	0	3
9	소측	1 (25%)	1 (25%)	2 (50%)	4	이승만	1 (33%)	1 (33%)	1 (33%)	3
10	임협	2 (67%)	1 (33%)	0	3	한독당	2 (100%)	0	0	2

* △공위=미소공위, △브라운=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수석대표, △미측=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우익=한민당 한독당 이승만 김구를 포함하는 우익진영 전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을 말하며 좌익정당과 단체들의 중심점, △한독당=김구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지만 미소공위 참가문제로 내분에 휩싸임, △한민당=우익진영의 최대정당으로서 동아일보계열의 정치적 중심점, △이승만=김구와 함께 우익진영의 대표적 지도자, △소측=미소공위 소련대표단, △임협=우익진영이 미소공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민당이 주도해 만든 협의체, △김규식= 좌우합작과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애쓰는 중간노선(중도우익)의 지도자로 좌우합작위원회(합위) 주석, △남로당=좌익지도자 박헌영이 만든 대표적인 좌익정당으로 민전소속, △전평=전국노동조합평의회를 말하며 대표적인 좌익단체로 민전소속

취재원 상위 10위를 보면 <동아일보>는 좌익진영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취재한 기사를 <조선일보>의 절반밖에 게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민전 산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과 남로당 기사를 실었으나 <동아일보>는 이들을 취재한 기사가 없었다. <동아일보>는 좌익진영 중 상위 10위 안으로 유일하게 민전을 취재했으며, 그나마 그 건수도 <조선일보>의 절반수준이었다. <동아일보>는 우익진영 전반을 비롯해 역시 우익인 한민당, 한독당, 이승만, 임시정부수립협의회(임협) 기사를 상위 10위 안으로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중간노선의 김규식을 취재한 기

사를 공위와 민전 다음으로 많이 실었고, 우익진영으로는 이승만과 한독당 기사를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게재했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후기로 갈수록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건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두 신문 모두 전기에는 브라운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를 각각 10건 이상 게재한 뒤 중후기에는 2-4건 게재하는데 그쳤다. 민전을 취재한 기사 건수는 <동아일보>는 갈수록 줄어들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늘었다. <동아일보>는 전기에 우익진영을 집중 취재했으나 갈수록 줄어들었다. <조선일보>는 전기에 중간노선의 김규식을 비교적 많이 실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좌익인 남로당이나 전평, 우익인 이승만이나 한독당 기사를 한 두건 골고루 게재했다.

② 취재원 중요도 분석

기사 크기로 측정한 취재원의 중요도(톱기사 4점, 중간 톱기사 3점, 3단 이상 2점, 2단 이하 1점)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보다 <조선일보>가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표 11> 참조). 다시 말하면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조선일보>는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를 중간 톱기사 정도 크기로 99번 게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는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를 3단 이상 크기로 59번 게재한 셈이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비교해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를 게재할 때 기사 크기도 크게 했지만 자주 다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취재원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은 것보다 83% 중요하게 게재했다.

또 미측 대표단 취재원을 보면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동아일보>는 미측 대표단을 취재한 기사를 3단 이상 크기로 13번 게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는 미국대표단을 취재한 기사를 2단 정도 크기로 8번 게재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동아일보>는 미국대표단 취재원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보다 2배 이상 비중있게 게재했다.

또한 브라운 취재원을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실었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두 신문은 브라운을 취재한 기사를 3단 이상 크기로 각각 17번 게재한 것이다. 민전을 취재한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전을 취재한 기사를 게재할 때 1-2단 크기로 실지만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비교해 86% 더 많이 실어 전체적으로 78% 중요하게 게재한 셈이다.

나머지 <동아일보>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이 신문의 우익 취재원 비중은 건당 민전 취재원 비중보다 62% 중요하게 게재됐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우익 취재원 기사를 평균 3단 이상 크기로 게재했다. 이 때문에 이 신문이 우익진영 기사와 민전 기사를 똑같이 7건 게재했지만 기사 비중에서 우익 취재 기사를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우익인 한민당과 이승만을 취재한 기사를 보면 비슷한

비중으로 실었다. 이 신문의 한민당 취재원 비중과 이승만 취재원 비중은 건당 비슷했으며,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평균 3단 이상 크기로 비슷하게 게재한 것으로 보였다.

<표 11> 취재원 상위 10위 중요도 분석

※ 단위는 점, 순위는 전체빈도 순

순위	동아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조선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1	공위	39	2.6	48	3	51	1.8	138	2.3	공위	62	2.6	66	2.2	124	2.8	252	2.6
2	브라운	21	1.9	8	2.7	8	2.7	37	2.2	브라운	26	2.4	2	1	6	1.5	34	2
3	미측	7	1.8	6	2	15	2.5	28	2.2	민전	3	1	3	1	10	1.4	16	1.2
4	우익	11	1.8	4	4	0	0	15	2.1	미측	5	2.5	2	1	6	1.5	13	1.6
5	민전	3	1	4	2	2	1	9	1.3	김규식	3	1	1	1	1	1	5	1
6	한독당	7	1.8	1	1	0	0	8	1.6	남로당	3	3	1	1	2	1	6	1.5
7	한민당	6	2	4	2	0	0	10	2	소측	1	1	1	1	4	2	6	1.5
8	이승만	5	2.5	2	1	0	0	7	1.8	전평	3	3	2	1	0	0	5	1.7
9	소측	4	4	2	2	2	1	8	2	이승만	1	1	1	1	1	1	3	1
10	임협	2	1	1	1	0	0	3	1	한독당	2	1	0	0	0	0	2	1

<조선일보>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중간노선의 김규식을 취재한 기사를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1-2단 크기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익인 남로당과 전평을 취재한 기사를 보면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이 신문은 남로당 기사를 2단 크기 정도로 실었고, 전평 기사를 3단 크기 정도로 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후기로 갈수록 미소공위를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 커졌다. 두 신문은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전기에 <동아일보>는 3단 이상 크기의 미소공위 취재원 기사를 15건, <조선일보>는 24건 게재했다. <조선일보>가 전기에 미소공위 취재원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은 것보다 59% 중요하게 게재한 셈이다. 그러나 후기에 <동아일보>는 3단 크기의 미소공위 취재원 기사를 28건, <조선일보>는 중간톱 크기의 기사를 45건 게재했다. <조선일보>가 후기에 미소공위 취재원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은 것보다 2배 반 중요하게 게재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전기에서 후기로 갈 때 <조선일보> 미소공위 취재원은 <동아일보>와 비교해 건수에서 8건 차이가 났으나 비중에서는 8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미소공위를 취재원으로 한 기사와 달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후기로 갈수록 브라운을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 작아졌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전기에 <동아일보>는 3단 정도 크기의 브라운 취재원 기사를 11건, <조선일보>는 3단 이상 크기의 기사를 11건 게재했다. 두 신문의 게재 건수는 같았지만 <조선일보>가 브라운 취재원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은 것보다 24% 중요하게 게재한 셈이다. 후기에는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동아일보>는 중간톱 정도 크기의 브라운 취재원 기사를 3건, <조선일보>는 3단 정도 크기의 기사를 4건 게재했다. <조선일보>가 후기에 브라운 취재원 기사를 <동아일보>보다 한 건 많게 게재했지만 비중에서는 다소 작게 게재한 셈이다.

또한 좌익진영인 민전을 취재한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가 전기 3점, 중기 3점, 후기 10점으로 실었다. <조선일보>가 민전 취재원 기사를 후기에 건당 1.4점 비중(2단 크기)으로, <동아일보>가 중기에 건당 2점 비중(3단 이상 크기)으로 게재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1-2단 크기로 실었다.

이밖에 신문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우익진영과 한독당, 한민당, 이승만의 기사를 실을 때 전기에 이승만과 중기에 한민당의 경우처럼 톱기사나 중간톱 크기로 게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1-2단 크기나 3단 정도 크기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중간노선의 김규식, 좌익진영인 남로당과 전평의 기사를 실을 때 전기에 남로당이나 전평을 중간톱으로 게재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1-2단 크기로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발표주체 분석³⁹⁾

① 발표주체 빈도 분석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표기사 247건을 보면 브라운 미국측 수석대표와 스티코프 소련측 수석대표의 발표를 가장 많이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동아일보>는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 기사를 똑같은 수로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스티코프의 발표를 브라운 발표보다 3건 더 게재했다.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의 발표기사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비슷한 수로 실었으며 자체 미소공위 발표기사도 비슷하게 게재했다. 또 두 신문은 공보부를 통한 브라운의 발표기사와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를 발표주체로 한 기사를 각각 똑같은 수로 실었다. 이같이 두 신문이 발표 기사를 똑같거나 비슷한 수로 실은 것은 관련 발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표를 기사화한 것으로

39) 발표주체를 지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미소공위 발표 중에서는 공보부를 통한 것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보부 발표라는 표기가 없으면 그냥 미소공위 발표라고 분류했다.

풀이된다.

<표 12> 발표주체 빈도 상위 10위 분석

※ 단위는 건, 순위는 전체빈도에 따름

순위	동아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조선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1	브라운	3 (21%)	2 (14%)	9 (64%)	14	스티코프	1 (6%)	1 (6%)	14 (88%)	16
2	스티코프	1 (7%)	1 (7%)	12 (86%)	14	브라운	3 (23%)	2 (15%)	8 (62%)	13
3	공보부-공위	3 (33%)	5 (56%)	1 (11%)	9	공보부-공위	3 (30%)	7 (70%)	0	10
4	공위	7 (100%)	0	0	7	하지	3 (50%)	0	3 (50%)	6
5	한민당	3 (43%)	0	4 (57%)	7	공위	5 (100%)	0	0	5
6	하지	3 (50%)	0	3 (50%)	6	한민당	3 (60%)	0	2 (40%)	5
7	공보부-브라운	0	3 (60%)	2 (40%)	5	남로당	1 (20%)	0	4 (80%)	5
8	임협	0	0	4 (100%)	4	공보부-브라운	0	3 (60%)	2 (40%)	5
9	김규식	3 (100%)	0	0	3	공협	3 (75%)	0	1 (25%)	4
10	이승만	2 (67%)	1 (33%)	0	3	민전	2 (50%)	1 (25%)	1 (25%)	4

* △브라운=미소공위 미국대표단 수석대표, △스티코프=미소공위 소련대표단 수석대표 △공보부-공위=미군정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 발표, △공위=미소공위, △한민당=우익진영의 최대정당으로서 동아일보계열의 정치적 구심점, △하지=주한미군사령관으로 미소공위 미국대표단과 미군정을 통괄, △공보부-브라운=미군정 공보부를 통한 브라운 발표, △임협=우익진영이 미소공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민당이 주도해 만든 협의체, △좌우합작과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애쓰는 중간노선(중도우익)의 지도자로 좌우합작위원회(합위) 주석, △이승만=김구와 함께 우익진영의 대표적 지도자,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말하며 좌익정당과 단체들의 구심점, △남로당=좌익지도자 박헌영이 만든 대표적인 좌익정당으로 민전소속, △공협=합위와는 별도로 중간노선의 정당·사회단체가 미소공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

발표주체 상위 10위를 보면 <동아일보>는 우익진영인 한민당과 임협, 중간노선의 김규식과 우익인 이승만의 발표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한민당과 좌익진영인 남로당, 역시 좌익인 민전과 중간노선의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공협) 발표를 게재했다.

기간별로 구분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후기에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두 신문은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의 발표 기사나 직접 미소공위가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전기와 중기에 많이 실다가 후기에 브라운

과 스티코프가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다. 두 신문의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기사는 전기와 중기에 3건 이하였으나 후기에는 10건 내외로 부쩍 늘었다. <동아일보>는 한민당과 이승만, 김규식의 발표기사를 전기에 두 세건 게재하다가 이승만과 김규식은 중기이후에는 거의 신지 않았다. 이 신문은 후기에 한민당과, 한민당이 주도하는 임협외 발표기사를 각각 4건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중기를 제외하고는 한민당과 남로당, 공협외 기사를 한 두건이라도 신고 있으며, 민전의 경우에는 중기를 포함해 전 기간 1-2건 게재했다.

② 발표주체 중요도 분석

기사 크기로 측정한 발표주체의 중요도(톱기사 4점, 중간 톱기사 3점, 3단 이상 2점, 2단 이하 1점)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보다 <조선일보>가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표 13> 참조). 전체적으로 <동아일보>는 브라운의 발표에, <조선일보>는 스티코프의 발표에 비중을 두었다. <조선일보>의 스티코프 발표 비중은 건당 <동아일보>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조선일보>는 스티코프 발표를 중간 톱기사 정도 크기로 16번 게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는 스티코프 발표를 3단 이상 크기로 14번 게재한 셈이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와 비교해 스티코프 발표 기사를 게재할 때 조금 더 자주 다루고 기사 크기를 크게 게재해 중요하게 취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스티코프 발표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은 것보다 건수에서는 14% 더 게재했고, 비중에서는 87% 더 중요하게 다뤘다.

또 브라운 발표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의 브라운 발표 비중은 건당 <동아일보>의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조선일보>는 브라운 발표 기사를 중간톱 이상 크기로 13번 게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는 브라운 발표를 중간톱 정도 크기로 14번 게재한 셈이다. <동아일보>가 브라운 발표를 한건 더 게재했지만 <조선일보>가 8% 더 비중 있게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보부를 통한 브라운 발표 기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보다 <조선일보>가 조금 더 비중을 두어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동아일보>는 중간톱 정도(건당 2.6점), <조선일보>는 중간톱 이상 크기(건당 3.4점)로 각각 7건씩 게재한 셈이다. 이밖에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 발표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가 한 건 더 많이 게재했으나 기사 크기는 <동아일보>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동아일보>의 발표 기사를 살펴보면 우익진영인 한민당과, 한민당이 주도하는 임협외 발표 비중은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한민당 발표는 1-2단 크기로 7건 게재하고, 임협외 발표는 3단 이상 크기로 4건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발표기사를 살펴보면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한민당 발표를 2단 이상(건당 1.4점)으로 게재했을 뿐 좌익인 남로당(건당 1점), 중간노선의 공협(건당 1점), 좌익인

민전(건당 1점)의 발표는 1-2단 크기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발표주체 상위 10위 중요도 분석

※ 단위는 점, 순위는 전체빈도 순

순위	동아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조선일보	전기		중기		후기		계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전체	건당
1	브라운	9	3	4	2	25	2.8	38	2.7	스티코프	1	1	3	3	39	2.8	43	2.7
2	스티코프	1	1	1	1	21	1.8	23	1.6	브라운	7	2.3	7	3.5	27	3.4	41	3.2
3	공보부-공위	11	3.7	12	2.4	4	4	27	3	공보부-공위	9	3	17	2.4	0	0	26	2.6
4	공위	18	2.6	0	0	0	0	18	2.6	하지	7	2.3	0	0	5	1.7	12	2
5	한민당	5	1.7	0	0	4	1	9	1.3	공위	12	2.4	0	0	0	0	12	2.4
6	하지	5	1.7	0	0	8	2.7	13	2.2	한민당	5	1.7	0	0	2	1	7	1.4
7	공보부-브라운	0	0	6	2	7	3.5	13	2.6	남로당	1	1	0	0	4	1	5	1
8	임협	0	0	0	0	9	2.3	9	2.3	공보부-브라운	0	0	9	3	8	4	17	3.4
9	김규식	3	1	0	0	0	0	3	1	공협	3	1	0	0	1	1	4	1
10	이승만	4	2	1	1	0	0	5	1.7	민전	2	1	1	1	1	1	4	1

기간별로 구분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후기에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 기사 비중이 커졌다. <동아일보>는 전기에 브라운 발표 기사와 함께 미소공위 발표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동아일보>는 전기에 이들 발표 기사를 중간톱 크기로 13건 게재했다. 특히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 발표는 톱기사 크기였다. 후기에는 브라운 발표를 중간톱 크기로 9건 게재하고 스티코프 발표를 3단 정도 크기로 12건 실었다. 미소가 성명전으로 공방을 벌인 후기에 <동아일보>는 브라운 발표를 스티코프 발표보다 더 적게 실었으나 기사크기는 19% 크게 게재한 셈이다.

<조선일보>도 전기에 브라운 발표 기사와 함께 미소공위 발표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조선일보>는 전기에 이들 발표 기사를 3단 이상 크기로 11건 게재했다.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 발표는 중간톱기사 크기였다. 후기에는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브라운 발표를 중간톱 이상 크기로 8건 게재하고 스티코프 발표를 3단 정도 크기로 14건 실었다. 미소의 성명전이 한창이던 후기에 브라운 발표보다 스티코프 발표의 기사크기가 44% 더 컸던 셈이다. 또한 한민당 발표 기사를 보면 두 신문은 한민당 발표 기사를 전기에 3단 정도로 게재하다 후기에 1-2단 크기로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문 모두 중기에 한민당 발표 기사가 없었다.

이밖에 신문별로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전기에 우익인 이승만과 중간노선인 김

규식의 발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다 후기에는 한민당이 주도하는 임협 발표에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의 임협 발표의 크기는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3단 이상 크기로 4건 게재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좌익인 남로당, 중간노선의 공협, 역시 좌익인 민전의 발표 기사 경우 전기와 후기에 기사 크기로 환산했을 때 전부 1-2단 크기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에는 거의 이들의 발표 기사를 실지 않았다.

제5장 질적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미소공위 관련 행위주체들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우선 행위주체를 미소공위와 각 정치세력으로 나누어 두 신문이 전개 과정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도태도를 달리하는지 살폈다. 행위주체들이 취재원이 되거나 발표주체로서 기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양적 분석을 통해서도 이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태도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질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전개 과정과 상황변화는 양적 분석과 같이 3개 기간으로 나뉘었다. 행위주체에 대한 보도기사와 함께 정치적 태도가 직접 드러나는 의견기사도 살폈다. 또 해외신문 의견기사의 게재여부에서도 신문의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기사의 의견기사내용도 분석해 정리했다.

1. 미소공동위원회 취재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1) 공위 재개 전

<표 10>과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취재원이나 발표주체는 미소공위와 미소공위 미국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소장, 그리고 미국대표단이었다. 미소공위에 소련측 대표단이 있었지만 미소공위의 전반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 취재나 발표는 대체로 미국대표단이나 미국측 사무국, 군정청 공보부를 통해 이뤄졌다.

두 신문은 소련대표단을 파견해 달라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요청서에 대한 북한주둔소련군사령관 코로트코프 중장의 답변 내용을 5월 18일자에 서울 주재 AP특과원 보도로 게재했다. 미국대표단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계 신문과 통

신 특파원이 취재에 유리한 구조였다. AP특파원은 ‘당지(當地) 미측 공위본부당국’의 말을 인용해 “양 사령관은 공위협약에는 직접 참가지 않을 것이며 공위협약에는 양측 수석대표 급 각각 4명의 수원이 참여할 것이고 소측 선발대로서 비서대리, 보충관, 조선인 통역관의 3명은 17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며 소측 간부 공위대표 서기관등 75명은 18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실린 소련대표단 제1진의 도착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취재원이 차이가 있다. <동아일보>가 미국대표단이나 군정청 공보부를 취재원으로 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 신문은 간접취재를 통해 소련대표단 연락원 3명의 도착 사실을 간단히 1쪽지로 보도했다. AP특파원 보도에서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일 년 이상 휴회 중인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라는 본국정부의 훈령에 접한 남조선미국주둔군사령관 「존 R 하지」중장은 기후(其後) 북조선소련군사령관 「쿠베르코 프코로트코프」중장에게 서울에서 재개될 공동위원회 출석할 소련대표단 파견을 초청하였는데 소련대표단 선견 연락원 3명은 16일 평양에서 기차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일양(一兩)일 내로 서울에 올 소련대표단 일행은 약 75명이 되리라 한다 (진한 글씨 연구자 첨가, 소대표 전원 약 75명. 소의 연락원 3명은 벌써 입경)⁴⁰.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미국대표단이나 군정청 공보부로부터 소련대표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취재한 뒤 소련대표단을 직접 취재해 별도로 실었다. 소련대표단 도착에 대한 기사 외에도 소련대표단의 이름 및 서울역 도착분위기를 전한 취재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소련대표단 취재원 활용에서 소극적인 <동아일보>에 반해 <조선일보>는 적극적으로 소련대표단을 취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신문의 관련 기사들이다.

3천만이 주시하에 20일부터 속개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측 대표 일행은 금 18일 경성에 도착할 예정이라 한다 (소측 대표 18일경 도착예정).

5월 20일 재개될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할 소련대표 선견(先遣)연락원 「버드그로노프」중좌 이하 3명은 조선인 및 소련인 통역 각 1명을 대동하고 미군연락장교 1명과 같이 16일 오전 10시 임시열차 1022호로 평양을 출발하여 오후 4시 50분 경성역에 안착하였다. 오래간만에 다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여 다수의 미군장교가 역두에 출영하였으며 영화반도 이 광경을 기록코자 활동하다.

열차에서 내린 「버드그로노프」중좌 「루드킨」소좌 등은 미군장교와 악수하고 화기에 애한 가운데 17일 오전 8시 반 재회를 약속하고 소 연락단은 숙소로 향하였다(소

40) 인용기사의 진한 글씨는 강조를 위해 연구자가 첨가한 것임. 이하 같음.

선견(先遣) 연락원 3씨 작일 입경).

20일 스티코프를 비롯한 소련대표단이 도착했을 때는 <동아일보>는 21일자에 톱기사로, <조선일보>는 3단 크기 기사로 게재했다. 다음 위는 <동아일보>, 아래는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다.

막부로부터의 소(蘇)수석대표가 북방의 천후(天候)관계로 입경이 천연되어 공위의 20일 재개도 연기되고 있던 바 20일 하오 3시 45분 직접 공로로 김포비행장에 「스티코프」 소 수석대표가 단신 도착하였고 동(同)일 하오 4시경에는 평양으로부터 특별열차로 공위의 소측 대표단 일행 70여명이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미소의 양 대표진은 전부 서울에 도착하였으므로 공위의 정식 개회는 불일(不日)내로 개막될 것으로 추측된다 (스티코프 소 수석대표 김포비행장 도착. 소대표단 70여명도 서울역 착).

남북조선 3천만 인민의 절대한 기대리에 수일중 서울덕수궁 석조전에 재개될 미소공위에 출석할 소련측 대표 제 2진 「바라사노프」소장 「레오스테트」소장 등 일행 20여명은 20일 오전 9시경 평양기관구 「미가하」271호 기관차 급 4량의 특별전망차에 올라 녹음이 바야흐로 무르녹는 경의선을 남하, 동일 오후 4시 15분 경성역 제1번 홈에 도착하였다. 이 빈객을 맞이하는 경성역과 남대문통은 수도청관하 천여명의 경관대가 아침부터 삼엄한 경계진을 펴고 특히 역전 광장에는 장갑자동차 2대가 무장한 MP와 함께 엄중한 경계망을 원래의 빈객에 대해 자못 긴장한 경의를 표하였다. (중략) 사진촬영이 끝난 것을 본 일동은 역장 이종림씨의 선도로 계단을 올라 귀빈실 낭하를 지나 수만시민이 멀리 긴장하여 주시중인 역 정문 앞에 나아갔다. (중략) 역전에 대기중이든 미군제 161489호 차를 비롯한 6대의 승용차에 「바라사노프」 소장 「레비타프」씨(소련 외무성 파견원) 「레오스테트」소장 「마스로와」여사(통역) 등 소측 위원 일동은 출영 나온 미측 위원과 함께 4시51분 덕수궁을 거쳐 숙소 정릉 구 신탁은행 두취 사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석대표 「쓰타코프」중장과 「퉁키프」중장은 오후 4시경 「뿌라운」 소장 환영리에 김포비행장에 도착하는데 일단 소영사관에 들어갔다(소측 대표단 20일 입경).

오후 일찍 제작해 당일 저녁에 배포하는 석간인 <동아일보>로서 20일 도착하는 소련대표단의 소식을 당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가치가 크다고 보고 톱기사로 게재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일행 도착 전 기사를 쓰다 보니 사실(fact)만을 전한 건조한 기사가 됐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조간으로서 서울역 도착 일행은 상세히 취재했으나 스티코프를 비롯한 김포비행장 도착 일행에 대해서는 마감시간 때문에 역시 건조한 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공위 재개 후

소련대표단 도착지연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은 5월 21일 미소공위가 재개된 뒤 두

신문은 22일자에 하지와 스티코프의 미소공위 개회사를 실었는데 미소의 입장 차이가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는 “미소 양국은 서한을 교환한 결과 의사발표 자유의 민주적 원칙 하에서 모스크바 결정을 이행하도록 결정되었다”고 말해 모스크바 결정보다 의사표시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스티코프는 “모스크바 결정을 신속히 또는 정확히 실천함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신문의 5월 24일자 1면 톱기사를 각각 살펴보면 각각 미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마셜 국무장관의 특사 펜필드의 말을 인용해 ‘임정수립 후 다수 반탁이면 4국 관위(管委)에서 결정’이란 제목으로 ‘신탁통치 반대’라는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국무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막부협정 실천이 미의 대(對)조선 최고정책’이란 제목으로 모스크바 결정의 정확한 실천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미국정부 내에서도 한반도정책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미소공위 회의는 양측 대표단이 통역만을 참석시키고 진행했기 때문에 취재할 길이 막혀있었다. 미국계 신문과 통신 특파원은 미국대표단을 접촉해 취재했고, 한국 기자들은 처음에는 이들이 취재한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간접 취재할 수밖에 없었다(합동통신사사편집위원회, 1975, 13쪽).

두 신문은 간접 취재도 어려울 경우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를 전재했지만 제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두 신문은 서울주재 UP특파원이 브라운 미국대표단 수석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5월 24일자에 똑같이 실었다. 다음은 <동아일보>에 실린 UP특파원 보도 전문이다.

[서울 UP특파원 릿치 제공] 미소공동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석조전내 회장에서 제1차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오후 5시전에 동 회의를 끝냈는데 미국수석대표 엘리트 브라운 소장은 동일의 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국 대표는 신문의 자유와 정보 전파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제외하고는 의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취급하였다.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미국 대표단은 신문에 관한 제안을 소련대표에게 제출하였다. 이 문제는 23일 오후의 회의에서 토의될 것이다. **미소 간에 일방적 성명 또는 발표에 관하여 협정이 성립될 때까지 이 이상의 정보는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의 게재내용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진한 글씨 부분을 생략했을 뿐 똑같다. <동아일보>는 ‘미측 보도자유 제안’이란 제목을,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22일 회의내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가 미국대표단이 보도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사표시와 언론의 자유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련해 미소 간에는 언론과 정보의 자

유문제(freedom of the press and of information)로 대립이 계속됐다. 이 같은 제목은 모스크바결정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즉 신탁통치반대라는 의사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제목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미소공위 회의진행과 관련한 같은 날짜의 신문사 자체 기사는 <동아일보>가 ‘공보부 발표’라고 짧게 1단으로 보도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공위경과는 우호적’이란 제목으로 2단 기사를 실었다. 미소공위의 성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두 신문은 5월 25일자에 보도자유를 주장한 <뉴욕타임스> 사설내용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공위내용 매일 알아야 한다. 보도자유제안은 지당’이란 제목으로 실었고, <조선일보>는 ‘보도자유인정은 당연’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 제목에서도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자유를 주장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 기간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가 미소공위에 대해 보도자유를 더 강조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동아일보>는 5월 30일자에 만화를 실어 미소공위 비공개 원칙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공위는 오늘도 비공개. 내일은 공개하려는가. 신문기자의 초조한 심사’란 제목의 이 만화는 “문전의 소식이 해외에서 AP UP의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판”이라며 “인민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민주정치하의 미소공위는 어제도 오늘도 비공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미소공위 성공에 대한 관심은 미국측 수석대표인 브라운의 집에서 24일 열린 각테일파티 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 신문은 27일자 ‘공위 성공을 축원코 악수대화도 명랑. 뿌 소장의 각텔 파티 성황’이란 제목으로 브라운과 스티코프를 비롯한 양국대표, 하지와 미군정장관 러취 등이 참석한 각테일파티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대조적으로 ‘소 대표 환영. 부라운 소장 저택에서’라는 제목으로 무미건조하고 짧게 게재했다.

미소공위가 한해 전 결렬의 원인이었던 협의대상문제에 합의해 6월 11일 공동성명 11호를 발표하자 두 신문은 크게 보도했다.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5월 31일 본회의에서 주요문제가 해결됐을 때 상세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 규정’을 담은 공동성명 11호는 미소 양측 타협의 산물이었다. ‘공보부 특별발표’에 따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6월 12일자 신문에 게재됐다. <동아일보>는 ‘임정수립기준 결정. 남북인의 의견을 청취’란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임시정부 수립에 목표를 형성. 현장과 정장에 관한 민족의 의견과 요망을 결정’이란 제목으로 성명 내용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3상 결정에 의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을 지향”, “극히 타협적인 태도로서 신중한 토의를 거듭”, “가장 난관시 되었든 협의대상 규정문제에 있어서도 최후적 완전한 합의”, “쾌속조로

그 진전을 보게 되었다” 등의 표현으로 그 의미와 진행과정 분위기를 <동아일보>보다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한국여론협회의 여론조사결과도 게재했다. 미소공위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이 신문은 미소공위 성공전망을 낙관하고 단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사회에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지 않았다.

공위재개 이후 <동아일보>는 소련이나 소련대표단을 소극적으로 취재하고 미소공위에 대해서도 움직임만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면서 미측의 주장인 자유의사표시만을 지지했다고 해석된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소련대표단을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미소공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 중기-협력과 갈등

(1) 미소협력 속 소련대표단에 대한 태도

미소가 합의해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의대상 규정을 공동성명 11호로 발표한 뒤 <동아일보>는 한동안 소련과 소측대표단 수석대표 스티코프에 우호적인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발표기사 위주로 보도하면서도 11호 성명발표 사흘 뒤인 6월 14일자에는 11호 성명으로 가시화된 임시정부에 대한 기대를 만평으로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톱 박스 기사로 남북의 미소공위 회의장소인 서울 덕수궁과 평양의 도산리를 언급하면서 발라사노프⁴¹⁾의 평양출장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발라사노프의 평양행을 1단 스트레이트 기사로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실망의 고개를 넘어 제2단계에 돌입’ ‘낙관적 기대’란 말로 미소공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발라사노프가 북한 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 질문절차 건으로 평양으로 간 것으로 추측했다. <동아일보>가 제3분과위원장으로서의 발라사노프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금일까지의 단순한 경과보고만의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미소공위 성공 기대를 고조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발라사노프가 평양에 간 사실을 방문목적과 함께 간단히 전했다.

41) 발라사노프는 소련 외무부에 소속된 외교관으로 북한주둔소련군사령부에 파견돼 정치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미소공위 1차 회기에서 번스를 상대했다(김학준, 2008, 551쪽); 발라사노프가 KGB 소속으로 해방전까지 도쿄주재 소련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1946년 2월부터 평양주재 KGB본부 책임자가 됐다는 설명도 있다. 대외직명은 소군정 사령부 정치고문이었다. 발라사노프가 제2차 미소공위 중인 1947년 8월 평양의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군정 최고지도부와 북한지도자를 대상으로 ‘남조선 단독정부수립 획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사진도 남아있다(중앙일보특별취재반, 1993, 245쪽, 251쪽).

두 신문은 13일자에 이들 기사와 함께 공동공보 제4호를 전재했다. <동아일보>는 공동공보 4호 기사에서 “견고히 굳어가는 콩트리트 기초공사 위에 순서에 따라서 마련된 주초와 기둥, 그리고 들보가 착착 배치되어 이제는 우리도 정부가 있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서 살아보게 될 것”이라고 임정수립이 곧 실현될 것처럼 표현했다. 이 기사는 발라사노프의 평양행 기사와 함께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을 한껏 부풀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공동공보 4호 기사를 톱기사로 크게 게재했을 뿐 그 내용을 건조하게 전했다.

<동아일보>는 13일자부터 15일자까지 스티코프의 사진을 잇달아 게재했다. 13일에는 11호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하지 및 브라운과 찍은 사진을, 14일자에는 인터뷰 사진을, 15일자엔 하지 및 김구와 찍은 사진을 실었다. 이 신문은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련대표단에 대해 다소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해석된다. 이 신문은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스티코프를 단독 인터뷰했다. 인터뷰기사는 스티코프가 일본과 독일을 정복한 개선장군이라기보다 온후한 신사의 인상을 가졌다고 전했다. 스티코프가 약속했던 국내기자단과의 회견은 즉시 열리지 못했고, 미소공위난관에 봉착한 평양회의 후인 7월 12일 열렸다.

두 신문은 6월 17일자에 서울시주최로 13일 열린 미소공위대표 환영만찬회에서의 스티코프 연설을 실었다. 스티코프는 모스크바 결정의 엄수를 강조했다. 스티코프의 연설에 대해 <동아일보>는 ‘외국간섭 받지 않는 민주임정을 수립’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임정수립에 노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기사제목과 같은 문구는 스티코프 연설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반탁기조를 나타내는 제목을 사용했고, <조선일보>는 임정수립자체에 방점을 둔 제목을 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스티코프의 연설게재 이틀 전인 6월 15일자에 실린 브라운의 연설은 이승만·김구의 반탁운동과 관련해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신문의 관련 기사 제목을 보면 <동아일보>는 ‘진심협력을 요망’이란 제목으로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중요의견제출 안되면. 현장과 정강은 편향화’란 제목으로 실었다. 모두 미소공위참가를 역설하는 브라운의 연설내용을 요약한 제목이었다. 브라운은 미국이 내세우는 광범위한 협의를 위해 우익진영의 참가를 주장한 것이고, 스티코프는 미소공위개회사에서처럼 모스크바 결정의 정확한 실천이란 입장을 반복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미소협력으로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선일보>는 미국과 소련에 대해 균형 있게 보도하면서 임정수립성공 자체에 의미를 준 데 반해 <동아일보>는 소련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했지만 임정수립 못지않게 신탁통치 불가도 관철돼야함을 역설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2) 각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

공동성명 11호에 따라 각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잇달아 열렸다. 두 신문은 6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공위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 합동회의에서 브라운이 발표한 식사(式辭)를 26일자에 게재했는데 <동아일보>는 ‘조선인이 요망하는 정부를 발견결정’이란 제목을, <조선일보>는 ‘임정수립 방도 제정할 막부협정 수행 제1보’란 제목을 각각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수립에, <조선일보>는 모스크바 협정 이행에 방점을 두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6월 30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소공위 각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는 7월 1일 열렸다. 두 신문의 7월 1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오보였다.

미측 위원 링컨 대좌는 출발에 앞서 서울역두에서 평양 예비회담은 맺인 날 개최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30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30일에는 북조선주둔 소군 사령부 요인들과 회견하게 되는 관계상 부득이 1일 연기하여 7월 1일에 개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동아일보, 평양회담 금일 개막).

역사적인 북조선정당 사회단체와의 미소공위 평양 합동회의는 서울로부터 미측 수석대표 「뿌라운」 소장 이하 각 위원을 맞이하여 30일 평양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정각 전부터 회의실 정면 높이 게양된 태극기를 중심으로 미소 양 국기를 우러러 보면서 북조선노동당 김일성 김두봉 양씨를 비롯하여 조선민주당 청우당 3정당 이하 35사회단체의 공위참가를 신청한 38대표와 인민위원회 간부 다수가 열석하여 개회를 대기하는 중에 오후 2시 정각 미측 「뿌라운」소장, 소측 「슈티코프」중장 이하 미소양국 대표위원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하였다. 이리하여 합동식은 사회 「뿌라운」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2시 5분 북조선교향악단의 조미소(朝美蘇) 3국 국가 주악(奏樂)으로 개시되어 이어서 「뿌라운」소장으로부터 「슈티코프」중장을 소개한 후 「슈티코프」중장 인사의 말을 겸한 일대 연설로써 북조선에서의 합동회의를 끝마쳤다. 이로써 미소공위는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의 남조선합동회의와 이날 북조선 전인민과 절대한 협력 밑에 종료된 평양회의와 아울러 남북 호응하여 오는 7월 7일에 개최될 구두협회의 목적을 추진시킬 예비적인 업무를 완전히 성취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공위 북조선 합동회의 30일 평양에서 개최, 북로, 조민, 청우 등 38 전체 회집).

<동아일보>가 링컨을 취재해 미소공위 각 정당·사회단체 합동회의가 7월 1일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나 <조선일보>는 이 회의가 30일 열린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7월 2일자 ‘36차 본회의 처음으로 북조선에서, 합동회의는 1일 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보한 30일의 평양 합동회의는 36차 본회의의 오보”라고 전했으나 오보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보가 발생한 것은 북한의 라디오를 듣고 그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결과⁴²⁾인데 북한 라디오 외에는 취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³⁾.

6월 30일⁴⁴⁾ 있었던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 코로트코프의 환영사와 브라운 및 스티코프의 연설은 공보부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됐다. 브라운의 연설은 7월 2일자에, 코로트코프와 스티코프 연설은 7월 4일자에 게재됐다. 두 신문이 이들의 연설을 제목만 달리해 똑같이 연설내용을 실은 것은 공보부 발표 외에 취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신문 모두 제목을 통해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평양회의

신문에서 미소공위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조짐이 나타난 것은 7월 6일자 기사부터였다. <동아일보>는 6일자 중간 톱기사에서 ‘평양본회 합의미달. 협의단체의 명부 검토로. 구두협의로 연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공보부 특별발표를 기사화한 것이다. <조선일보>도 공보부 특별발표를 6일자 톱기사로 게재했다. 그러나 제목이 ‘2, 3 양일 평양에서 본회의 개최, 소련군 측의 후의에 감사’였다. <조선일보>는 브라운의 평양회의 경과 발표를 <동아일보>와 똑같이 기사화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구두협의를 관련해서도 ‘구두협의로 연기. 7월 7일에 본회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가 ‘구두협의로 연기’라는 제목으로 비관적 분위기를 전한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5일 서울 발 <뉴욕타임스> 6일자 기사에 따르면 공보부 특별발표는 성명서(statement)형식이었다. 미국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4일 금요일 새벽이었다. 공보부 특별발표는 5일에 있었다. 월요일인 7일로 예정돼 있었던 본격적인 구두협의를 각 정당사회단체의 답신서 제출 마감일자가 1일에서 5일로 연기됨에 따라 역시 연기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들 공보부 발표 외에 보도자료(press release) 배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브라운은 보도자료에서 ‘미소공위 재개 이후 미소 양국 대표 사이에 광범위한 협의 원칙적응에 관해 완전한 의견일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42) <경향신문> 7월 2일자는 “작보 북조선라디오방송에 의한 30일의 북조선대표들과의 공위합동회의는 평양에서 열린 공위 제36차 본회의의 오보로 1일 중앙청공보부에서는 이 회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30일 예정의 합동회의는 1일에 개최되었다한다.”고 보도해 오보의 원인이 북조선 라디오를 청취해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임을 밝혔다.

43)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은 7월 1일자에 해방통신을 인용해 이 행사를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노력인민>은 미소공위가 재개된 지 한 달 뒤인 6월 19일자로 장간됐다.

44) 6월 30일 오후 2시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북한지역에서의 공위개막을 알리는 본회의와 합동회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공보부가 36차 본회의라고 밝혔으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행사내용은 6월 25일 남측 합동회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서용규(중앙일보특별취재반, 1993, 276-277쪽)에 따르면 합동회의는 6월 30일과 7월 1일 열렸으며 첫날 회의는 스티코프의 식사(武辭)와 브라운의 개회사로 막을 내렸고 그 뒤 공위개막을 축하하는 평양시민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노력인민> 7월 3일자는 스티코프가 1일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식사요지를 실고 있다. 이 신문은 같은 일자에 30일 오후 4시반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시민대회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이같이 미소공위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 기사는 국내 신문에 7월 8일자에 실렸다. 7일이 월요일 휴간이어서 8일자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미소공위 기사가 게재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톱기사로 ‘민주주의 정의 또 문제. 구두협외 무기연기’와 ‘협외대상문제로 미소공위 동요?’란 제목의 기사들을 나란히 올렸다. 그러나 직접 취재가 아니라 서울주재 UP특과원과 AP특과원 기사였다. UP특과원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언급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국내 신문들이 통신 기사에 의존했다는 점은 미소공위 취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UP특과원은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소 양 대표는 또한 모스크바결정 중의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정의에 관하여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소련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협의 범위를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서울에서 427단체⁴⁵⁾로부터 협의 참가 신청을 수락했는데 평양에서는 정식 공위회의에 3개 정당과 35개 사회단체만이 출석했다는 것이다. AP특과원은 브라운이 자신에게 “소련 측은 공위에서 모 정치단체와의 협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기사를 톱기사로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같이 AP특과원 기사도 실었으나 톱기사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실었다. 석간인 <동아일보>보다 기사 마감시간이 늦어 통신 기사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취재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톱기사에서 “북조선의 38 정당 사회단체에 비하여 남조선 399 (답신안을 제출한 수) 정당 단체⁴⁶⁾ 중에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허다할뿐더러 모스크바 협정을 끝까지 반대하여오던 정당단체가 있다”는 소련대표단의 주장을 소개했다. AP특과원이 보도한 ‘모 정치단체’와 <조선일보> 취재 기사의 ‘모스크바 협정을 끝까지 반대하여 오던 정당단체’가 같은 단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평양에서의 미소공위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7월 5일자와 8일자 기사로 북한 조만식 조만식의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이 조만식의 근황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한민당 김성수가 미국대표단에게 조만식이 평양 합동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6월 20일자에 김성수가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월 6일자 기사에서 브라운이 조만식과 회담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시간에 걸쳐 회담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평양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만식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두 신문은 미국대표단 일행이 평양을 다녀온 인상기를 AP특과원 보도로 7월 8일

45) 서울에서 협의참가를 신청한 정당 단체는 425개다(정용욱, 2003b).

46) 서울에서 답신안을 제출한 정당 단체는 397개다(정용욱, 2003b).

자에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소련군은 우리를 감시. 요인 외는 미인(美人) 접촉 불능’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미측 대표의 평양인상담’이란 제목으로 실었다. <동아일보>가 다시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반해 <조선일보>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제목들로 보인다.

평양회의 이후 대표단을 포함해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수락할만한 협상조건에 의한 합의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Matray, 1985, 149쪽; 박찬표, 2007, 294쪽)⁴⁷. 평양에서의 미소공위 경과와 관련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기사의 제목을 달리함으로써 미소공위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소련에 대해 다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소갈등의 원인을 소련측에 전가하려는 조짐을 나타내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소련대표단을 자체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로 정보전달에 역점을 둔 것이 확인됐다.

3) 후기-미소공위 파국

(1) 재개된 서울회의

두 신문은 7월 9일자에 미국대표단⁴⁸의 관측통을 인용해 미소공위 기사를 톱기사로 올렸다. <동아일보>는 ‘미측 권위 있는 모 읍서버’의 말을 인용해 “결정적 진전을 조선에 실현하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전도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을 것인데 현재 당면한 협의대상문제는 합의 불가능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미대표단 측근자가 ‘현재 당면한 협의대상문제는 합의 불가능을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암초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고 관측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자의 말이 <동아일보>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아일보>의 취재원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측된다.

브라운은 단독으로 7월 12일 공보부를 통해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의 명단작성’과 관련한 특별발표를 했다⁴⁹. 두 신문은 13일자에 발표문을 전재하면서 톱기사로 그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처음 보는 난관에 봉착’, ‘작년 오월에 회담 결렬의 도화선’, ‘작년 결렬 당시에 방불한 의견대립을 되풀이’, ‘그 달성의 희망이 박약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미소공위의 비관적 분위기를 전했다. 더구나 ‘소측은 차등 단체 중 반탁계열의 일부분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주장’이

47) 매트레이(Matray)는 미소공위 경과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1947년 7월 6일자를 주석으로 달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찬표는 미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가 북한에서 사실상 소비에트화 작업이 끝났다고 파악하고 단정 수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본국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48) <뉴욕타임스>는 7월 6일자 신문부터 미소공위가 평양회의이후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월 16일자부터 반복해서 정확하게 7월 2일 회의이후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49) <뉴욕타임스> 7월 11일자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7월 2일 평양회의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소련측이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합의를 깨뜨린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란 내용은 발표문에도 없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기사 뒤에 ‘북조선 청원자는 인위(人委) 대변인, 남조선 청원자는 민중 대변인’이란 제목으로 발표문을 전재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 이어 발표문을 전재하면서도 제목 없이 ‘공보부 특별발표’라고 써서 불편부당의 태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스티코프는 브라운의 발표가 있던 7월 12일 미소공위재개 이후 처음으로 국내 기자단과 회견했다. 이 기자회견은 <동아일보>에는 실리지 않았고 <조선일보> 13일자에 ‘제외문제 상미(尙未) 토의’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남로당기관지 <노력인민>은 13일자 1면 톱기사로 기자회견을 전재했다. <조선일보>기사에 따르면 ‘여론이 공위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스티코프는 “조선출판물에서 어떤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을 보았다”⁵⁰⁾며 “인민들이 어느 정당과 단체가 자기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스티코프는 좌익성향의 신문들이 우익, 특히 한민당을 협의대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스티코프는 이 같은 신문들의 주장을 자신들은 인민의 요구로 생각하고 있으며, 공위에서 이 여론을 반영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반탁계열 제외’란 스티코프의 주장을 기사에 넣어 소극적으로 반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스티코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조선일보>가 정보전달에 충실한데 반해 <동아일보>는 스티코프 기자회견을 게재하지 않아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2) 성명전

① 반탁의사 표시는 자유 vs 반탁진영 제외해야

미소대표단의 본격적인 성명전은 7월 16일 브라운이 양측의 대립된 견해를 조목별로 발표하고 소련대표단을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17일자에 ‘공위대상 선정에 소(蘇) 거부권행사 주장. 불안(不安)중 회의는 속개’란 제목으로 실었다. 제목에서 나타난 ‘거부권’이란 미국대표단의 표현으로, 미측은 소측이 협상대상 선정에서 반탁진영을 제외시키기 위해 이 같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시작부분부터 ‘의견대립이 심각’, ‘격렬한 논전’, ‘낙관할 수 없는 정돈상태’, ‘해방조선의 희망 유린’같은 표현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전했다. 1면 전체 지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이 기사는 반탁진영 제외를 주장하

50)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같은 날(1947년 7월 13일자) “소련측은 (반탁단체가) 참가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제시치 않고 다만 서울에서 발행된 조선신문의 보도를 언급하였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한 UP통신 기사를 실었다.; 브라운은 8월 16일 성명에서 “소련측은 모호하게 신문지의 기사를 말하였다”며 “그러나 소련측은 그 신문 기사까지도 제출치 않았으며 또한 증거로서 의사록에 기입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8월 16일 성명도 두 신문에 게재됐다.

는 소측의 주장과 관련해 ‘공위재개 원칙에 위반’이라고 작은 제목을 뽑고, 미측의 주장인 ‘의사표시는 절대자유’라는 또 다른 제목 글씨를 고딕으로 처리해 강조했다. 미측의 주장대로 소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미소공위 난계에 봉착. 협의대상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달리 이 신문은 미소공위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아직도 완전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미소공위의 진전을 염두에 둔 논조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19일자에 이와 관련한 한민당의 담화 발표를 2단 크기로 게재했다. 담화는 김일성, 박헌영, 이관술, 김세용 등을 비난⁵¹⁾하면서 “차등 반연합국적 민족 반역자의 집단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담화를 거의 전재함으로써 그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한민당의 담화 외에도 반탁투위와 독촉의 견해를 실었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5월 ‘반민주진영의 미소공위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 ‘5당’이 7월 18일 미소공위에 공동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메시지는 삼상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좌익진영과 중도파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제안이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실지 않았다.

브라운의 성명에 대한 스티코프의 반박은 7월 21일에 있었다. 스티코프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⁵²⁾. <동아일보>는 22일자에 톱기사로 이 소식을 전하고 23일자에 기자단과의 문답내용을 실었다. 22일자 톱기사는 ‘반탁진(反託陣) 이탈하는 단체만 협의대상으로 인정. 「슈」장군 의연 전설(前說) 고집’이란 제목이었다. 스티코프가 협의대상에서 반탁진영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를 ‘고집’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이틀에 걸쳐 연재한 장문의 성명을 <동아일보>는 절반의 양으로 줄여 22일자에 한꺼번에 게재했다. 특히 반탁투위 부분에 대한 발표문⁵³⁾을 간략하게 요약해 실었다.

51) 이 담화는 “북로당 부위원장 김일성은 1947년 1월 1일 「자유황해」 지상에서 남조선의 미군정은 제국주의적 기만정책을 쓰고 있다고 연합국을 공격하였고 남로당 책임비서 박헌영은 1946년 6월에 2500만 불 차관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전제라고 연합국을 비난하였으며 남로당 재정부장 이관술 등은 900만원 이상의 위조지폐를 발행했고 간부 김세용은 무기를 소지했던 관계상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령이 내려있다”고 소개하면서 “전평은 항상 미국의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이라 공격하고 전농은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여(分與)한다고 농민을 기만하며 지주를 공갈하고 있고 남북조선 민청은 테로의 집단이다”고 비난했다.

52) <뉴욕타임스> 7월 19일자에 따르면 스티코프는 7월 18일에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우익기자들을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노력인민> 7월 19일자에 기자회견 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7월 22일자에 따르면 21일 스티코프의 기자회견에 55명의 한국기자와 5명의 특파원들이 참석했다. 스티코프 기자회견에 미국기자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53) <동아일보>는 반탁투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결정과 모·마 양씨 서한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지장과 파괴밖에 아모른 효과도 없는 소위 반탁계열에 대하여 그들이 반탁투쟁위원회로부터와 탈퇴를 성명하기 전에는 제 5호 성명에 서명하여 공위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다음날 게재된 스티코프의 <동아일보> 기자회견기사(23일자) 제목은 ‘난관극복 가능성’이었다. 질문에서도 “이번 협의문제에 관한 소측의 고집은 거부권 행사로도 보인데”라며 소측의 주장을 ‘소측의 고집’으로 표현했다.

<동아일보>와 달리 스티코프의 반박에 대해 <조선일보>는 충실하게 보도했다. 스티코프의 반박을 담은 이 신문의 22일자 톱기사 제목은 ‘공위 협의대상에 대한 미소간의 상이점’이었다. 발표문에 대해 “작 21일에는 이(브라운의 성명-연구자 주)에 호응하여 소측 수석대표 스티코프 중장으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장문의 발표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22일자와 23일자 톱기사와 중간톱 기사로 상세하게 발표문을 실었다. 반탁투위 부분에 대한 발표문⁵⁴⁾은 <동아일보> 게재 양의 9배였다. 2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스티코프의 기자회견 제목은 ‘거부권행사는 아니다’였다. 질문에서 “청원한 단체를 제외하자는 것은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려함이 아닌가”라며 소측의 주장에 대해 ‘것’이란 중립적 표현을 썼다.

<동아일보>는 24일자에 스티코프 성명에 대한 반응을 실지 않았다. 브라운 성명에 대한 한민당의 담화를 적극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24일자에 독측 담화와 함께 남로당 담화를 실었다. 독측은 “협의대상 문제도 합의했다가도 자(自)측에 불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자유원칙도 권력으로 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는 환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남로당은 “소측 주장이 막부삼상결정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원칙임으로 이것이 공위에서 급속히 실현되

정당 단체라도 이것을 공위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반탁투쟁위원회가 이승만, 김구의 영도 하에 발족한 이래 공위의 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 동(同)위원회의 맹원이라는 입장을 보류(保留)하면서 공위에 참가하여 협의대상의 입장에서 공위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지금 협의대상 명부작성에 관한 소미 양측의 의견 불일치점은 여기에 지적한 반탁계열에 대한 문제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소측은 협의대상문제에 관하여 하등의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도 없는 것을 언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반탁계열에 속하는 분자라도 동 위원회와의 절연을 성명하는 동시에 공위에 대한 태도를 일신한다면 현재의 협의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공위와의 협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의하였다.”

54) <조선일보>는 반탁투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전략) 반탁위원회에 가입한 제정당, 사회단체를 협의에 참가시키지 말 것을 소측 대표는 특별히 주장했다. 공위가 재개된 이후 또는 협의규정에 관한 공위결정의 발표 이후에도 반탁투쟁위원회는 공위와 막부결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중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조선민주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사업을 파괴하려고 그 투쟁을 강화했다는 것을 소측 대표는 지적했다. 반탁위원회에 가입한 제정당 또는 사회단체는 반탁위원회에서 탈퇴함을 성명하기 전까지는 반탁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할 것이다. 다음으로 반탁위원회에 가입한 제정당, 단체는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선에 관한 막부결정을 전적으로 서약할 것이라고 소측 대표는 지적했다. 이상에 지적한 제정당, 단체는 반탁투쟁위원회의 성원으로 속해 있으며 막부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려는 서약을 포함한 반탁위원회 강령에 서명한 대로 주어 두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막부결정을 반대할 투쟁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탁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단체와 반탁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막부결과 공위를 반대하여 투쟁함을 중지하는 경우에서만 이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소측 대표는 성명했다.(중략) 소측 대표 제의에는 협의대상 명부에 기입되지 않은 정당 급 단체도 만일 그들이 제출한 제문서 이외에 첨부할 것을 응한다면 명부에 기입된 정당, 단체와의 협이가 끝난 후에 자기 대표를 통하여 구두협의를 참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 제의에는 반탁위원회에 가입한 정당, 단체도 만일 동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막부결과 공위를 반대하여 투쟁함을 중지할 때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지시했다.(중략)그러므로 구두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 단체 명부작성에 관하여는 제정당 단체 협의의 참가 문제 하나만이 합의를 얻지 못했다(후략).”

어 인민이 요망하는 우리 정부가 하루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지했다.

7월 27일자 국내 조간과 석간에 소측의 반탁진영 제외 주장에 맞서 미측이 이북의 반민주주의 정당단체 제외 주장을 내세웠다는 기사⁵⁵⁾가 일제히 게재됐다. <동아일보>는 이를 ‘북조선 반민주정당 제외를 미측도 주장’이란 제목의 톱기사로 게재한 데 반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기사를 톱기사로 게재하면서도 소측의 반탁진영 제외 주장만을 소개했다. 중립지 <경향신문>과 <서울신문>⁵⁶⁾이 미측의 주장을 보도했고, 좌익지 <독립신보>는 이를 신지 않았다. 발행부수 1,2위로 중립과 좌익신문으로 각각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미국측의 북한 소재 반민주주의 정당단체 제외주장을 게재한 데 반해 <조선일보>가 좌익신문 <독립신보>와 같이 이 기사를 신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편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② 참가단체 제외 절차 마련해야 vs 반탁투쟁 중지하면 참가용인

브라운은 8월 1일에 또다시 성명을 발표해 소련대표단을 비난⁵⁷⁾했다. 협의대상 문제에 대한 미소공위 경과를 발표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2일자에 ‘단독성명’이란 표현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은 ‘미측의 신 제안을 소 토의조차 거부’였다. 미측은 협상타결을 위해 애써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데 소측이 토의조차 안하려한다는 뉘앙스였다. 다음은 이 기사의 앞부분이다.

난항 중의 공위는 근간 12호 성명을 발표하리라고 전문되었으나 양 대표 간의 공동성명 발표 없이 1일 오전 10시 덕수궁에서 미측 수석대표 브라운 소장은 기자단과 회견하고 미국측은 계속하여 합의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었으나 소 측은 7월 27일 회합에서 미측의 제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간단히 거부하였다는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발표의 문답으로서 비공개리에 진행된 작금 공위의 경과와 미측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미측의 **확호(確乎) 부동한 태도를 재천명**하였다.

미측의 신 제안이란 협의를 신청한 모든 정당의 일람표를 만들어 양 대표가 각 정당에 대한 태도를 밝히자는 것이다. 이 기사의 내용에서도 브라운 주장을 지지하는

55) 합동통신이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통신의 설국환이 미소공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버린 휴지 속에서 ‘미소공위회담의 계속이 무가치해졌다...소련이 참석단체의 자격에 그런 조건을 주장한다면(반탁의사를 표명하는 정당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이북에서의 정치 사회단체도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재조사해야할 것 아닌가’하는 브라운의 미소공위 발언내용을 발견하고 추가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합동통신사사편집위원회, 14쪽).

56) 김영희(2009, 159-160쪽)는 1947년 7월 31일자 미군정 분류로 <서울신문>을 좌익, 9월 26일자 분류로는 중립으로 기술했다. 본 연구에서는 7월 27일자에 대해 논의한 것이어서 <서울신문>을 좌익신문으로 보고 분석했다.

57) 매트레이(Matray, 1985, 150쪽)는 1947년 7월 29일 공위에서 스티코프가 미국의 제안들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완전 결렬상태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표현이 발견된다. ‘최선의 노력’ ‘정당성을 강조’ ‘확호부동한 태도를 재천명’라고 한 표현 등이 그것이다. 작은 제목은 ‘소는 반탁진 제외를 고집, 미는 유령단체만을 제외’, ‘양 외상협정에 의해 일방적 제외는 불가’, ‘정부수립에 단일과 독점불가’ 등이었다. 반탁진영을 제외할 경우 좌익일색이 된다는 미측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다. 이 신문은 같은 날 브라운 기자회견 기사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소련대표단의 주장대로하면 ‘파시스트 정부를 조직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브라운의 주장을 ‘일당일파(一黨一派) 정부는 파시스트 정부’라는 제목을 통해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일방적 성명’이란 표현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의 ‘단독성명’이란 표현보다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은 ‘명부 작성 방식에 대한 미국 제안을 소련 거부’였다. 어느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중립적 표현이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앞부분이다.

조선의 정당사회단체를 공위 협의대상으로 참가시키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난 7월 3일 평양에서의 37차 회의이래 근 1개월간 진지한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 미소공위는 협상문제에 대한 합의를 본 듯 관측되었으나 아직도 **미소 양측 간의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어** 작 1일 미측 수석대표 브라운 소장은 작 1일 오전 10시 반덕수궁 회의실에서 7월 16일의 43차 회의이후 회의경위에 관한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관측통에 의거하면 49차 회의까지에 토의된 골자는 소측에서 반탁투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24개 정당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미측에서는 참가를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는 협의대상 명부에 기입한 후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쌍방협의로 **제외하기를 주장하는 동시** 미소 양측의 각각 구두협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일람표의 제외 이유 등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련 측은 7월 29일의 48차 회의에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제목뿐 아니라 기사내용에서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다.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미소 양측 간의 완전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어’ ‘제외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제외하기를 주장하는 동시…작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작은 제목은 없었다. 이 신문도 같은 날 브라운 기자회견 기사도 게재했다. 제목은 ‘일당 전체를 부인. 조선은 전 정당 인민에 소속’이었다. 브라운이 기자의 질문에 “조선은 전조선 정당, 전조선인의 것이지 어느 일개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한 답변에서 나온 제목이었다.<동아일보>가 ‘일당일파’ ‘파시스트’란 자극적 표현을 쓴 것과 대조해 볼 때 중립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운의 성명에 대한 스티코프의 반박은 이틀 뒤인 2일에 있었다. 스티코프는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브라운과 같이 협의대상 문제에 대한 경과를 발표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3일자에 중간톱 기사로 성명발표 소식을 전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신지 않았다. ‘반탁진(反託陣) 제외코 협의하자는 소측 제안을 미

거부'란 제목의 스티코프 성명 발표 기사는 브라운 성명과 스티코프 성명을 대비해 표현했다. 브라운 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주장의 정당성과 강경한 태도를 재천명”한 것으로 설명했고, 스티코프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서술했다. 성명에 ‘반탁진영이 반탁투위에서 탈퇴하면 참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통고하자는 소추의 제안을 미측이 거부했다’는 내용은 제목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브라운의 성명에서처럼 작은 제목으로 발표주체의 주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스티코프 성명 발표 소식을 다루면서 기사 크기와 표현에서 브라운 성명발표 기사와 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도 3일자에 스티코프의 성명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브라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톱기사로 게재했다. 브라운 경우처럼 ‘소추 수석대표 역시 일방적 성명 발표’란 비판적 표현을 사용했다. ‘반탁 투쟁 중지한다면 협의에 참가함을 용인’이라는 제목의 기사 게재 양은 <동아일보>의 5배였다. 브라운 성명 기사처럼 작은 제목을 달지 않아 균형을 맞췄다. 성명 내용을 중립적으로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표현에 있어서도 ‘당면한 문제를 계속 토의’ ‘미측 발표에 호응’같이 건조하게 서술했다. 스티코프 기자회견 내용은 문답으로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신문은 스티코프 성명 기사를 브라운 성명 기사와 균형을 맞춰 게재했으며, 양측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고 할 수 있다.

③ 반탁은 공위 반대가 아니다 vs 반탁은 공위의 걸림돌

우익진영의 임협이 미소공위에 제출한 서한으로 인해 미소공위에서 반탁의사 표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브라운은 8월 8일과 9일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성명서는 모두 공보부를 통해 발표됐는데, 8일 성명서는 임협의 서한과 함께 공개됐다. 임협은 미소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임협 구성단체이자 반탁투위에 소속한 15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미소공위의 업무에 대해 적극 반대를 선동한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장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⁵⁸⁾. 8일 브라운의 성명서⁵⁹⁾는 ‘이 서한과 관련해 소련측이 대표자들을 불러 질문하겠다는 것을 미측이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브라운의 8일 성명서에 대해 스티코프는 9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로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10일자에 스티코프의 기자회견을, 12일자에 성명서를 각각 2단 크기로 게재했다. 기자회견 기사 제목은 ‘반탁진 제외를 「슈」장군 의견 고집’이었다. 7월 21일 첫 성명전 때 이 신문의 스티코프 기자회견 제목이 ‘반탁진 이탈하는 단체만

58) 임협은 공식적으로 반탁진영이 계획한 6·23 시위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 임협 단체들은 우선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임협의 첫 번째 임무에 착수하려는 공위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과도정부 수립이 우선이고, 반탁은 그 다음 문제였다 (최선웅, 268쪽).

59) <뉴욕타임스>(1947년 8월 8일자)는 브라운이 8월 7일 보도자료를 냈다고 전하면서 소련대표단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협의대상으로 인정. 「슈」장군 의연 전설(前說) 고집'이었다. 기자회견마다 고집을 피우는 스티코프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단 제목으로 볼 수 있다. 12일자 성명서 기사 제목은 '불합의의 책임 미에 전가'였다. 소측의 성명서를 게재하면서 소측이 아니라 미측 주장을 제목에 반영한 결과였다. "스티코프가 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성명서에 대한 설명의 전부였다. 기자회견 게재 후 이틀이나 지나 이 성명서를 게재한 것은 기자회견은 즉석에서 통역이 가능했으나 성명서는 번역에 시간이 걸려 석간마감 시간에 닿지 못했고, 11일자가 월요일 휴간인 관계로 12일자에 요약해 게재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0일자에 역시 스티코프의 기자회견을 싣고, 성명서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간이어서 성명서를 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소측의 성명서를 게재하면서 미측 주장을 제목에 반영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양측의 미합의점, 급속 완전해결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소측의 주장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성명서에 대해서도 "스티코프가 8일의 미측 단독성명에 대하여 소련측의 주장을 천명하는 단독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양측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자회견 제목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와 달리 '공위 성공여부는 양상(兩相) 결정 실천에 의거'라고 함으로써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소측의 주장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반탁진영을 제외해야한다는 소측의 주장과 관련해 <동아일보>에서 보면 소측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조선일보>에서 보면 미소공위 성공을 위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은 9일 또다시 '소련은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10일자 1면 지면의 5분의 4 이상을 브라운 성명서로 채웠다. 이 톱기사의 제목은 '자주독립 위해 반탁은 당연. 공사(公私)불문코 의사발표 자유'였다. 이 기사는 작은 제목으로 '소 주장은 기본협정에 배치', '정부수립에 정당한 참가를 거부' 같은 미측의 기존 주장을 표현했다. 내용에서도 "소련이 하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부터 활자크기를 확대해 강조했다. 제목만 보아도 반탁을 주장하는 것은 의사발표 자유의 측면에서 당연한데도 소련이 반탁진영의 정당한 참가를 반대한다며 이 성명서는 소련을 비난했고, 이 신문은 발표문을 전재하고 다양한 제목으로 미측의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그 내용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10일자에 이 기사를 '미소협력 가능성, 조선공위서 시현(示現) 요망'이란 제목으로 미측 9일 발표라는 사실을 명기해 게재했다. 이 톱기사 옆에는 앞에서 기술한 '양측의 미합의점, 급속 완전해결을 희망'이란 제목의 소측(스티코프) 9일 발표를 배치했다. 이 같은 기사배치로 반탁진영 포함문제를 둘러싼 미국 측과 소련측의 대립된 견해를 한눈에 제시한 것이다. 이 신문은 브라운 성명 기사에서 "소련측이 막부결정 반대의 시현(示現)인 신탁을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를 공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미국측 위원단은 '신탁에 대한 반대의사 표

현을 모스크바 결의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 조장 선동으로 간과치 않고 이를 조선인민의 우국심으로서의 의사표시로 인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13일자에 브라운 성명에 대한 반응을 1면 톱기사로 게재했다. 임협을 비롯해 조민당, 독촉, 영락기청, 반탁특위 등 우익진영 일색이었다. 기사 제목은 ‘3천만의 진의를 대변’, ‘민족여론 이해한 국제정의의 표시’, ‘거족적 사의(謝意) 불석(不惜)’, ‘소측 고집을 여지없이 반박’이었다. 좌익진영의 견해는 한 단체도 반영되지 않았고 중간파의 견해도 발견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임협과 남로당 견해를 각각 1단 기사로 실었다. 임협 담화는 ‘브라운 성명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강조했고, 남로당 담화는 기자회견 내용을 제목 없이 길게 게재했다.

④ 미소 동시철군은 소련의 남한 적화 음모 vs 미소 동시철군해야 정부 수립 가능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⁶⁰되자 소련대표단은 9월 26일 회의에서 1948년 초까지 한반도안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켜 한국인 스스로가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스티코프의 요청으로 재개된 이날 회의 중 오후 3시 반 성명발표가 있었다. 9월 27일자 석간(26일 오후 제작 배포)에는 이 뉴스가 게재되지 않았는데, 마감시간 이후 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간인 <조선일보>는 27일자에 소측의 동시철병제안을 ‘조선인 정부 자립위해 동시철퇴 용의’란 제목의 톱기사로 실었다. 이 신문은 발표문을 1단부터 9단에 걸쳐 길게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28일자에 ‘동시철병제안. 소측 「슈」장군 성명발표’란 제목의 2단 크기 기사로 게재했다. 이 기사는 성명 뒷부분을 <조선일보>의 절반 미만의 분량으로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지면의 톱기사로 동시철병제안에 대한 주한 미 고위 측 반응을 실었다. 이 기사는 서울주재 AP특파원이 ‘재경(在京) 미 고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통신 기사였다. ‘적색정권기도준비?’란 제목으로 실린 이 기사는 모 고관이 “금번 소측 제안은 소측이 북조선에 설치한 괴뢰정권이 전 조선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데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였다. 이 신문은 이 부분을 활자크기를 확대해 강조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는 실리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북측 정권이 남측까지 공산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군정의 주장을 보도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는 워싱턴 발 AP통신이 전한 미국 현지의 반응을 ‘남조선 지배를 음모’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소련의 의도를 남한까지 점령하겠다는 음모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는 미국여론을 제목으로 강조해 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동시철병제안에 대한 한민당과 조민당의 반응을 게재했다. 좌익진영의 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60) 정용욱(2015, 74쪽)은 1947년 9월 중순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남한단정 수립을 대한정책으로 최종 확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에 국내외 반응을 소개하면서 미 국무성 대변인의 말을 톱기사로 게재했다. 이 기사는 워싱턴 발 AP 통신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미도 숙려할 터. 동시철폐 제안에’란 제목으로 실었다. 국무성 대변인이 “미측은 적당한 사태 하에서 조선으로부터 점령군을 철폐할 용의가 있음을 종래부터 표현해 왔던 만치 금번 소측 제안이 미 국무성에 의하여 숙려될 사실은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⁶¹⁾.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는 실리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미정부에서 철군론 자체가 논쟁이 됐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에 ‘남조선 지배를 음모’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실린, 워싱턴 발 AP통신의 미국 현지 반응 기사는 <조선일보>에는 ‘실질적 행동난망? 소련 측 선전전술에 불과’라는 제목이 달렸다. <조선일보>는 소련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미국여론을 소개하면서도 사실상 소련측의 선전술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민당, 조민당과 함께 김구, 통일당 홍명희, 독촉, 한독당, 신국당, 합위, 근민당, 공화당, 애국여동, 건민회, 사민당의 의견을 실었다. 우익뿐만 아니라 좌익 및 중간파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각 세력의 의견계재에서도 불편부당을 실천하려는 이 신문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아일보>는 소련과 소련대표단에 대해서는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측 입장을 두둔했다. <조선일보>는 소련과 소련대표단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나 미국측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춰 보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미소공위 휴회와 철수

유엔에서 외군철수문제를 토의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대표단은 10월 18일 미소공위를 휴회하고 미소대표단은 각 사령부에서 대기할 것을 제의했다. <동아일보>는 19일자에 ‘유엔 토의 종료까지 공위휴회를 미 제의’란 제목의 2단 기사로 실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발표문을 그대로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19일자에 소측이 “미측의 제안은 공위업무를 조애(阻礙)하는 것으로 봄으로 이를 본국에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소측의 답변까지 게재한 것은 마감시간의 여유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티코프는 10월 20일 브라운과 회견하고 소련정부 지시에 따라 평양으로 돌아가겠다는 답신을 전달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21일자에 ‘본국정부 지시로 소(蘇)대표 평양 향발(向發)’이란 제목의 2단 크기 기사로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미소 공위 재삼(再三) 휴회로. 막부 소대표의 평양귀환을 지령’이란 제목의 3단 크

61) 정용욱(2013, 24쪽)에 따르면 이 시기 미국군부는 주한미군 철군론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미 국무성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 기사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발표기사 말미에 “이로써 삼천만 조선민족의 다대한 기대리에 지난 5월 21일 제2차로 속개된 미소공동위원회도 만 5개월 만에 또다시 무기휴회로 들어가고 조선 문제 해결은 유엔으로 이관케 된 것이다”고 서술해 그 의미를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22일자와 24일자에 이들의 서울 출발 기사를 각각 1단으로 게재했다. 기사 제목은 각각 ‘소대표단 이경(離京)’과 ‘잔류 소측 위원 23일 이경’이었다. 두 기사는 다음과 같다.

미소공위 소측대표단 일행 중 스티코프 장군은 작 21일 하오 1시 김포비행장에서 공로 평양으로 향하였고 발자노프 소장 이하 대표단은 동일 상오 11시발 2293호 차로 북행하였다.

미소공위가 휴회되어 지난 21일 소측위원 대표 「슈티코프」 대장 이하 50여명은 공로와 철로로 각각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돌아갔거니와 재경(在京) 소측 위원 잔류부대를 수송코저 22일 하오 6시 11분 소련임시열차(제1002호)로 소련장교 급 병졸 수명이 경성역에 도착하였는데 동(同) 열차(무개화차 4량)로 23일 상오 11시 25분 소련 장교 수명과 「슈티코프」 대장의 통역관을 포함한 20여명은 재경 소련연락장교와 미군 장교 다수 환송리에 경성역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였다.

이 신문의 22일자 기사는 스티코프와 발라사노프의 서울출발 사실을 간략하게 전했다. 24일자는 22일자와 달리 현장을 취재해 기사화했다. ‘소련장교 급 병졸 수명이 경성역에 도착’ ‘재경 소련연락장교와 미군 장교 다수 환송리’ 같은 표현에서 보듯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2일자에 관련 기사를 2단 크기 기사로 게재했다. ‘소대표단 이경. 작일 공, 육 양로로’란 제목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재개된 미소공위에 소련측 대표로서 출석차 서울에 도착하여 이래 5개월간 곡절 많은 공위 사업을 운영하던 소련측 대표 슈티코프 대장 똥킨 레베데프 바라사노프 등 제 위원들은 본국 정부의 지령에 의하여 미소공위가 또다시 휴회되자 21일 공륙 양로를 취하여 평양으로 향하여 서울을 출발하였다.

즉 소측 수석위원 스티코프 대장 똥킨 레베데프 양 장군은 동일 오후 1시 김포비행장에서 비행기로 출발하고 바라사노프 장군과 아브라멩코 씨는 오전 11시 경성역 발 제 2293호 임시열차(객차 3량 무개차 3량)로 수원 51명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향하여 떠나갔다. 이날 역두에는 공위 미측 제1분과위원장 웨크링 대장을 위시하여 미군장교 대수와 주 경성(京城) 소련연락장교 등이 미군군악대 주악리에 전송하였다.

이 신문은 대표단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수원 51명을 거느리고’ ‘미군군악대 주악

리에 전송'에서보듯 21일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23일 잔류인원의 출국에 대해서는 따로 기사화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10월 22일자에 '서울 발 21일 보도'로 소련대표단의 서울 출발을 전했다. 이 신문은 서울역에 전송하러 나온 한국인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5월 소련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와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한국인중에는 스티코프를 전송하기 위해 김포비행장까지 나온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소련대표단 철수에 대한 보도태도는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소련대표단 도착을 <동아일보>보다 자세하게 서술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잔류인원의 출국에 대해 기사화하지 않아 철수 단계에서 미소공위 회의 자체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미국대표단의 휴회 제의와 소련대표단의 철수와 관련해 <조선일보>보다 기사 크기를 작게 게재했으며 의미설명보다 단순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그 의미까지 전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2. 각 정치세력 보도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1) 확고부동한 이승만과, 갈등하는 우익진영

미소공위 재개에 가장 부정적으로 대응한 정치지도자들은 우익진영의 이승만과 김구였다. 이에 따라 두 우익지도자의 뉴스비중이 커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5월 20일자에서 우익지도자들이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및 미군사령관 하지와 가진 회담 기사를 게재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미소공위재개에 대한 마셜 모로토프 양상(兩相·양국 외무장관-연구자 주)간의 교환서한의 내용은 반탁의 의사표시자유를 확인한다는 제시가 없음에 비추어 반탁자로서의 우익진영의 공위참가여부는 의문시되고 있다. (중략) 18일에는 공위 미측 수석대표 뿌라운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우익정계요인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성수 백남훈 장덕수 서상일 등 제씨가 상오 9시 반부터 약 2시간 덕수궁에서 동(同)소장과 공위참가문제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하는데 동(同)회담에서 뿌라운 소장은 신탁문제는 임정수립 후에 논의될 터이니 우선 임정수립에 참가하라고(중략) **막연한 대답**만을 하였다하며 특히 이 박사는 신탁조항을 삭제하고 의사표시자유를 인정해야만 공위에 참가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리고 19일 하오 1시부터는 하지 중장의 초청을 받아 이승만, 김구, 김성수, 장덕수, 조소앙 등 제씨가 동 중장과 역시 이 문제로 요담하였다고 하며 하지 중장과의

회담 결과 여하에 의하여 우익진영은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공위참가에 대한 최후태도를 결정하리라 한다(「하지」, 「뿌라운」장군과 이 박사 김구씨 등 요담).

이 신문은 미소 외무장관간의 교환서한에서 반탁의사표시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반탁입장의 우익진영이 참가할 것인가 여부는 의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승만,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성수, 백남훈, 장덕수, 서상일이 18일 미소공위 참가문제에 대해 브라운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18일 회담을 이들이 지난 20일자에 실은 이유는 19일 월요일이 휴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브라운이 ‘신탁문제는 임정 수립 후 문제이니 우선 참가하라’고 권유했고, 임정이 신탁을 반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의사표시자유는 인정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승만은 ‘신탁조항을 삭제해야 참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⁶²⁾. 이 기사는 이승만, 김구, 김성수, 장덕수, 조소앙이 19일에는 하지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보도에서 회담 사실만을 전했다. 다음은 이 같은 <조선일보>기사다.

미소공위 재개를 앞두고 국내정계는 활발화하여 삼상결정을 지지하는 정당은 공위에 참가를 이미 표명하고 있거니와 반탁정당 사회단체는 아직 그 태도를 표명치 않은 채 회합이 빈번하던 중 이승만, 김구, 조소앙, 장덕수, 김성수, 백남훈, 조완구씨 등은 18일 오전 9시부터 동 11시경까지 덕수궁에서 공위 미측 수석대표인 「뿌라운」소장과 회담하고 공위 재개에 대하여 의사교환이 있었고 19일에는 「하지」증장의 초청으로 오후 3시부터 반도호텔에서 역시 공위에 관하여 장시간 요담한 바 있었다. 그런데 동 회담 등에서 어느 정도 의사가 소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위재개가 절박한데 아직 그 태도를 결정치 않은 반탁진의 귀추는 극히 주목되는 바이다(공위재개 앞두고 요인회담 빈번).

이 신문은 “반탁정당 사회단체는 아직 그 태도를 표명치 않은 채 회합이 빈번하던 중”이라고 우익진영의 움직임을 설명한 뒤 이승만, 김구, 조소앙, 장덕수, 김성수, 백남훈, 조완구가 18일 브라운과의 회담에서 “공위 재개에 대하여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회담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 <동아일보>와 차이가 있다. 이 기사는 19일 하지와의 회담에 대해서도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요담한 바 있었다”고만 전했다.

하지와의 회담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5월 21일자에도 기사를 실어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우익정계요인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성수, 장덕수 제씨는 하지 증장 요청에 의하여 19일 하오 3시부터 약 2시간여 동 증장과 공위참가문제에 관하여 요담

62) <뉴욕타임스> 1947년 5월 19일자는 브라운과 우익지도자의 18일 회담에 대해 ‘브라운이 신탁통치에 대해 반대하지 말고 미소공위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국당국과 우익진영이 단절상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존스톤 특파원이 쓴 기사다.

한 바 있었는데 신탁조항문제로 원만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하지와 회담한 우익진영의 대표 이승만을 인터뷰해 21일자에 게재했다. 두 신문 모두 하지와 회담내용에 주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신문은 5월 23일자에 이승만과 김구의 미소공위 참가 보류 발표문(공동성명서)를 게재했다. 보류의 뜻은 사실상 반대와 다름없었다. <동아일보>는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 “막부협정의 신탁조항에 대하여는 조선민족으로서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국내 국제적으로 이미 넓이 인식시켜서 그의 삭제를 주장하여 오든 민족독립진영의 지도자”라고 길게 소개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이승만, 김구 양씨는 방금 속회중인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22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로써 천명하였다”고 짧게 설명했다.

두 신문은 5월 27일자에 ‘이승만이 다른 지도자들에게 참가를 권유하고 있으나 자신은 미소공위에 관심은 없다’는 내용의 서울 주재 AP특파원 보도를 전재했는데 제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자유구속은 불수락(不受諾)’이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조선일보>는 ‘공위반대는 아니다’란 제목으로 다른 지도자들의 미소공위 참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차이는 <동아일보>가 반탁에, <조선일보>가 미소공위 참가와 성공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신문은 이어 6월 3일자에 미소공위 불참을 공언한 이승만의 2일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미소공위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소개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자율독립정부 주장을 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가 5일 성명을 발표해 자신들은 미소공위에 참가하지 않겠지만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가여부는 자유라고 밝히자 ‘참가는 자유’(동아일보) ‘공위 참가는 각자의사’(조선일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전했다. 전자는 그동안 이승만의 입장을 충분히 소개했다는 의미에서, 후자는 이승만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익지도자뿐 아니라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가여부는 회의 재개 전후 각 신문으로서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좌익진영과 중간파는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길이라며 미소공위 재개를 적극 지지했고, 우익은 신탁통치문제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우익진영 연합체인 반탁투쟁위원회(반탁투위)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앞서 5월 7일자에 (미소공위를 열 것이 아니라) 즉시 독립시켜 달라는 내용의 담화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14일자에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실었다. 미소공위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반탁투위가 담화를 발표하자 <동아일보>가 재빨리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우익진영의 공위참가 움직임을 먼저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이 신문은 각 진영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5월 16일자에는 한독당 엄우용이 미소공위가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7일자에는 한민당 함상훈이 16일 공위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16일자에는 한민당 김준연이 자유의사표시와 반탁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었다. 연이어 한민당 입장을 밝히는 기사가 게재된 것은 한민당이 전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8일자에 따르면 다음날(17일) 한민당 위원장 김성수가 전날 발표는 한민당의 의사가 아니라는 성명을 낸 것으로 미뤄 이때에도 공위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한민당내의 논란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공위가 재개되기 직전인 21일자 보도에서 ‘공위와 우익진영. 참가여부 금명간 결정’이란 제목으로 이승만·김구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에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이 영수로 있는 민주위원을 비롯해 한민당, 한독당 등이 신탁통치규정 문제로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논란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민당에 대해서는 21일 하오 2시부터, 한독당은 22, 23일에 각각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여부에 대한 최후결정을 지으리라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미소공위 재개직전까지 미소공위 참가를 결정한 것은 한독당 국내파뿐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이미 한민당내의 논란이 발표됐으나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신문은 “일설에 의하면 반탁진영의 일부는 대의명분상으로라도 참가를 거부하고 일부는 전략적으로 참가하여 내부에 들어가 반탁을 주장하는 한편 참가치 않은 부분과 공동전선을 취하여 투쟁하리라고 전한다”고 보도함으로써 우익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동아일보>가 미소공위 참가에 유동적인 우익진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선별해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탁투위 미소공위 불참 결의

5월부터 6월초까지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에 한민당과 한독당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가 많았다. 또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가 한민당이나 이승만의 발표를 많이 게재했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가 우익에 대해 적극 취재하고 발표지면도 많이 할애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승만과 관련한 우익진영 취재를 많이 했는데, 미소공위 회의 재개 후 22, 23일자에 ‘우익 참가 여부. 이 박사 태도에’와 ‘탁치와 민주해석에 대한 회답 기다려 결정. 반탁진의 참가문제 신중’이란 제목으로 잇달아 게재했다. 두 기사에 따르면 이승만, 김구, 조소앙, 조완구, 김성수, 백남훈, 장덕수 등이 20일과 21일 이승만의 돈암장에서 회합해 미소공위 참가 여부를 의논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과 신탁통치규정 문제를 우익진영 연서로 미소공위에 질의한 뒤 그 회답을 기다려 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한민당과 한독당은

이승만의 의견을 기초로 21일과 22일 각각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소공위 참가문제를 의논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미소공위에 질의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회답의 조건이 만족된 때에 미소공위에 참가할 것 등은 이승만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2일 사실상 반대와 다름없는 이승만과 김구의 미소공위 참가 보류 공동성명서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성명서는 또한 미소공위 참가여부를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에 일임한다고 밝혀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23일자에 한민당의 상무위원회 결과를 보도한데 이어 24일자에 이승만·김구의 성명 발표 후 우익진영의 움직임을 게재했다. 한민당과 한독당내의 의견을 먼저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참가문제의 쟁점인 신탁통치규정이나 민주주의의 정의보다는 분열의 현상을 전하는데 집중했고, 앞에서 살펴본 <동아일보>만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기사의 전개도 ‘양론’ ‘토의’ ‘검토’ ‘질의’라는 말로 단순하게 보도했고, 이승만·김구의 성명에 따른 보조일치의 의미도 <동아일보>처럼 어떤 방향으로의 보조일치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24일자에 ‘신탁내용 명시하라’는 제목으로 한민당의 담화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한민당의 이 담화를 게재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4일자에 따르면 반탁투위 산하 단체 대표들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미소공위 참가여부를 논의했는데 <동아일보>는 반탁투위 단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간인 <동아일보>가 회의 전 취재했기 때문에 분위기라도 전하려고 노력한데 반해 조간인 <조선일보>는 아예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두 신문은 25일자에 반탁투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이승만·김구·오세창을 비롯해 산하 59개의 단체⁶³⁾ 대표들이 서명한 질의서와 결의서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이란 제목의 질의서를 전제하고 <조선일보>는 한 군데 중략한 채 게재했다. <동아일보>가 회의 전 예측한 분위기와는 달리 반탁투위 산하 단체 대표들은 결의서를 통해 “양 영도자의 독립노선을 신봉 견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이 틀렸지만 그만큼 우익진영의 분위기 파악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5월 28, 30일자와 6월 3, 5, 7, 10일자 및 <조선일보> 5월 29일자와 6월 3, 6,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구의 한독당은 참가파와 불참파로 나뉘어 내분에 휩싸였고 결국 3당 합당 이전의 총칭 한독당, 국민당,

63)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된 5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족통일총본부,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조선민주당, 독립촉성국민회, 여자국민당, 서북청년회, 전국학생총연맹, 대한노총, 조선불교중앙총무원, 국청, 민중당, 대중당, 애국노인회, 독촉애국부인회, 신진민족협회, 천도교보국당, 한국외교협회, 단군진봉진회, 흑도회, 대종교총본사, 가톨릭총연맹, 한국학생동맹, 전국근로자동맹, 대한독립청년단, 불교청년당, 광복청년회, 대한독촉여자청년단, 한국민족대표외교후원회, 민족대표외교사절후원회, 조선불교중앙총무원, 기독교애련선교단부인부, 대한독촉청총련맹, 전국여성단체총연맹, 전조선문예가협회, 서북학생총연맹, 한국노동자자치연맹, 청년조선총동맹, 기청연합회, 조선청년문필가협회, 한국역사지리협회, 한국군사보급회, 국민회한성지부, 기미독립선언기념회, 삼군청년회, 한국청년회, 북선청년회, 대의청년단, 건군협진회, 승덕동우회, 서북협회, 조선미술협회, 중앙문화협회, 한족회, 함북회, 역도근로단, 팔중동지회, 북강원회, 황해회, 신생회

신한민족당의 3계파로 분리됐다.

반탁투위 산하 단체들의 미소공위 불참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독당과 한민당내에서 참가파와 불참파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6월 1일자로 우익진영의 분위기를 전한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첫 번째 기사에서 국무성 회한의 도착 사실과 함께 이승만이 한민당 간부들에게 미소공위 참가보류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승만이 신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석명(釋明)을 요구한 데 대한 하지의 답신내용을 게재한 뒤,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하의 단체는 미소공위에 불참하고 한독당 일부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실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국무성 답신도착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익진영의 참가 여부는 답신내용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동아일보>와 다른 점은 한민당의 김성수와 장덕수가 이승만을 찾아 미소공위에 참가할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기사에서는 이승만의 보류주장만 언급했을 뿐이다. 이때까지 <동아일보>는 한독당 국내파의 참가주장을 전했을 뿐 한민당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논란을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 6월 3일자에 따르면 미소공위에 신탁통치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문의했던 한민당은 5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지의 회한이 아니라 국무성으로부터 정식 답변이 올 때까지 참가여부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이 기사로 두 신문이 6월 1일자에 소개한 국무성 회한은 하지의 회한이며 하지의 회한으로는 한민당이 이승만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미소공위 참가문제는 우익진영에서 논란이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동아일보>가 이같이 우익진영과 한민당에 대한 기사는 많이 게재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이들에 대한 사실보도에 충실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한민당의 공위 참가

두 신문이 한독당의 내분상황을 시시각각 게재한데 반해 한민당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조심스럽게 보도했다. 미소공위 불참을 결의한 반탁투위 산하 59개 단체들이 6월 4일 자신들의 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두 신문은 6일자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처음으로 장덕수⁶⁴⁾가 미소공위 참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기사는 대책회의를 예고한 4일자 기사와 차이를 보였다. 4일자 기사는 우익진영의 불참분위기를 단순하게 보도했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인 6일자 기사에서는 한민당의 미소공위 참가 움직임으로 우익진영의 분열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를 “임정에 참가하여 반탁투쟁을 계속할 것이냐 불연(不然)이면 임정참가를 거부함으로써 반탁을 관철시킬 것이

64) 최선웅(2013,309쪽)은 장덕수의 미소공위 참여노선은 이승만과 김구로 대표되는 우익진영에서 한민당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장덕수는 이승만·김구와 달리 미소공위 참가라는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나”라며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미소공위에 참가하거나 불참하거나 반탁이란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소공위가 아닌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태도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민당을 고려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 신문은 대책위원회의 이름도 ‘임정수립대책위원회’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한민당이나 우익진영의 움직임에 건조하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우익진영이 미소공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들의 목적도 미소공위 참가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전했다. 이 신문은 한민당의 태도 변화에 관해 <동아일보>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당이 6월 6일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히자 <동아일보>는 7일자 보도에서 기자회견 발표를 ‘반탁정부 되기 위해 협의 참가도 고려’라는 제목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 신문이 같은 날 한독당의 분열 움직임과 관련해 ‘한독분열 결정적. 보수 혁신 양파 의연 암투’라는 부정적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동아일보>가 한민당 태도변화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된 우익진영의 분열을 미화하려한 보도는 이밖에도 다수 나타난다. 이 신문은 한민당 주도로 결성된 임정수립대책위원회가 10일 한독당과 독축이 대표를 소환한 가운데서도 논의를 계속하자 10일자에 ‘긴밀한 연락 하에 표리일체의 행동, 참가과 최후까지 노력’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11일자에는 한민당의 성명서 발표문을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 제목을 ‘반탁정신은 불변. 임정수립엔 참가’라고 함으로써 반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민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12일자에 한민당의 단독참가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민당 참가와 아울러 작추(昨秋) 입법의원 선거시와 같이 참가문제⁶⁵⁾에 있어서도 행동이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기사의 제목을 ‘비(非)참가과와 연락 하. 우익 대부분 공위참가’로 붙임으로써, 우익진영이 대부분 참가할 것이지만 비참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이 이승만 노선과 달리 한민당이 미소공위에 참가하겠다고 나오자, <조선일보>는 참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을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의 입장과 함께 전했다. 7일자에 실은 이 기사는 한민당이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할 기회이며 신탁을 반대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공위에 참가해야 할 것이며 민족진영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부’라는 문구를 <조선일보>는 생략했다. 이 신문은 한민당이 참가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장문의 성명”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성명내용을 짧게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성명서 내용을 자세히 게재한

65) 도진순(1997,117쪽)은 1946년 10월 실시된 입법의원 선거와 관련해 우익진영 각 세력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좌우합작의 결과물인 입법의원에서 다수과를 장악했다. 김구와 한독당은 친일과 독세를 비판하며 좌우합작에 동참하려고 했으나 입법의원 참문제로 당내 분열이 발생했다. 김규식을 비롯한 중간과는 선거에서 실패했지만 합위와 관선의원을 매개로 세력을 구축했다.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 기간 두 신문은 우익진영의 미소공위 참여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동아일보>가 우익진영의 분열을 미화하면서 한민당의 태도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우익진영의 움직임에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보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공위 재개 반기는 좌익 및 중간파

좌익진영의 정당 및 사회단체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5월 3일자에 전평의 메이데이 행사를 미소공위 재개와 연결시켜 ‘공위재개 축하기념대회’로 부르면서 상세하게 보도한데 반해 <동아일보>는 이날 메이데이 행사로서만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 행사를 남로당과 민혁당이 공동 주최했다는 사실은 밝혔으나 미소공위 재개전후 공위 관련 남로당 기사는 한 건도 실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재개가 확정되자 각 진영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우익인 한민당·한독당과 함께 민전과 민전 산하 민혁당의 견해를 게재했다. 2단 크기로 실린 16일자 기사에서 민전은 “우리의 모든 임무는 이 공위를 성공시켜 통일적 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설파한 뒤 “공위 속개는 누가 누구에게 양보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양국의 협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공위 재개를 지지했다. 민혁당은 “공위성공을 방해하는 반동분자는 의연 삼상결정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위전도에 대한 비판을 유포하고 있다”고 우익진영을 비판한 뒤 “삼상결정의 총체적 지지운동을 일층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써 삼상결정에 의한 임정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전의 움직임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5월 17일자와 23일자에 미소공위 축하행사에고 기사를 실었으나 불과 이틀이 지난 뒤 25일자로 행사 취소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에 대해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정당과 사회단체를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기사를 6월 3일자로 게재했다. 이 신문은 7일자 기사에서도 우익인 한민당 및 전국학생총연맹 입장과 함께 민전과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의 입장을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민전은 “미소공위 협의대상으로서 민전 산하단체는 전부 참가시켜야 하고 우익진영에서는 친일·민족반역적 요소가 없는 정당 단체를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공위의 협의대상 비율은 좌우익 5대 5로 할 것’을 주장한 민전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일보>는 5월 23일자에 미소공위 성공을 축원한다는 요지의 민전의 메시지 전달 기사에 이어 6월 7일자에 민전 성명서 전달 기사를 각각 1단 크기로 실었으나 남로당에 대해서는 따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6일 발표된 민전의 성명서에 대해 ‘미소공위의 협의대상 비율은 좌우익이 5대 5가 돼야하며 민전 산하단체는 전부 미소공위에 참가시키라’는 내용을 전하고, <조선일보>와 달리 친일·민족반역

적 정당 및 단체의 제외 주장을 생략해 보도했다.

한편 중간노선의 민주주의독립전선(민독)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5월 첫날 미소공위대책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2단 크기로 실은데 반해 <동아일보>는 1단 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건민회, 사민당, 신진당, 천도교의 미소공위지지 움직임, <조선일보>는 청우당, 문학가동맹, 조선미술동맹, 사민당, 산업건설협의회와 천도교의 움직임을 게재했다. 미소공위 재개와 더불어 중간노선이 주목을 받자 두 신문은 좌우합작위원회(합위) 주석인 김규식의 움직임을 5월 20일자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펜피일드씨 김박사 요담’이란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조미 양측 요인 김 박사를 방문’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미소공위의 재개를 앞두고 생기에 찬 국내정국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대처할 미측 대표단의 동태 역시 긴장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미소공위 미측대표의 고문자격으로 지난 17일 오후 공로로 입경한 마샬 국무장관의 특사이며 현 미국무성 극동국 부국장인 제임스·K·펜피일드 씨는 입경 즉시 하지 중장과 요담을 마치고 동일(同日) 하오 6시 미국 총영사 랜든 씨를 대동하고 멀리 시외 공덕리 미육군병원에서 정양하고 있는 김규식 박사를 방문코 시여의 회담을 하였다. 계속하여 18일 하오 4시 공위 미측 수석대표 브라운 소장도 육군병원으로 김규식 박사를 방문코 장시간 요담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6일에는 하지 중장 고문인 뼈취 중위가 17일 하오에는 김구 씨를 비롯하여 안재홍, 원세훈 씨가 각각 병원으로 김규식 박사를 방문코 회담한 바 있었다.

두 신문 기사를 비교하면 <조선일보> 기사에서 진한 글씨 부분이 생략됐을 뿐 똑같은 것으로 보아 국내 통신 기사를 크레디트를 밝히지 않고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과 김구에 비해서는 태도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기사가치가 작았기 때문에 직접 움직임을 취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⁶⁶⁾.

입법의원 의장이기도 한 김규식의 미소재개 환영 담화는 두 신문이 17일자에 실었다. 두 신문은 이어 25일자에 김규식이 합위 주석 명의로 임시정부수립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서한을 미소공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6월에 들어서도 김규식의 합위를 중심으로 한 남북요인 회합 구상과 확대강화 움직임 기사를 실었다.

두 신문은 합위와는 별도로 중간노선의 정당 사회단체가 5월 23일 미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공협)⁶⁷⁾을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8일 주석에 김규식, 부주석에

66) 도진순(1997, 174쪽)은 미소공위 재개를 계기로 해서 정치정세가 김규식으로 역전될 기미를 보이자 이승만·한민당 진영이 이범성의 ‘2천만원 왜(倭)고리짝 사기사건’에 김규식을 연루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일보> 등 우익신문들이 현란하게 김규식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보도가 입법의원에서 논란이 되자 5월 25일자 관련보도에서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주장한 후에 29일자 신문에 다시 ‘김규식이 사건에 관계가 없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검찰발표를 보도했다.

이극로, 이용진을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이중 김규식이 취임을 거부한 사실은 <동아일보>가 6월 3일자 기사에서 밝혔고, 공협이 공위에 메시지를 전달한 뉴스는 <조선일보>가 6월 8일자에 보도했다.

김규식과 함께 합위를 이끌었던 여운형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이 모두 여운형이 5월 24일 근로인민당을 출범시킨 사실과 근민당이 미소공위에 서한을 전달한 사실은 보도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밖에도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의 회담을 전하고, ‘공위의 협의대상 비율을 정하려는 민전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운형 기자회견 발언도 소개했다.

이 기간 두 신문은 좌익진영과 중간파 보도에서 미온적이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입장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기사가치가 작았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우익진영에 대한 보도와 비교할 때 좌익진영에 대해 소홀하게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동아일보>가 심한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두 신문이 중간파에 대해서는 좌익진영보다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좀 더 중간파에 대해 기사를 더 많이, 우호적으로 게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중기-협력과 갈등

(1) 미소협력 속에서의 우익진영

미소가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의대상 규정에 합의해 그 내용을 6월 11일 공동성명 11호로 발표한 직후인 13일자에 두 신문은 각 진영의 태도를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각 진영의 입장을, <조선일보>는 우익진영의 동향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우익진영의 반탁운동을 “민족적 양심과 본연의 의욕에서 자유의사를 발표하고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당면목표인 임정수립회담에 우선 참가하고 신탁문제는 별개로 투쟁하자는 것이 우익진영 대부분의 경향인 듯하다”며 태도변화를 정당화하려고 강변했다. 이 신문은 이승만과 김구의 반탁운동에 대해서도 “불후의 상아탑적 의의가 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한민당, 한독 일부의 참가파는 현실적 조건에 입각하여 임정수립의 공위에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가하건 불참하건 우익진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공위참가여부. 우익진영의 동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탁치문제는 임정수립 후에 민족총의로 반대하는 동시 국제적 신의에 호소 투쟁함으로써 해결할

67) 정병준(2001,270쪽)은 중간 우익들이 공협을 결성했다고 보았다.

이 타당하다는 견해 하에 고집하는 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참가움직임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불참움직임에 대해서는 ‘고집’이라는 말로 비판하면서 참가움직임에 대해서는 미소공위의 성공을 위한 일보라는 점에서 격려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익진영에 대해 “참가, 불참 양론에서 방황하는 동 진영에서는 결국 참가에 귀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민당의 미소공위 참가에 대해 두 신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우익진영의 참가와 협의체인 임협이 6월 19일 정식으로 결성될 때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반탁세력을 의식한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신탁은 절대배격. 정부는 총선거로. 임협회 개최’란 제목으로 “불참과와 실질적으로 공동투쟁을 전개” “반탁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참가하되 신탁은 절대 배격할 것과 총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보도해 참가과와 불참과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임정 수립대책 협의회. 한민 등 우익 공위 참가’란 제목으로 우익진영이 미소공위 참가를 위해 임협을 결성했다는 사실만을 보도해 미소공위 참가를 위한 진일보에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동아일보>(위)와 <조선일보>(아래)의 해당기사다.

우익진영의 공위 참가과로서 구성된 임정수립대책협의회에서는 19일 상오 11시부터 태고사에서 한민당, 조민당, 대한노총, 청총, 애국부인회 등 참가과 40여 단체 대표 출석 하에 서연희 씨 사회로 제1회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먼저 장덕수 씨의 협의 참가에 관한 대체 설명이 있는 다음 부서결정에 들어가 전반(前般) 발기회에서 선출한 준비위원 함상훈 씨 등 10명을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인선한 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불참과와 실질적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의미에서 임시사무소를 민통 본부에 두기로 하고 반탁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참가하되 신탁은 절대 배격할 것과 총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할 것 등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우익진영의 공위 참가 주장측에서 구성한 임정수립대책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는 19일 오전 11시 시내 태고사에서 한민당 대한노총을 비롯한 60여 정당 사회단체 각 대표가 참석하여 동회를 결성하는 동시 금후 우익진영의 공위 참가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두 신문은 한민당 김성수와 장덕수의 움직임도 기사로 썼다⁶⁸⁾. <조선일보>는 6월 25일자에 김성수와 장덕수가 23일 하지를 방문해 미소공위 참가대표의 자격에 관해

68) 이들의 움직임은 좌익진영의 공격대상이 됐다. 남로당 중앙위원 구재수는 남로당기관지 <노력인민> 7월 8일자 기고에서 “친일파의 원흉이요 반동의 지남 김성수, 장덕수에게 인솔시키어 공위내막에 파송하여 내부로부터 공위발전을 방해하려함이 오늘의 반동진영의 작전설계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사전 타진했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27일자에 이들이 26일 하지를 방문한데 이어 27일에도 헬릭 군정장관 대리와 회견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조선일보>가 방문목적까지 전한 데 반해 <동아일보>는 한민당과 장덕수 등의 주장과 움직임을 시시각각 보도해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두 신문은 우익진영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동아일보>가 반탁세력까지 포함해 우익진영을 대변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참가와 성공에 대한 의미에서 움직임을 보도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2) 공위성공 가능성 속에서의 좌익 및 중간파

미소공위 성공가능성이 예상되면서 6월 중순에는 <동아일보>도 좌익진영의 기사를 비교적 자주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6월 13일자에 공동성명 11호 발표직후 각 진영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좌익에 대해서는 “소련의 대변인 혹은 북조선 정치의 연장을 책하였든 인상을 주지 않았든가”라며 “남로당⁶⁹⁾내의 종파성은 삼당 합동(合同) 후에도 여전 침전되고 있지 않은가”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콤그룹과와 대회파와 분열되어 남로당과 사로당이 병립하였을 때의 북조선결정서⁷⁰⁾가 삼팔 이남의 미군정하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방침이었든가”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좌익의 입장을 소개하면서도 비판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동아일보>는 14일자에 미소공위 제11호 성명에 대해 민전이 산하 정당 및 사회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게재하고, 15일자에는 민전에서 접수한 진정서를 미소공위에 전달한 뉴스를 전했다. 이 신문은 15일자 기사에서 11호 성명 관련 질문서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려했으나 민전 사무국장 홍증식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민전 외에도 중간파 및 좌익진영인 신진당의 김희섭, 조선공화당의 김약수, 인공당의 윤징우 및 청우당의 이응진 견해를 실었다. 민중동맹의 김약수는 나승규와 대립하다 조선공화당을 조직한 참이었다. 6월 1일 민혁당에서 당명을 바꾼 인공당은 민전 소속이었고 대표 김원봉이 민전 의장이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게재한 민전 공동성명서⁷¹⁾ 관련 뉴스 외에도 6월 19일자에 민전 열성자대회에 이어 대표자 회의에서 답신안이 통과된 사실을, 20일자에 전평이 민전 원칙에 따라 답신안을 작성하기로 한 결정을 각각 실었다.

69) 조선공산당의 박헌영과 신민 인민 양당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스탈린 지시에 따라 합당해 1946년 11월 23, 24일 남로당을 만들 때 조공안에서 박헌영의 콤그룹파에 반발한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합당을 당대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해서 ‘대회파’라 불린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 창립회원 14명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박헌영은 일제하 국내 공산주의운동의 핵심인물이었으며 1938년 12월 서울지하공산당 조직인 경성콤그룹에 합류해 그 지도자가 됐다(남시욱, 2009, 48-52쪽).

70) 조공의 ‘대회파’와 신민 인민 양당의 3당 합동 신중과파 사회노동당 창당을 추진했는데 1946년 11월 16일 평양의 북로당 중앙위원회는 박헌영 노선을 지지하면서 사로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해 발표했다(남시욱, 2009, 74-82쪽); 이 결정서는 또 소위 좌우합작을 찬성하며 입법기관의 창립을 지지하는 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서중석, 2002, 480쪽).

71) 좌익지 <독립신보> 6월 14일자에 성명서 전문이 실렸다.

13일 발표된 민전 공동성명서는 ‘11호 성명에 의하면 한민 한독 독촉계열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됐다’고 밝혔으나 두 신문 모두 이 부분을 생략한 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우익진영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판단에서,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보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신문은 남로당에 대한 기사도 게재해 6월 20일자에 남로당이 미소공위 자문서에 대한 답신서를 민전의 답신원칙에 기준해서 작성하고 미소공위 당 대표로 박헌영 부위원장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두 신문은 미소공위 재개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 된 중간파에 대한 기사를 잇달아 실었다. 좌우합작위원회(합위)는 위원들을 보강하는 한편 미소공위 답신안 제출을 계기로 또 다른 협의체인 시국대책협의회(시협) 결성을 추진했다.

<동아일보>는 13일자에 공동성명 11호 발표직후 각 진영의 태도를 소개할 때 중간노선에 대해서는 “현 계단에 있어서 좌우합작(반듯이 김규식, 여운형씨의 합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의 중간노선의 사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중간노선을 평가하면서도 꼭 집어 김규식과 여운형을 언급한 것은 이들을 불편해하면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합위 김봉준의 견해를 덧붙였는데 김봉준은 “남북 좌우대표가 서울과 평양으로 나뉘어 협의할 것을 규정한 11호 성명을 대하게 된 것은 유감천만”이라며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합위나 중간노선에서도 이들과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이 내용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또 19일자에 “지난 15일 교외 모처에서 김규식 씨를 비롯하여 여운형 안재홍 홍명희 씨 등 20여명이 회합하여 시국대책협의회(가칭)를 결성해 중간파의 기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한민당을 위시한 민족진영의 제 단체에까지 흡수공작⁷²⁾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합위의 확충위원 명단을 신고, 시협이 19일 발기대회를 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합위 주석인 김규식이 18일 하지를 방문해 요담했다고 보도했다. 요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⁷³⁾. 공동 주석인 여운형과 관련해서는 여운형이 당수로 있는 근민당이 협의대상에 제한을 둘 것을 미소공위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공위 협의대상 근민당 제한 제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근로인민당에서는 공위협의대상에 관한 요지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다. 협의대상의 자격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혁명적 투쟁을 하여온 국적집단으로서 3상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자에게 우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과, **공위**

72) 김규식은 자금과 조직을 기대하고 한민당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근민당내 좌익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도진순, 1997, 171쪽).

73) 미군정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 김규식과 안재홍은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를 방문해 경찰의 통제 및 부일협력자를 그냥 둔 채 남한 선거를 실시하려는데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도진순, 140쪽). 입법의원에서는 보통선거법이 제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제5호 성명에 서명한 자로서 회원 5천명 이상을 현유하고 있으며 3상 결정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집단 및 3상 결정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 반대 하는 단체와 그 대표자에 있어서도 지목되는 자는 배제할 것.

기사에 나온 근민당의 제안은 민전을 대표로 하는 좌익진영의 주장으로,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진영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근민당이 같은 제안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우익진영에 불리한 기사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21일자에는 ‘근민 등 5당 회합’이란 기사에서 5당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중립지 <경향신문>의 같은 날 기사에 의하면 ‘반 민주진영’의 미소공위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다⁷⁴⁾. 우익진영에 불리한 기사를 또다시 게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성명내용은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움직임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들로부터 일정부분 거리를 두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22일자에 5당 공동코뮤파니케에 대한 기사를 실어 흠집을 내렸다. ‘소위 5당 성명은 근민당의 모략. 민중동맹 반박성명’이란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동(同) 공동 코뮤파니케가 발표된 경유에 대하여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동 코뮤파니케는 근민당 이여성 씨 등의 제안으로 인민 당시의 소위 9정당 회합⁷⁵⁾을 다시 기도한 것인데 민중동맹의 명의를 등장하게 된 것은 동맹맹원인 나승규 씨가 개인의 의사로 이에 참가하여 인쇄물을 각 신문사에 배포한 후 사후 승인을 얻으려다가 거부된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민중동맹의 경우 근민당의 모략에 의해 성명발표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요지다. 즉 나승규 개인이 성명발표에 참가한 뒤 민중동맹의 승인을 얻으려다가 거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문제될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5당’이 중간좌익세력으로서 활동을 같이한 것으로 보아 성명발표는 나승규 개인이 아닌 민중동맹의 의사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은 22일자 기사에서 근민당과 관련해 “종과남로가 호시탐탐 타도의 손을 뻗치니 자칫하면 오른쪽 흰 감투를 쓸까 봐 20일에는 5당 공동코뮤파니케로 한민계열에 스트레이트 펀치 직격을 가하였”다면

74) <경향신문>은 또 ‘5당 공동코뮤파니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성명에 서명한 각 당 대표는 근로인민당 이여성(동석 정백), 민주한독당 김일청 (동석 권태석), 민중동맹 나승규, 사회민주당 장권, 청우당 이석보 등이라고 보도했다.

75) 인민당 이여성의 제의에 따라 1946년 1월 한민당 국민당 인민당 조공 등 4당 대표들이 모여 공동코뮤파니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삼상회의 결정의 정신은 지지하지만 신탁통치는 장래 수립될 정부가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민당과 국민당이 반대해 실효가 됐다(남시욱, 2009,71쪽).

서 복면좌익(覆面左翼)의 여운형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김규식과 가깝다고 해도 근민당과 합위는 이념적으로 얼음과 석탄 같은 사이라고 주장했다. 근민당이 주도한 성명발표가 한민당이 이끄는 우익진영에 대한 공격을 의도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성명 발표 참여정당인 청우당의 담화를 실었다. ‘공위참가 위한 유령단체 배격’이란 제목의 이 담화는 “공위가 순조로 진행되자 일부 부동(浮動)분자들은 협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유령단체를 급조하는 모양”이라며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배격하여야 할 것은 논급할 여지도 없거니와 혹시 약간의 인원을 포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전국적 토대를 가지지 못한 집단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진영은 한민당이 유령단체를 급조했다고 공격하고 있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우익에 유리한 기사를 주로 보도했지만 좌익의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가 한민당이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두 신문은 시험 발족에 대한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앞서 논의한 19일자 기사에 이어 20일자에는 시험 회의가 19일 개최됐다고 보도했으나 19일 시험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20일자 오보는 19일 마감시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7월 3일자에 “금 3일 오후1시반에 시험 결성대회를 개최하리라고 한다”고 보도했고, 3일 시험 결성대회가 열렸다. <조선일보>도 시험 결성대회 기사를 꾸준히 보도했다. 두 신문의 보도는 시험의 움직임은 기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형식적인 중립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동아일보>는 좌익진영의 기사를 이전보다 많이 게재했으나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중간파에 대해서는 견제하려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선별적으로 취재하거나 한 부분을 강조하는 등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좌익진영이나 중간파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등 <동아일보>보다는 균형적으로 기사화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각 세력의 미소공위 협의신청과 답신안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각 정당·사회단체의 움직임 기사를 골고루 실었다. 이 신문은 6월 25일자 ‘공위 성공을 추진하자! 임시정부수립에 우리 책무 다수. 오늘 합동회의를 개최’란 기사에서 “자신들의 일언일구가 공위를 원만하게 성공시키는 추진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의 책임도 지고 있다는 것을 더한층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미소공위에서 남측 협의신청 단체들에게 협의목적과 절차를 소개하는 날이었고 공위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미소공위의 성공을 바랐던 <조선일보>의 의도가 드러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미소공위에 제출된 답신안⁷⁶⁾을 소개하는데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한민당이 주도해 만든 임협의 답신안 내용 전부를 7월 4일자부터 20일자까지 8회에 걸쳐 게재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7월 8일자에 우익진영인 임협, 좌익진영인 민전, 중간파인 합위와 공위대책협의회(공협)의 답신안 개요를 소개했다. 170여 정당단체로 구성된 임협, 남로당을 중심으로 70여 정당단체가 참여한 민전, 중간노선의 합위 및 50여 정당단체로 구성된 공협이 각각 답신안을 제출했다. 이 신문은 정당으로서는 근민당, 청우당, 신한국민당, 사회민주당의 답신안 개요를 실었다. 신한국민당을 제외한 근민당, 청우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코뮌니케를 발표했던 중간좌익의 '5당' 소속이었다. <조선일보>의 답신안 개요 기사를 중심으로 각 진영의 임정수립에 대한 입장⁷⁷⁾을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좌우익 및 중간파의 미소공위 대책협의체와 답신안 개요

진영	협의체	답신안 (1.국호, 2.임정수립형태, 3. 토지정책)
우익	임협	1. 대한민국 2. 국체는 민주공화의 단일국가, 정체는 3권 분립제. 남북총선거에 의한 정부통령 선거, 내각조직. 임시국회 의원 선거로 국회소집해 임시헌장과 선거법 추진하되 협의단체를 통한 민의 반영. 3. 유상매수 유상분배
좌익	민전	1. 조선인민공화국 2. 정당 및 단체가 광범위하게 참가한 민주정부. 인민회의 성립 전 내각제. 총선거에 의한 인민회의 성립 후 대통령 선출. 3.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간	공협	1. 고려공화국 2. 협의대상 정당 및 단체 대표자를 기초로 임시국회 조직 후 대통령 1인, 부통령 2인 선출. 16부 5원장제 채용. 3. 무상몰수 체감대상으로 무상분배
	합위	1. 고려공화국 2. 협의대상 정당 및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임정수립 후 정식정부 완성. 정부대통령제와 15부장제 채용. 3. 몰수 유조건몰수 체감대상으로 무상분여(分與)

76) 제2차 회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협의대상 규정(제11호 공동성명)에 따르면 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 및 단체는 임시정부에 관한 두 개의 답신서를 제출해야했다. 임정의 조직 및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정의 정강에 관한 자문서에 대한 각각의 답신으로 신청정당 및 단체의 입장이 드러난다.

77)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예외 없이 국체로 '민주공화제'를 제시했다. 국호로는 임협이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한다는 뜻에서 '대한민국'을 내놓았고, 민전은 '조선인민공화국', 합위와 공협은 '고려공화국'을 제시했다.

이밖에 다른 신문을 살펴보면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은 7월 7일자 호외 8개면을 통해 남로당의 답신서 내용 전부를 게재했다. 좌익지 <독립신보>는 7월 8일자 신문에 민전의 답신서 개요를 게재했다. 이들과 비교해볼 때 <동아일보>의 답신안 게재는 임협외의 기관지 성격을 가졌다고 풀이된다. <조선일보>의 답신안 게재는 좌익지들이 좌익진영의 답신안만을 게재하는 상황에서 좌우균형을 잡으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파에 대해서는 다른 진영에 대해서보다 우호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후기-미소공위 파국

미소공위가 평양회의 이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면서 각 정치세력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소갈등의 원인은 협의대상 문제였고 먼저 신문을 통해 공개된 중간파와 좌익지도자들의 견해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간파인 김규식(중간우익)과 여운형(중간좌익), 좌익의 김원봉과 허헌의 견해가 7월 9일자로 좌익지에 일제히 실렸다. 이들 견해의 요지는 소련대표단의 주장대로 반탁 및 친일단체, 유령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이 ‘좌우익 4거두의 의견일치’라는 제목으로 4인의 담화를 보도했다. 이 신문 제목은 좌익뿐 아니라 김규식이라는 ‘우익’이 참여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립지 <경향신문>과 우익지 <한성일보>가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지만 좌익지 <독립신보>에도 ‘정계 4거두의 의견 완전일치’란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아 자의견 타의견 김규식, 여운형, 김원봉, 허헌이 8일 동시에 의견을 피력⁷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7월 9일자에 ‘협의대상과 각계 주장’이란 제목으로 합위 김규식과 근민당 여운형, 인공당의 김원봉, 남로당 허헌의 견해라며 이같은 내용을 실었다. 우익으로는 유일하게 한민당 함상훈의 의견을 실었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 대해 ‘협의대상문제로 또다시 다소의 의견불일치에 당면하고 있는 공위에서 친일 및 유령적 정당 사회단체를 제거하라는 주장이 대두되어 8일 각 정당의 견해가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중간 우익’으로 꼽히는 김규식까지 친일파와 유령단체 배제를 들고 나왔다고 소개한 것이다. 이들에 맞서 한민당 함상훈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문제는 박헌영이나 또는 김성수로써 규정⁷⁹⁾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좌익진영에서 민족진영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협의대상으로부터 제외

78) 김규식은 <한성일보> 7월 12일자에 자신은 공산당이 아니라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또 ‘2천만원 왜 고리짝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7월 9일자 <조선일보> <노력인민> <독립신보>에 게재된 입장표명의 내용으로 미뤄 김규식은 우익진영의 공격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79) 미소공위협의대상 문제로 좌익진영과 우익진영이 부딪치면서 좌익지에 박헌영과 김성수에 대한 기사 게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좌익지 <문화일보>는 6월 14일자에 박헌영을 찬양한 ‘위대한 민족의 수령’을, 7월 5-6일자에 김성수를 친일파라며 비난한 ‘김성수여 복죄(伏罪)하라!’를 게재했다. 두 글 모두 연희전문 출신 김상훈 시인이 쓴 것이다.

하라고 주창하고 있는 것은 좌익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4인의 동시 의견 피력을 기사화했다고 볼 때 한민당 함상훈의 의견 게재는 4인의 의견 개진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발행부수 1위의 중립지가 신지 않은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다는 것은 잡지 <신천지>의 신문평처럼 ‘엄정 중립이 신문의 사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7월 10일자에도 협의대상문제와 관련해 청우당과 조선공화당 김약수의 견해를 게재했다. 청우당은 ‘반 민주진영’의 미소공위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는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한 ‘5당’ 중 하나였고, 역시 ‘5당’ 중의 하나인 민중동맹에서 제명돼 조선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김약수였다. 청우당은 이번에도 ‘날조 유행단체 및 2중 조직의 단체, 또는 반민주주의단체 등’의 참여 배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약수는 “사회적 환경 속에 엄연히 존재해 있는 정당단체를 배제하자함은 비민주적”이라고 우익진영 배제 주장을 비난했다. 이는 한민계열 제외주장에 대한 찬반의견을 똑같이 반영하려는 이 신문의 의도로 풀이된다.

좌익진영의 한민당 계열 제외 주장에 맞서 한민당이 남로당 계열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는 7월 12일자에 이 같은 한민당의 11일 성명⁸⁰⁾을 길게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13일자는 “(한민당이) 남로공세에는 일별도 주지 않고 김규식 여운형씨 등 영도하의 중간세력 격파에 중점을 두는 것 같더니 김(규식) 여(운형) 양씨의 남로적 주장의 완강한 반발로 드디어 11일 성명은 남로계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이것을 직충하고 있다”고 논평했다⁸¹⁾. 한민당이 주도해 미소공위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한 임협 성명은 15일 나왔다⁸²⁾. <동아일보>는 16일자에 임협 성명을 ‘반탁진 제외 모략은 공위파괴의 반동’이라는 제목의 3단 크기

80) 7월 11일 발표한 한민당의 성명서는 “조선임정수립에 있어서 민주주의 제 정당 급 사회단체와 협의한다하였으므로 프롤레타리아나 계급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 양노동당, 진평, 진농 등 공산주의 정당 급 사회단체는 공위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4월 8일자 및 5월 2일자 마셜 미국무장관의 서한에는 의사발표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특히 5월 2일자 서한에는 과거 현재에 있어 장래할 조선정부에 대한 견해 여하로써 미소공위와 협조할 용의가 있는 정당단체는 임정 수립하는 협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으므로 신탁반대의 정당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운운 하는 것은 마셜 국무장관의 의사에 위반되는 것이며 작년 미소공위 휴회의 원인을 재연시키려는 의도로서 이것을 고집한다면 공위결렬 및 임정 불(不)수립의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1) <경향신문> 7월 13일자 기사는 “민전은 한민계열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남로의 기관지와 자매지를 총동원하여 공격도 치열하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이어 “단시일에 급조된 산하 단체 등을 긁어모아 일거에 142개의 손을 확보하고 유연한 한민(당)”이라고 비꼬 뒤 “남로공세에는 일별도 주지 않고 김규식 여운형씨 등 영도하의 중간세력 격파에 중점을 두는 것 같더니 김(규식) 여(운형) 양씨의 남로적 주장의 완강한 반발로 드디어 11일 성명은 남로계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이것을 직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또 “민전의 주장과 같이 공위에서 한민계를 제외하고 한민계의 주장과 같이 중간층(한민계의 안목으로는 좌익계열)과 민전계를 제외하면 이남의 협의대상은 영이 되어 공위는 파괴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두개의 작전의도를 분석하면 민전은 자파로의 대중의식 획득이 목적의 급무요, 균정면에 침투되고 있는 중간세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민은 양면작전의 불리를 피하여 예봉을 남로로 전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2) 임협은 ‘일부 좌익계열에서 임협 산하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위협의를 참가한데 대하여 모략적 선전으로서 공위에서 제외하라는 등 국내의 파쟁적 주장을 일삼는 것은 허다한 국제적 난관을 돌파하고 열린 공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민족분열을 재래하는 언동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기사로 게재했다. 이 신문은 “본 협의회 결성 당시에 공동약속으로서 3대 조항을 결의하였으니 제1조는 남북총선거에 의한 임시정부수립이고, 제2조는 그 임시정부는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원조안, 소위 신탁안을 절대 배척케 할 것”이라고 한 임협 성명을 그대로 실었다. <조선일보>는 임협 성명을 16일자에 1단 기사로 게재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원조안을 절대 배척하는 정신에 있어서는 산하 단체가 추호의 변동이 없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였다. <동아일보>가 성명서를 거의 전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일보>는 여운형에 대해 <동아일보>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월 17일자에 근민당 위원장인 여운형의 의견을 게재했다. 여운형은 “미소공위에서 구두협의 대상문제로 약간 난관에 봉착된 모양인데 이것도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다음날인 18일자에 근민당 선전국 발표문을 게재했다. 27일 민전 주최로 열리는 ‘미소공위 성공 임정수립 촉진 시민대회’에 근민당에서도 공동주최로 참가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는 20일자에 민전의 행사의 준비위원회에 대한 기사는 실렸으나 근민당 공동주최에 대한 기사는 없었다. 여운형이 7월 19일 테러로 숨졌을 때 <동아일보>는 20일자 2면에 3단 크기로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씨 피탄에 피살’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2면 중간톱 기사로 실었다. 기사제목은 ‘몽양 여운형씨 피습 별세’였다. <동아일보>보다 <조선일보>가 기사크기나 제목에서 여운형을 예우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7월 27일 열린 민전주최의 시민대회를 29일자 2면에 2단 크기 기사로 게재했다. 중요한 시기에 양측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대한 기사치고는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할 수 있다⁸³⁾. <조선일보>는 1면에 미소대표의 식사⁸⁴⁾를 요약해 실고, 2면에 관련내용을 톱박스 기사로 게재했다. 이 신문은 참여군중 수를 ‘수만’이라고 보도한 <동아일보>와 달리 ‘수십만’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민전 행사 기사를 돋보이게 보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양회의 이후 7월 9일자부터 <조선일보>는 좌익진영 및 중간파의 견해를, <동아일보>는 우익진영의 움직임과 주장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중립적 태도를 잃고 또다른 정파인 중간파에 대해 이전보다 경도됐다고 해석된다. 이때부터 미소대표단의 주장에 대한 좌우익 및 중간파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두 신문의 보도태도도 이전보다 간극이

83) <뉴욕타임스>(1947년 7월 27일자)는 브라운이 좌익행사 초청에 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미측대표단의 말을 인용했다.

84) 브라운은 측사에서 “소측 위원들이 반탁투쟁위원회에 가입한 정당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제안한데서 약간의 난관이 생기었다”며 “그러나 그들 정당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삼상결정 반대의 증거는 없으며 또한 미국 측으로서는 일부 정당을 협의대상에서 거부하는데 동의할 수 없고 어떠한 정당만에 국한한 정부를 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스티코프는 “아직도 남조선에는 공위와 투쟁하는 단체가 있다”면서 “그때(임정수립 후) 삼상결정에 의한 공위를 비방하고 임정수립을 반대하던 자는 진정한 애국자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해외통신과 의견보도

1) 전기-미소공위 재개 전후

(1) 공위 재개 전

제2차 미소공위 활동 재개가 가시화되자 국내 신문들은 해외 통신사를 통해 들어오는 미소공위 재개 움직임과 전망을 소개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1947년 5월 첫날부터 미국 <뉴욕선>의 사실내용을 요약한 뉴욕 발 AP통신 기사를 게재했다. 이 사실이 게재된 시점은 미소공위 재개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소련이 정부차원에서 서한을 한 차례 주고받은 때였다⁸⁵⁾. <뉴욕선>의 사실은 “두 서한은 민주주의 정의에 대한 차이를 더욱 강조한다”며 미소공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차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민주주의적 정권수립을 요구하는 점은 미소가 모두 같지만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권희영, 2013, 114쪽). 이 사실은 모스크바 협정과 관련해 “명료히 기초되지 않은 협정의 적례”라며 “그러나 미소정부가 서한을 교환해 회의를 재개키로 한 것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두 신문이 이 사실의 내용을 소개한 것은 미소공위 재개흐름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독립국가 건설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의 여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셜이 다시 서한을 통해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조건의 확인을 요구하자⁸⁶⁾, <동아일보>는 사실로 지지했다(5월 7일자). ‘공위와 자기반성’이란 제목의 이 사실은 ‘마셜의 서한은 미소 공위 재개 전 의사표시의 자유에 관해 서로 양해에 도달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사실은 미소공위가 임시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신탁통치관련 내용은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의 인식은 1946년 4월 21일자 사실 ‘공동성명 제5호와 우리 태도’에서 취한 입장이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제1차 미소공위에서 ‘모스크바협정 지지서명 단체에 대해

85) 서한을 먼저 보낸 쪽은 마셜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마셜은 4월 8일에 몰로토프 소련외무장관에게 “의사표시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미소공위를 재개할 것을 제의했다. 이것은 소련이 모스크바협정을 반대한 사람들과 정당들 및 사회단체들은 조선인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협의에서 제외돼야한다는 몰로토프 자신의 기존입장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다. 몰로토프는 4월 19일에 답신서한을 보냈다. 몰로토프는 소련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이다. 몰로토프는 “모스크바협정의 정확한 집행의 기초 위에서” 5월 20일에 서울에서 미소공위를 재개하자고 제의했다(김학준, 2008, 725-726쪽).

86) 마셜의 서한은 “한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이 앞으로 자기 나라 정부에 관해 과거에 어떤 의견을 피력했거나 혹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공동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조건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었다(신복룡 편역, 1992, 203-262쪽).

협의자격을 부여한다’(5호 성명)고 선언하자(신복룡 편역, 212-213쪽), 이 사설은 ‘5호 성명으로 미소공위에 참가해 발언할 권리를 획득하게 됐으므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수확’이라고 평가했었다. 이 사설도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를 분리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 후 신탁통치 반대를 정상적인 정치노선으로 삼았던 한민당 현실과의 인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만·김구 세력은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를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모스크바결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했고, 좌익세력은 모스크바결정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했다.⁸⁷⁾ <동아일보>의 태도는 이 같은 한민당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최선웅, 2013, 253-255쪽).

그러나 마셜 장관의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몰로토프 외무장관이 종래의 미국측 수정안을 수락하겠다고 나오자(신복룡 편역, 212-213쪽), <동아일보>는 5월 14일자 사설 ‘몰로토프 외상서한’으로 반박했다. 종래의 미국 측 수정안⁸⁸⁾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반탁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하지 중장 대신 마셜 장관이 나서게 됐으니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논리였다. 이 사설은 반탁의 사표시를 억압하는 것은 비민주적 탄압이라면서 소련이 이에 동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몰로토프 외무장관의 답신에 대해 독립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5월 13일자 해설기사에서 “소련이 미국의 수정안을 승인해 어떤 단체든지 민주주의 정당 단체이면 미소공위에 참가할 수 있다”며 소련의 태도(변화)로서 미소공위가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탁단체의 협의대상 배제’라는 미국의 수정안의 의미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소공위와 소련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신탁통치 규정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뤘다. ‘미소공위 재개’란 이 사설은 “제 난관을 벗어나려는 일념에서 다소간 우리의 자존심에 배치될 염려가 있다하더라도 현하의 국제정세로서는 가장 용이한 노정인 미소공위를 통하는 독립성취의 길을 발견코자”한다고 주장했다. 자존심에 배치된다고 한 것은 신탁통치 규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소공위를 통한 해결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므로 미소공위를 성공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 여하”가 중요한데 임시정부 수립이 “공위 자체보다도 우리의 정당 단체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신탁통치반대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긴데 반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의 성공을 위해 유보할 수 있는 가치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87) 모스크바 협정 보도경향을 연구한 김영희(2000)는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에는 어느 신문이나 신탁통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 같은 태도를 모스크바협정 지지·수용으로 분류했다.

88) 1947년 1월 공개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서한(미국측 수정안)에 따르면 제1차 미소공위에서 제시된 성명 5호에 대한 서명의 의미는 “모스크바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그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교사 선동할 때는 미소공위 협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인식은 제1차 미소공위에서 5호 성명이 나왔을 때 실린 1946년 4월 19일자 사설 ‘제5호 성명’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이 사설은 “지금부터 신탁을 전제로 하고 나선다는 것은 삼상회의 지지의 해석을 그르치는 자라 아니할 수 없음을 지적해 둔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아일보>의 입장과 같이 5호 성명과 신탁통치 문제를 연동시키는 주장에 반대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재개를 앞두고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2) 공위 재개 후

미소공위 재개를 전후해 두 신문은 통신을 통해 입수한 해외 신문분석 기사를 다수 실었는데, 기사 선택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의 성공을 위해 양국의 합의를 강조하는 기사를 선택했고, <동아일보>는 소련에 대한 반감이 담긴 내용을 게재했다. 반(反)이승만 감정을 보인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을 요약한 <조선일보>기사와, 반소 감정을 드러낸 <선데이뉴스>의 사설을 요약한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워싱턴 22일 UP발 조선] (전략)조선독립운동의 실질적 진전은 소련과의 합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승만 박사와 그의 일파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소공동위원회가 1년 동안 휴회한 후 토의를 재개하려는 이때에 이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거의 소련에 역이용될 것이 확실한 소리를 외치고 있다 (조선일보 5월 23일자, 38장벽 제거 수 개년을 필요).

[뉴욕 26일 발 UP 조선] (전략)소련은 미국의 수억 불의 공여를 두려워하고 또한 소련점령지대 내에 맹렬한 반소활동이 발생한 까닭으로 서울에서 미소공동회의를 재개하는데 동의하였다. 「워싱턴」에 도달한 비밀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조선북부의 대부분의 조선인애국자는 소련에 대하여 맹렬히 반항하고 있다하며 소련은 그의 점령지대 내의 제오열 부대를 설치하며 이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5월 27일자, 공위재개에 동의한 소(蘇)사정. 「산데이뉴스」 지의 보도).

<조선일보>가 소개한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은 <동아일보>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 사설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미소가 합의해야하는데도 이승만 세력이 신탁통치반대를 내세워 미소공위에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가 실은 <선데이뉴스>사설은 북한지역에서 반소활동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소공위재개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사설은 <조선일보>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 기간에 <동아일보>가 미소공위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아일보>는 5월 27일자에 미소공위에서 미소가 합의한 9호 성명 발표문(성명서)을 전

하면서 “양측대표의 개회사에서부터 ‘먼저 조선 국민의 고대하는 임시정부 수립에 힘쓰자’는데 일치점을 보게 되어 공위 전도는 낙관되고 있는바…삼천만 조선민족의 기대를 양측 대표가 쌍견에 걸머지고…조선임정수립 구체안을 화기 의의한 가운데 토의 중”이라고 기술했다. 같은 날짜 사설은 “조선의 자주독립이 미소의 최대이익이며 신탁통치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준다면 민주주의 해석문제는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반탁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양국 대표가 화층의 분위기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표현했다. ‘공위와 민족진영’이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우리가 당면한 민주개혁은 민족대다수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봉건적 소유관계와 착취관계와 신분관계를 청소하는 것이요, 이 조선적 현실을 떠나서 민주개혁이란 생각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미국식 민주주의니 소련식 민주주의니 하는 것은 한 개의 추상론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민족 대다수의 자유의사’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한민당이 미소공위 참가를 결정하자 6월 8일자에 게재한 사설 ‘임정과 반탁’에서 “임시정부의 양대 임무는 자유스러운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과 신탁통치의 가부를 토의하는 사업인데 만일 임정이 미소양국의 추장세력(追障勢力)에 의하여 완성된다면 반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익진영의 임정수립 참가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자유스러운 총선거는 우리의 민의를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을 환영하는 바”라고 부연 설명함으로써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는 5월 31일자에 미소공위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측이 중간노선당과 인물과도 협의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주었다. 이 신문은 “(미소) 쌍방의 논쟁은 공위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도래케 하기 위한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쌍방의 진실한 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간 신탁통치 결정에 대해서는 반감을 숨기지 않았으나 미소공위에 대해서는 신탁문제를 유보하는 조건으로서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미소공위나 미소공위의 성공에 호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중기-협력과 갈등

<조선일보>가 사설을 신지 않은데⁸⁹⁾ 반해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미소공위 참가와 더불어 미소공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설을 게재해 지지했다. 6월 15일자 ‘민족진영의 적극성’이란 이 사설은 “한민당이 종래의 반탁을 임시정부에서 전개할 것을 표명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한민당은 임시정부를 총선거에 의한 민

89) 조선일보 사사는 5월 15일(14일자 사설의 착오) 사설이 나가고 닷새 후인 20일부터 4개월간 지면에서 사설과 단평이 사라졌다고 기록했다(조선일보90년사사편찬실,2010,525쪽).

족총의에 의해 수립되어야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자주적 의도를 천명했다”고 추켜세웠다. 사실은 이로써 “잘되면 남북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요, 안되면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⁹⁰⁾이라고 단언했다. 한민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되면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독립국가 건설에서 남한만의 정부라도 받아들여야한다는 한민당의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6월 21, 22일자에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기고한 글을 싣기도 했다.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관하여’란 제목의 이 글은 성명 제5호에 대한 서명과 관련해 “미소공위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소위 적극적 반대를 교사 선동하는 단체는 협의대상으로부터 제외되나 이는 의사발표의 자유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언행을 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한민당은 반탁주장에 일관하였으나 한 번도 미소공위 자체를 거부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⁹¹⁾. 이 글은 특히 남북총선거를 통해 임시정부수립을 제창하고 있으니만큼 이승만 노선을 국제적 협조의 정신아래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⁹²⁾.

<조선일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미소공위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적극 지지한데 반해 <동아일보>는 이 기간에도 한민당의 노선처럼 미소공위와 반탁세력에 걸쳐있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3) 후기-미소공위 파국

평양회의 이후 미소공위의 실패조짐이 나타나고 미소갈등이 부각되자 두 신문의 보도태도 차이도 두드러졌다. 7월 하순 방한한 미국신문기자단 일원인 UP통신 부사장 얼 존슨의 ‘조선시찰기’는 7월 30일자 두 신문에 똑같이 전재됐다. 존슨은 “가장 간단히 말한다면 조선문제는 여하히 이 나라를 소련의 위성국이 되지 않고 조선인에 반환하느냐”고 요약해 미측 주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중간노선의 좌우합작 정부가 될 경우 소련이 친공(親共)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예군을 훈련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있었다(조규하 외, 1972, 284쪽)⁹³⁾

이 기사를 <동아일보>는 ‘소련은 조선을 위성국화 기도, 공위 또 정돈, 공당(共黨)

90) 이 사실이 ‘과도정부’라고 한 것은 미소공위를 통해 수립될 임시정부가 ‘안되면’ 세운다는 점에서 자치정부가 아니라 단독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91) 최선웅(2013,310-311쪽)은 장덕수가 국제주의적 협조노선을 기축으로 미소공위 협의에 참가하려 했다고 보았다. 미소가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미소공위 참여 외에 통일된 과도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장덕수의 실용주의 노선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9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당과 이승만과의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병준은 “한민당이 미소공위에 참가함으로써 이승만을 격분시켰다”며 “이승만이 한민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사람을 파견해야”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2001, 269쪽).

93) 미국측 통역이었던 고정훈은 “소측이 정예군을 훈련 중인 것을 알아차리고 미군정이 부랴부랴 수원에서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을 훈련시켜 이에 대비하려고 했다”(284쪽)고 회상했다.

은 소요공작, 양 사상대립의 초점, 국권상실의 신탁은 배격'이란 제목의 1면 톱기사로 게재했다. 이 제목은 반소반탁의 논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선일보>는 '조선은 미소대립의 초점, 부절(不絶)히 유입하는 파괴분자, 군사력 또한 빈약한 남조선'이란 3단 제목의 기사로 게재했다. 미국 측의 주장을 담았지만 미소공위의 쟁점을 피하려고 노력한 제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소의 성명전에 대해 <동아일보>는 미국대표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실로 일관했다. 7월 한 달간 사실을 게재하지 않던 <동아일보>는 8월 3일자에 협상대상 문제에 대한 브라운의 성명을 지지하는 사실을 게재했다. 브라운 성명은 미측에서 협의를 신청한 모든 정당사회단체의 일람표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소측에서 토의조차 안하고 거부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미국 측은 신 제안을 행하여 절충에 절충을 거듭하여 왔었으나 소련 측에서는 자기네 주장을 절대 고집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였다"며 소측의 주장을 '고집'으로 치부했다. 사실은 미소공위 위기의 책임을 소측에 돌리고 브라운 소장의 성명을 정당하다고 두둔했다. 소련 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해 민주주의적 건국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전에 대한 <동아일보>의 다음 사실은 '소련은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브라운의 8월 9일 성명관련이었다. 이 신문은 12일자 사실 '공위 미대표단의 대성명, 삼천만은 충심으로 감사'란 제목으로 추켜세웠다. 이 사실은 " '그러면 소련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한 구절은 참으로 사건의 진수에 대질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소측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협상대상과 관련한 성명전에 대해서는 사실을 실지 않았다. 이 신문은 해설 기사를 통해서도 미소공위가 성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8월 15일자 '공위 무엇을 했나. 공약명심하고 유종의 미 거두라'는 해설 기사에서 미소공위에 대해 임시정부의 산파역이라는 과업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미소공위는 조선을 해방시켜준 연합국의 신의와 약소민족의 해방이란 약속을 명심해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코프가 8월 20일 회의에서 좌익지도자에 대한 대량 검거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동아일보>는 8월 24일자 사실에서 "내정간섭이며 공위결렬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실은 "(스티코프가) 서울주재(駐在)를 호기회로 계급독재화를 추진시키려 함에 있어서는 진실로 그 불가해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미소공위 결렬을 기정사실화해 4대국 회의를 제안⁹⁴⁾한데 대해 소련이 이를

94) 미국이 8월말 4대국 회의를 제안한 때는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 웨드마이어가 한국을 방문한 때였다. 웨드마이어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머무르면서 한국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서만을 보낸 사람은 이승만 김구 김성수 이시영 안재홍 설의식 등이 눈에 띄고 평범한 장삼이사가 다수였다(정용욱, 2013, 4-5쪽).

거부하자 <동아일보>는 9월 10일자에 사설로 소측을 비난했다. 이 사설은 “자국의 위성국화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소련의 태도라면 백년의 우방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구상되어 있는 모든 기초적 조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 “공위에 대한 무용의 희망으로서 우리의 민생을 더욱 파멸시키고 독립을 더욱 지연시키는 우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동아일보>가 관련 사설을 꾸준히 게재해 공위결렬을 기정사실화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느라 사설을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가 9월 12일자부터 다시 사설을 싣기 시작했다.

소련측이 9월 26일 회의에서 동시철폐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두 신문의 주장은 확연히 갈렸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동시철폐제안을 지지했고 <동아일보>는 역시 사설로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9월 29일자 ‘철폐제외와 미소공위’란 사설에서 소련의 제의를 신탁통치문제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미소공위의 난관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미소공위가 임시정부수립에만 전력을 경주해 유엔결의에 앞서 임정부수립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사설에서는 철폐시기와 관련해 “미소양군의 진주로 인해 일어난 정치적 사회적 제 현상에 대해 미소양국이 책임을 가지고 선후 처리를 한 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신문이 소측의 발표에 대해 ‘조선인 정부 자립위해 소 동시철폐 용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환영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10월 1일자 ‘동시철폐안과 우리의 주장’이란 사설에서 소련이 신탁통치를 고집하면서 회의를 계속하자는 것은 조선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토의되는 것⁹⁵⁾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소련이 유엔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독자적 태도를 취할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신문이 소측 발표에 대해 ‘북조선 괴뢰정권이 전 조선에 걸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미측 반응을 게재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풀이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미소공위 결렬이 가시화하면서 사설을 통해 반소·반공 노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한민당은 미소공위 결렬을 맞아 그에 대한 책임을 좌익과 소련 측에 돌리면서 반공주의를 정견으로 굳혔다(최선웅, 2013, 317쪽). 한민당은 이승만의 조기총선거론도, 김구의 통일정부수립론도 지지하지 않았다. 일단 유엔감시 아래 총선거를 시도한 뒤, 실패했을 경우 다시 유엔결의에 따라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310쪽). <동아일보>는 이 같은 한민당의 노선⁹⁶⁾을 충실하게 반영했고, 이 신문의 일련의 사설도 한민당의 노선과 맥을 같이했

95) 정용욱은 1947년 9월 중순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남한단정수립을 정책으로 최종확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015, 73-74쪽). 또 그는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 웨드마이어가 최소한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의 수중에서 떼어낼 해결책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80쪽).

96) 인촌 김성수 서울 계동 고택 소장 장덕수의 미출간 원고에는 1947년 8월말 한민당의 정세판단과 앞으로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선정세에 관한 간략한 진술서’란 제목의 이 원고는 8월 26일 브라운의 성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는 8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⁷⁾.

제6장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전개를 둘러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알아봄으로써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정치과정에서 언론매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했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정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신문사 자체기사 569건과 통신기사 100건 등 모두 669건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 뒤 관련 지면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1. 언론의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두 신문은 미소공위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가?

두 신문의 미소공위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347건, <동아일보> 322건으로, 신문당 하루 평균 2.2건의 기사를 실어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기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배치하는 톱기사가 관련 기사의 20.9%를 차지해 다섯 번에 한번은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미소공위가 난항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기사를 크게 게재해 <동아일보>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미소공위가 서울에서 열렸음에도 해외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국내 통신을 통해 받아 게재한 기사가 15%를 차지해 간접취재 보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취재 보도비중이 크다는 것은 취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사를 많이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P와 UP통신사의 서울주재 특파원 기사가 전체 통신기사의 절반을 넘었고, 이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각각의 통신사 기사 비중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 신문은 미소공위 재개 전후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통신 기사를 적극 활용했고, 공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신문의 통신기사 활용은 모두 줄었다. 그러나 미소갈등이 노골화하면서 서로 성명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할 때는 공위 취재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에 머물렀던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 웨드마이어에게 김성수 명의로 영역해 건넨 의견서한의 초안일 가능성이 높다. 김성수나 장덕수가 웨드마이어에게 구두로 설명한 정세 판단자료일 수도 있다.

97) 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나중에는 김구로부터 ‘한민당의 후설(喉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원 접근이 보다 유리한 통신사 특과원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전체적인 기사건수가 적은데도 통신 기사를 더 많이 게재했고, 특히 공위 재개 전후로 통신 기사 활용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공위 재개 여부나 해외동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두 신문 모두 독자적인 취재를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했고,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는 발표기사를 많이 실었다. 공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일보>도 취재기사를 크게 늘렸다가 미소가 성명전을 벌이자 취재기사보다도 발표기사를 더 많이 게재했다. 미소공위 발표가 늘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보도했다고 해석된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성명전 속에서도 취재 기사를 훨씬 많이 게재해 공위에 관한 활발하게 취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소공위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기사는 <조선일보>가 공위 재개 전후로 많이 실었으나 공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동아일보>가 의견을 다소 더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신문 모두 내부 의견기사보다 외부 의견기사를 많이 실었다. 내부 의견 기사 중 <동아일보>가 사실의 비중이 높았고 <조선일보>는 사내 필진의 해설분석이 높았다. <조선일보>는 미소공위 재개와 성공을 기대하면서, <동아일보>는 미소공위의 결렬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2. 두 신문의 정파적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1. 두 신문이 행위주체⁹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취재기사와 발표기사를 신는 빈도에서 행위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기사 381건을 보면 브라운 미국측 수석대표와 소련측 대표단을 각각 취재한 기사의 수는 두 신문이 같았으나 브라운 대표를 취재원으로 한 기사는 소련측 대표단을 취재한 기사의 4배 이상일 정도로 많았다. 브라운을 비롯해 미국측 대표단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해석된다. <동아일보>의 경우 취재원으로 미소공위와 함께 미국측 대표단을 많이 등장시켰으나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비교해 미소공위 자체를 월등히 많이 취재했다.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미국측대표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신문은 공위 개최 전후로 공위 기사를 적게 취재했으나 미소공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자 활발하게 취재했고, 공위가 뼈격거리자 취재활동이 더욱 늘어났다. 대

98) 행위주체란 미소공위 및 미군정, 각 정치세력이 해당된다. 다시 설명하자면 미소공위와 관련해 활동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체로 브라운 대표에 대한 취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두 신문은 공위의 순조로운 조짐이 나타날 때 공보부를 통한 미소공위나 브라운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다. 이 때에는 비교적 공보부를 통해서도 공위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 기간 공위 취재가 <동아일보>는 다소 늘어났고 <조선일보>는 조금 많이 증가했다.

<동아일보>는 ‘우익진영’으로 통칭되는 우익진영 전반 및 역시 우익인 한민당, 이승만, 임시정부수립협의회(임협), 한독당을 취재한 기사가 많았다. 취재원을 많이 활용한 순서대로 보면 이 신문은 이들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가 모두 상위 10위에 속했으나 <조선일보>는 상위 10위 안에 이승만과 한독당을 취재한 기사만이 들어있었다. <조선일보>는 중간노선의 김규식을 우익인 이승만과 한독당보다도 더 많이 취재했다.

<동아일보>는 좌익진영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취재한 기사를 <조선일보>의 절반정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민전산하 남로당과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을 취재한 기사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었으나 <동아일보>는 상위 10위 안에 남로당이나 전평을 취재한 기사가 없었다.

<동아일보>는 공위 개최 전후로 우익진영 및 한독당, 한민당, 이승만, 임협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으나 공위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때 취재를 적게 하다가 공위의 실패가 가시화하자 취재건수를 더욱 줄였다. 이 신문은 민전에 대해서는 공위 개최 전후로 많이 취재하다가 공위가 진행되면서 다소 줄였다. <조선일보>는 공위 개최 전후로 민전과 김규식을 취재한 기사가 많았으나 공위가 빠져거리자 민전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중간노선의 김규식이나 좌익진영의 민전을 제외하면 우익인 이승만이나 한독당, 좌익인 남로당이나 전평도 골고루 취재했다.

발표기사 247건을 보면 <동아일보>는 브라운 미국측 수석대표와 스티코프 소련측 수석대표의 발표를 똑같은 수로 실었으나 <조선일보>는 브라운보다 스티코프의 발표를 더 많이 게재했다. 특히 두 신문은 공위의 실패가능성이 농후해지고 미소가 성명전을 펼치면서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를 집중적으로 실었으나 <조선일보>가 그 정도가 심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발표를 많이 다룬 순서를 보면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발표를 가장 많이 실었고 그 다음으로 임협의 발표를 많이 게재했다. 이승만과 김규식의 발표는 똑같이 그 다음 순서로 많이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한민당과 남로당, 민전과 중간노선의 미소공동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공협) 발표를 비슷한 수로 게재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취재기사 381건과 발표기사 247건의 크기, 즉 비중을 정할 때도 미소공위 및 미군정,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해 크기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소공위의 순조로운 조짐이 나타나면서 두 신문이 모두 공위 취재 비중을 높였는데,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더 공위 취재 기사를 비중 있게 게재했다. 미소공위가 파국으로 치닫자 두 신문 모두 더욱 공위 취재 기사를 높은 비중으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소대표단은 협의대상 문제로 평행선을 달렸고 이들의 갈등은 두 신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두 신문 모두 이 기간 브라운과 스티코프의 발표 기사를 취재 기사와 마찬가지로 비중을 높여 게재했다. 이들이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기 때문이고 신문들은 발표내용에 주목해 기사를 돋보이게 제작했다.

두 신문은 정당 및 사회단체 취재원과 발표주체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미소공위 재개 전후와 순조로운 진행과정에서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 진영의 기사를 자주, 또 비중 있게 다룬데 반해 <조선일보>는 이승만을 제외하면 거의 게재하지 않았고 비중도 마찬가지로였다. <조선일보>가 공위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좌익진영에 대해 <동아일보>보다는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특히 민전에 대해서는 성명전속에서도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가 더 많이 더 크게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고 그들의 발표를 비중있게 반영했다. 중간노선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김규식 발표 기사를, <조선일보>가 김규식 취재 기사와 공협 발표 기사를 비슷한 크기로 게재했다. 또 <동아일보>는 중도좌익의 근민당이나 여운형에 대한 기사를 <조선일보>보다 적게, 작은 비중으로 게재했다.

전반적으로 두 신문은 기사의 게재빈도나 비중을 정할 때도 미소공위 및 미군정,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해 차이를 보였는데, <동아일보>가 차이가 두드러졌던데 반해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다.

2-2. 두 신문이 행위주체에 대해 가진 태도는 어떠한가?

공위재개 전후 <동아일보>는 소련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소련대표단을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미국대표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인 자유의사표시만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소련대표단뿐 아니라 미소공위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위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일보>는 소련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했고 <조선일보>는 공위에 더욱 호응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두 신문 모두 공위를 지지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평양회의 이후 <동아일보>가 소련에 대해 다시 비판적으로 변했고 갈등의 원인을 소련 측에 전가하려는 조짐을 나타난데 반해 <조선일보>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확인됐다. 미소가 성명전을 벌이면서 <동아일보>는 소련과 소련대표단에 대해서는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했고 미국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다. 이

에 반해 <조선일보>는 소련과 소련대표단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으나 미국측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춰 중립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대표단 철수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조선일보>는 공위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익진영의 공위 참가 전후 <동아일보>가 우익진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우익진영의 분열을 미화하면서 한민당의 공위 참가 당위성을 강조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우익진영의 움직임에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보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익진영과 달리 공위를 적극 지지하는 좌익진영과 중간파에 대해 두 신문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으나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보다 좀 더 중간파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위 성공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동아일보>가 반탁세력까지 포함한 우익진영을 지지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공위 참가파에 대해서만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때에도 <동아일보>는 좌익진영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고, 중간파에 대해서는 비판을 통해 견제하려는 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좌익진영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등 <동아일보>보다는 균형적 태도를 보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 중간파에 대해 다른 진영에 대해서보다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평양회의 이후 미소대표단이 협의대상 문제로 갈등을 빚자 <동아일보>는 우익진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조선일보>는 중간파에 적극 호응하는 태도를 나타냈다고 분석된다. <동아일보>가 좌익을 공격하고 중간파를 비난한데 반해 <조선일보>는 우익진영을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두 신문의 태도도 이전보다 간극이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문제 3. 두 신문의 발행주체 성격은 보도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동아일보>의 발행주체는 ‘우국형’ 우익세력중심의 하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세력의 대변지로서의 성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 신문은 미군정 및 미대표단, 우익진영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해 현실추수적인 성격을 나타냈다.

미소가 압도적인 규정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신문은 미국과 우익진영을 선택한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형성을 위해 선전기능을 자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정파성 때문에 정보제공과 비판기능이란 점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조선일보>의 발행주체는 우국지사적 전통 안에 있었으나 특정세력의 구심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태도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신문은 특정 세력을 지지하지 않아 <동아일보>보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제공했다.

정파적 성격의 신문이 등장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이 신문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 비교적 객관보도와 '불편부당'의 사시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문은 <동아일보>와 달리 어느 정도 정파성에서 탈피했으나 미국의 한반도문제 유엔상정과 소련의 철군제의 이후에도 미소공위가 가능하리라고 주장하는 현실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2. 논의 및 결론

남한 단정 수립 과정의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미소공위 결렬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돼왔다. 그러나 그 과정의 보도에서 보여준 신문들의 정파성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의 대변지'라는 설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정파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다. 혼란기 신문의 정파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이들 신문이 해방 후 막 발간하기 시작한 신문들과는 다르리라는 기대는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복간 주체세력들이 일제시기 민족지를 표방한 신문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기대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신문의 정파성의 양태와 성격을 살피면서 두 신문의 발행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해방 후 우익진영은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의 지원 아래 좌익진영과 대결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성공했다. 자유주의를 언론에 적용하면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표출돼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 수립과정에서 <동아일보>는 다양한 견해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우익진영에 경도돼 정파성을 드러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기사날조를 통한 '왜곡'보도는 없었지만 사실보도를 통한 선전활동과 정파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동아일보>의 정파성은 좌익언론이 우세한 상황이고 소련식 민주주의와의 대결이란 측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소련식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의미하며 공산주의에서는 언론이 선전도구로 이용돼 왔다. 김영욱(2011)이 선전활동을 이용해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가 상정한 제도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 또 리프만(Lippmann, 1922)이 제도를 따르고 수호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보다 나은 제도를 전제로 했을 것이다.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소련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와 관점이 제공되는 미국식 민주주의일 것이다.

<동아일보>의 정파성이 우익진영이 불리한 상황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필요에 따라 언론기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으나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거나 각 세력에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따라서 우익진영이 규정한대로의 자유였고, 언론자유는 우익진영의 이해를 관철하고 난 다음의 문제였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다양한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 어느 정도 정파성에서 벗어났다. <조선일보>는 특정세력의 구심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태도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또 <조선일보>의 중립성에는 불편부당의 사시가 작용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자들이 드나들었던 덕분이기도 하다. 중립성이나 객관주의는 특정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여론형성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중립성은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념의 균형이 깨지거나 권력투쟁이 심해질 때 무너질 정도로 취약했다. 따라서 정작 여론을 이끌어야 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리프만의 말처럼 보다 나은 제도를 수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했다.

본 연구는 해방 후 일정기간 정부수립 보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두 신문의 태도변화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혼란기 언론의 역할과 한계를 규명해 그 함의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수립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아일보>는 발행주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은 세력이며 이 과정에서 남한만이라도 독립정부를 세워야한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다양한 이념과 견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남북·좌우의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인 독립정부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두 신문은 ‘특정세력의 대변자’로서 정파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독립정부 수립과정에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파성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정파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파적 입장을 견지하며 보도대상 사실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파성은 정부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신문의 정파성과 일면 닮은 점이 있지만 지금이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자격에 맞는 신문을 갖는다(A Society Gets the journalism it Deserves)’는 속담이 있다. 영국의 뉴미디어 전문가 빌 톰슨은 이 속담을 인용하며 언론생태계에서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내기 전에 그럴 필요가 있는지

살피라고 주문했다. 그는 매체형태나 기술에 대해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떤 언론을 가져야하는지 고민하고 구현해야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특정기간 두 신문매체에 한정해서 보도태도와 언론의 성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언론사 분야이기 때문에 역사연구이자 언론연구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 매체를 분석해 언론사를 연구할 때 역사학자들이 마주치는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군정기 미국측 자료를 연구에 활용한 정용욱(2001, 158쪽)은 사료비판과 해석에서부터 현대사연구자들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작성자가 얘기해줄기를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반영한다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언론사연구자가 분석한 두 신문도 비판과 해석이 필요한 사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학자의 6·25일기 『역사 앞에서』로 유명한 김성철은 일기를 신문기사에 비유하면서 늘 왜곡되지 않도록 반성한다고 기록했다. 김성철은 1946년 4월 22일 일기에서 “신문기사의 허위보도라고 하면 반드시 어떠한 사실을 날조한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의 연속 중에서 일부분을 고의로 묵살해버린다거나 그와 반대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독자의 판단을 어긋나게 함에 있어서 허위보도와 조금도 다를 것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1993, 47쪽).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을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한 역사연구지 편집자는 역사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신문을 주된 사료로 이용하지만, 그 사료의 본질을 꿰뚫는 작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장신, 2006, 242쪽). 장신은 역사학자로서 연구의 주된 자료로 대검찰청에 소장되어 있던 『사상에 관한 정보철』의 <동아일보> 관련문서와 <동아일보>의 『주식대장』, 『취체역회결의록』 등을 활용했다. 사료로서의 신문을 제대로 보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다.

정부 수립과정 보도태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해방직후 두 신문의 선동성과 정파성은 차이가 있었다. 선동성과 정파성의 양태와 성격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는 했지만 언론사연구자이기 때문에 사료비판에 한계가 있었을 것임이 사실이다.

연구자의 직업인 기자로서 신문제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 연구에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발표에 앞서 보도된 <동아일보>의 ‘소련의 신탁통치 주장’ 보도가 ‘반소·반공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적 ‘왜곡’보도가 아님을 설명해냈고 이 연구에 도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연구가 두 신문에 국한돼 전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인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제시기를 비롯해 전체 신문 중 <동아일보>만이 전체 기사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기사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의 정확성에 기여했으리라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다. 또 창간이후 <동아일보>의 중요성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신문들보다 훨씬 많이 연구자료와 연구성과가 축적돼 있다는 점도 연구의 충실성에 기여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두 신문뿐 아니라 다른 신문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정부수립과정의 보도태도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명구(2013). 훈민과 계몽 :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저스티스』, 통권 제 134-2호, 514-533.
- 강정인·서희경(2013). 김성수와 한국민주당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103-281.
- 강형철(1999).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제26권.
- 계초전기간행회(1980). 『방응모전』. 조선일보사.
-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90).『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전기』. 동아일보사.
- 곽복산(1955).『신문학개론』. 신문학원출판부.
- 구대열 (1995).『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역사비평사.
- 권오기(1985).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 권영기(1999).『격랑 60년-방일영과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 권희영(2013).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의 성장. 『한국현대사연구』,1권1호,107-128.
- 김기협(2011).『해방일기 2』. 너머북스.
- 김민환(2001).『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 김복수(1991).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한국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김복수(2006). 미군정 언론정책과 언론통제. 『한국사론44:광복과 한국 현대 언론의 형성』(3-48쪽). 국사편찬위원회.
- 김성철(1993).『역사앞에서』. 창작과비평사.
- 김세은(2006).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한국언론학보』, 50권 5호,55-79.
- 김영욱(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연구서 2002-10).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영욱(2011). 선전, 보수세력 그리고 언론: 선전전략으로서 ‘잃어버린 10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3권, 100-120.
- 김영희(2000).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 경향. 『한국언론학보』, 제44권 4호, 32-60.
- 김영희(2009).『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용직(2013).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의 성장.『한국현대사연구』,1권1호,129-164.
- 김학준(2008).『북한의 역사 제2권-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1946년 1월~1948년 9월)』. 서울대출판부.
- 김해식(1993). 1960년대 이후 한국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국가, 자본, 언론자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남시욱(2005). 『한국보수세력 연구』. 나남출판.

- 남시욱(2009). 『한국 진보세력 연구』.나남출판.
- 남시욱(2013). 편집과 경영의 바람직한 관계. 박재영 외, 『한국 언론의 품격』. 나남.
- 도진순(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출판부.
- 동아일보사(1981). 『동아일보사설색인(8):1945-1955』. 동아일보사.
- 문계준(1986). 미군정기의 한국언론...48인의 체험증언(64-65). 『신문과방송』, 통권 188호, 20-69.
- 박권상(1987).미군정하의 한국 언론에 관한 연구(상), 『신문과 방송』,통권 202호, 63-76.
- 박권상(1988). 해방정국에서의 언론.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37-68쪽). 동아일보사.
- 박계옥(1973). 미군정하의 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승관, 장경섭(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제14권 3호, 81-111.
- 박용규(2007).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35-500.
- 박용상(2013). 『언론의 자유』. 박영사.
- 박찬표(200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방정배(1985). 『자주적 말길 이론: 언론 구조변동의 변증법』. 나남.
- 방정배·최윤희(1989). 『여론과 정치 설득』. 나남.
- 백남진(1947). 통신사의 사명. 『신문평론』, 2호, 36-37.
- 서중석(2002).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역사비평사.
- 설의식(1947). 신문의 과당성. 『협동』,통권 5호, 24-28.
- 송건호(1984).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강만길 외 편. 『한국사회연구 2집』(513-570). 한길사
- 신양휴 외(1966).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신문의 태도분석. 『신문연구소학보』, 제3집, 13-68.
- 심지연(1989). 『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청계연구소.
- 우병동(2007). 뉴스보도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3호, 49-66.
- 유선영(1996). 객관주의의 형식화 과정. 임상원·최현철 편. 『한국사회와 언론』(413-444쪽). 나남출판.
- 유진오(1977). 『양호기(養虎記)』. 고대출판부.
- 윤덕영(2011). 송진우·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지지론. 『한국사학보』, 42권 2호, 247-283.
- 윤영철(2003).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7권, 48-81.

- 이동욱(1998).『방응모』. 도서출판 지구촌.
- 이문호(2012).『뉴스통신사 24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완중(2010). 스탈린 체제와 상징: 선전-선동의 아이콘.『아시아문화연구』, 19집,185-217.
- 이재경(2004). 신문과 방송 40주년 기념 세미나 : 제1주제-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 방송』, 4월호, 240-246.
- 이준웅, 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통신연구』, 제67권, 9-44.
- 이해창(1962). 『독일신문학연구』. 이대출판부.
- 이행선(2013). 해방과 여론조사의 출현, 여론정치 시대: 한국여론협회,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통권28호(여름), 226-270.
- 장신(2006).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2006.5, 242-272.
- 정대철(1976). 미군정의 언론정책/ 과도기 언론사의 고찰. 『신문과 방송』, 86-90.
- 정병준(2001).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정용욱(2001). 한국민족주의와 미국식 민주주의-해방직후의 정치적 대립과 미국 대한정책의 성격규명. 『내일을 여는 역사』 4, 148-158.
- 정용욱(2003a).『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중심.
- 정용욱(2003b).『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출판부.
- 정용욱(2013). 웨드마이어전상서-네 지식인이 논한 1947년 8월의 시국과 그 타개책. 『한국문화』 64, 3-37.
- 정용욱(2015). 1947년 웨드마이어 특사의 방한, 단정안 현실화의 획기. 『역사비평』 2015. 8, 70-88.
- 정진석(1983).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 정진석(1990). 『한국언론사』.나남.
- 정진석(2001).『언론과 한국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제이콥스(1947). 신문·자유조선의 소리. 『신문평론』, 2호, 26-27.
- 조규하·이경문·강성재 (1972). 『남북의 대화』. 한얼문고.
- 조선일보80년사사편찬실(2000). 『조선일보80년사(상)』. 조선일보사.
- 조선일보90년사사편찬실(2010). 『조선일보90년사(상)』. 조선일보사.
- 조선일보사료연구실(2004).『조선일보사람들-광복이후편』. 랜덤하우스중앙.
- 중앙일보특별취재반(1993).『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중앙일보사.
- 차배근(1986).『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 나남.
- 차배근 (2014). 『미국신문발달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상철 (1991).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차재영(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제5호, 29-52.

최선웅(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박사학위논문.

최진호·한동섭(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개입. 『언론과학연구』, 12(2), 534-571.

최준(1947). 당파신문의 운명. 『신문평론』, 2호, 62-63.

최준(1960). 『한국신문사』, 일조각

최준(1965). 한국신문해방20년사(1). 『신문연구』, 가을.

최준(1966). 한국신문해방20년사(2). 『신문연구』, 봄.

추광영(1983).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 『언론정보연구』, 20호, 95-103.

합동통신사사편집위원회(1975). 『합동통신 30년』. 합동통신사.

홍성철(2015). 한국정치보도의 문제점: 갈등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야. 『관훈저널』, 통권 137호, 31-37.

홍일해(1982). 『한국통신사사』. 일지사.

2. 해외문헌

Brian, Denis (2001). *Pulitzer: A Life*. John Wiley&Sons. 김승욱 역(2002). 『풀리처』. 서울: 작가정신.

Herman, E. S. &Chomsky, N.(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정경옥 역(2006). 『여론조작』. 서울: 에코리브르.

Cumings, B.(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주환 역(1986). 『한국전쟁의 기원 상·하』. 서울:청사.

Entman, R.(2004). *Projections of Power : framing news,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nkeles, Alex(1950).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a study in mass persua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Lippmann, W.(1932). *Public opinion*. London: Allen&Unwin(first published 1922). 이충훈 역(2012). 『여론』. 까치글방.

Matray, James Irving(1985). *The Reluctant Crusade*. University of Hawaii Press. 구대열 역(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서울:을유문화사.

McQuail, D.(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5th ed.)*. New York: Longman. 양승찬·강미은·도준호 역(2008). 『메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Schudson, M.(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New York: Basic Books, Inc.

Shaw,D.(1967). News bias and the telegraph: A study of historical change. *Journalism Quarterly*, 38(spring).

Stephens,M (2007). *A History of News(3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이광재·이인희 역(2010).『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Tuchman,G.(1978).*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ss Press.

US delegation on US-USSR Joint Commission(1947). *Report of US delegation on US-USSR Joint Commission*. 신복룡 편역(1992). 미소공동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한국분단보고서(하)』(203-262쪽). 풀빛.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403-424.

석원화·심민화·패민강 편.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김승일 역 (2011). 역사공간.

3. 신문류

뉴욕타임스, 경향신문, 노력인민, 독립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보(申報), 한성일보

Abstract

A study on the reporting styles and attitudes of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ilbo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OK

Jin-Kyeong Kim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ilbo, newspapers that were both discontinued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t period, were the core newspapers that actively published articles following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Both newspapers carried the traditional patriotic spirit, but their main agents of publication we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The Dong-a Ilbo, the subject of publication was centered on right wing groups, while, The Chosunilbo, a great man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had gathered, and thus could not represent one specific group only.

It is often considered that the nature of the publisher affects the manner in which the news is delivered.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sher to ignor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ess; especially, during the process in which a regime is established. Hence, this paper studies how the two newspapers played the role of press by analyzing the reports and articles on the 2nd US-USSR joint commission (which is considered the first step to the establishment of ROK).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wo newspapers had reported actively on the US-USSR joint commission, having considered it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nified government within Korea. Even with the commissions having been held in Seoul, both newspapers had made great efforts to be the source of information: even if it meant having to publish articles gathered from international news agencies through domestic networks.

Around the time the commission was being held, both newspapers did not very often publish articles about the US-USSR joint commission, however, as the talks seemed to be making progress, and with seemingly higher chances of settlement,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ilbo began to actively report on the event. Both newspapers published their articles based on their own interviews and studies. As the talks intensified, more official statements were being made by the two countries. While The Dong-a Ilbo focused their articles towards the actual announcements, The Chosunilbo continued to publish articles based on their interviews.

Because of a number of right wing activists that were against the Joint Commission, The Dong-a Ilbo printed fewer cover articles on the commission than The Chosunilbo had, but they had more stories published on the right-wing party. The Chosunilbo, however, not only covered opinions on the rightists and leftists, but also left room to report on the neutral partie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mmissions, there were moments that The Dong-a Ilbo had amicable things to write about the Soviet Union, however, when the Soviets made statements against right-wing groups, they began to actively reproach the Soviets. The Dong-a Ilbo remained consistent with their criticisms and attacks against the left-wing parties and the neutral parties. The Chosunilbo on the other hand, in effort to help make the Joint Commission more successful, they expressed their support to the Soviets, the leftists, rightists, and also to the neutrals.

However, as conflicts arose between the Soviet and the US, and as the commissions seemed like they were coming to a catastrophic ending, The Dong-a Ilbo began to explicitly support the US position, and The Chosunilbo, in the process of trying to remain neutral, lost their status of equilibrium.

The Dong-a Ilbo articles covered a great deal on US ideology of freedom of press and democracy, while The Chosunilbo, tried to balance out their news by trying to cover both the stances of the Soviet and the U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ng-a Ilbo had stuck with its original ideology of democracy, and had made an effort to form the public opinio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it. On the contrary, The Chosunilbo faithfully played the 'information provider' role of the media by maintaining neutral as possibl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Although, The Dong-a Ilbo had not distorted the truth by fabricating articles, as some have argued, they were so immersed in the right wing ideologies of free democracy that it was evident that they were geared towards a particular party. The Chosunilbo, on the other hand, was able to remain somewhat neutral in character as they spoke on behalf of man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however, because they were unable to lead public opinion, The Chosunilbo could not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liberal democracy within Korea.

Keywords : reporting attitude, journalism, democracy, The Dong-a Ilbo, The Chosunilbo, partisanship, establishment of ROK, US-USSR joint commission

Student Number : 2010-20142